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

鄭仁敎 外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政策研究 03-27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鄭仁教 外

□ 보고서 장별 연구진

	연구책임자	연구진
제1장	정인교 (KIEP)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2장	정인교 (KIEP)	권영민(한국경제연구원), 안세영(서강대학교), 조용균(외교안보연구원), 최태욱(한동대학교), 조현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배(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은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3장	유관영 (KIET)	송기재(한국수출입은행), 김화섭(산업연구원), 김학기(산업연구원), 주동주(산업연구원), 사공목(산업연구원)
제4장	어명근 (KREI)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주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5장	주문배 (KMI)	정갑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충선(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6장	고일동 (KDI)	고일동(한국개발연구원), 조병구(한국개발연구원), 이재호(한국개발연구원), 이진면(산업연구원), 이홍구(건국대학교)
제7장	강문성 (KIEP)	송유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미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근(서울대학교)
제8장	양두용 (KIEP)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기(한남대학교), 박대근(한양대학교), 신성환(홍익대학교), 오규택(중앙대학교), 이준엽(한남대학교), 이형근(대외경제정책연구원), Eiji Ogawa(일본 一橋大學)
제9장	왕윤중 (KIEP)	신관호(고려대학교), 양두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중화(고려대학교)

발간사

세계경제의 무역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의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FTA 체결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기에 모색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통상대국의 꿈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저희 경제사회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우리 경제 운영에 중·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한·중·일 FTA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초부터 이 연구에 필요한 연구재원을 확보하고, 2002년 하반기에 이 연구를 주관할 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말 중국의 주룽지 당시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저희 연구회의 연구주제 선정이 시의성이나 내용 면에서 바람직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매년 10권 내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구 첫해인 2003년에는 한·중·일 FTA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2004년에는 각 산업 및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며, 연구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는 한·중·일 FTA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2003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 첫해에는 9권의 보고서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참여 연구기관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연구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협동연구에 참여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진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사회연구회의 玉台煥 사무국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鄭仁敎 FTA 연구팀장은 광범위한 연구분야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협동연구의 보고서가 한·중·일 FTA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방향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文石南

2003년도 한·중·일 FTA 협동연구 보고서 제목

보고서 시리즈 번호	보고서 제목	집 필 책임기관
03-01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2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3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산업연구원
03-04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03-05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03-06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 연구원
03-07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8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3-09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서 언

최근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간에 자유화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FTA의 체결이 확산·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자 수출대상국인 일본 및 중국과도 꾸준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사회연구회는 한·중·일 FTA 협동연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3년에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과 협동으로 8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8개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을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1권의 보고서로 엮은 것입니다.

본 보고서 작성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진 외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1년 동안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8개 보고서를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한·중·일 FTA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금년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발간한 보고서가 이러한 논의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4년 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중·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통상환경의 변화를 논의하고, 한·중·일 경제관계, 3국간 FTA 추진 여건 및 3국간 FTA 추진당위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을 고찰한 후 3국간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한·일 FTA와 한·중·일 FTA의 관계설정(sequencing), 한·중·일 FTA 추진 이전 선행과제, 한·중·일 FTA에 따르는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3국간 제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한·중·일간에는 지리적 근접성을 매개로 한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무역, 직접투자 등 산업협력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각 일본과 한국을 캐치업하는 방식의 소위 기러기형 산업발전전략(flying geese model)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한·중·일간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서 한·중·일 3국간의 산업내무역이 증가하고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과 제5장은 각각 농업과 수산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농업은 토지절약적 영세 소농구조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비율은 상이하다. 토지생산성은 한국, 노동생산성은 일본, 그리고 자본생산성은 중국이 가장 높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3

국의 농업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량을 수산물 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수산물 최대 생산국으로서, 그리고 태국과 세계 제1, 2위를 다투는 수산물 수출강국으로 한국과 일본에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에서는 한·중·일 3국간의 교역관계를 분석하고, 3국간 FTA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며, 그 다음이 중국이고 일본은 ASEAN과 NIES를 포함하는 광역화된 지역통합에 높은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7장은 한·중·일 FTA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무역규범분야를 분석하였는데, 원산지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무역규범 운용현황을 비교하고 WTO의 관련 규범 및 여타 FTA에서의 규범을 비교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8장은 한·중·일 FTA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 저자들은 지역무역협정에서 환율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일이 FTA를 체결할 경우 각 국가간의 쌍무적 무역량이 증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FTA와 더불어 이 국가들이 현재와 같은 상호간에 변동하는 환율제도가 아닌 신뢰성 있는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FTA를 통한 무역창출 효과가 배가되면서 각 국가의 후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차 례

발간사.....	5
서언.....	7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21
1. 협동연구의 개요.....	21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22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34
1. 서론.....	34
2.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36
가.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36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38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41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의 의미.....	46
3.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50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50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53
다. 중·일간 패권경쟁	54
라. 남북한 대결구도	55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56
4.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57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58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59
다. 한·중·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60
라. FTA 홍보 강화	61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62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63
5. 결론 및 시사점	65
참고문헌	67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8
2. 현황	69
가. 개관	69
나. 섬유	72
다. 일반기계	73
라. 자동차	74
마. 전자	76
바. 철강	77
사. 석유화학	78
3. 이슈 및 문제점	79
가. 섬유	79
나. 일반기계	81

다. 자동차	82
라. 전자	83
마. 철강	85
바. 석유화학	86
4. 한·중·일 FTA하의 정책방향	86
가. 섬유	86
나. 일반기계	87
다. 자동차	89
라. 전자	90
마. 철강	91
바. 석유화학	92
5. 결론 및 시사점	93
참고문헌	97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1
가. 연구의 배경	101
나. 연구목적	102
다. 연구범위와 방법	103
2. 한·중·일 3국의 농업구조	103
가. 농업 개황	103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105
다. 농업 생산성 비교	108
라. 농업 생산물 구성	110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112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112
나. 농산물가격	113

다. 농산물 소비	116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120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120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122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126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127
5. 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131
6. 결론 및 시사점	136
참고문헌	139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141
2. 한·중·일 수산업 현황	142
가. 한·중·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142
나. 수산물 생산구조	143
다. 수산물 교역구조	146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148
3.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151
4. 한·중·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155
5. 결론 및 시사점	157
참고문헌	159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중·일의 입장	161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164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	164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165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167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중·일간의 교역 관계	170
가. 중국경제의 전망	170
나. 직접투자 유치	171
다. 한·중·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173
라. 수출구조 방정식	176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177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177
나. 역외 의존구조	178
다.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79
참고문헌	181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 18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3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185
가. 원산지규정	185
나. 반덤핑	186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188
라. 경쟁정책	191
마. 지적재산권	193
3. 한·중·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195
가. 원산지규정	195
나. 반덤핑	197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199
라. 경쟁정책	201
마. 지적재산권	202
4. 분야별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204
가. 원산지규정	204

나. 반덤핑	206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207
라. 경쟁정책	209
마. 지적재산권	211
5. 결론 및 시사점	213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213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214
참고문헌	216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7
2. 한·중·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220
가. 은행	225
나. 증권	226
다. 보험	227
라. 투자신탁업	228
3. 한·중·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231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32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233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238
4. 결론 및 시사점	241
참고문헌	245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246
1. 서론	246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247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252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255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60
6. 결론 및 시사점	274
참고문헌	275
Executive Summary	277

표 차례

<표 2-1>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과정	34
<표 2-2>	세계경제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2002년 기준) ...	36
<표 2-3>	한·중·일, EU, NAFTA의 직접투자규모 추이	37
<표 2-4>	한·중·일 3국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38
<표 2-5>	한·중·일 FTA의 GDP에 대한 영향	39
<표 2-6>	한·중·일 FTA의 산업별 영향	39
<표 2-7>	한·중·일 FTA의 3국간 무역에 대한 영향	40
<표 2-8>	한·중·일 FTA하에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	40
<표 2-9>	한국과 일본의 자금률 추이	51
<표 2-10>	한·중·일의 경제규모 비교	53
<표 3-1>	한·중·일 제조업 구조의 비교	70
<표 3-2>	한·중·일 기술수준별 산업구조의 비교	71
<표 3-3>	한·중·일의 산업별 주요 비교지표	95
<표 3-4>	한·중·일 산업별 대응과제 및 방향	95
<표 4-1>	한·중·일 주요경제 및 농업지표(2001년)	105
<표 4-2>	농업노동 투입 현황	106
<표 4-3>	농경지 현황	107
<표 4-4>	농업 자본 투입 현황	108
<표 4-5>	농업 생산성(농가경제지표) 현황	109
<표 4-6>	도시와 농촌주민 1인당 식품 소비량 비교	118

<표 4-7>	한·중·일 농산물 수출비중	121
<표 4-8>	한·중·일 농산물 역내 수출비중	122
<표 4-9>	한·중·일 농산물 무역결합도	123
<표 4-10>	한·중·일 농산물 산업내무역지수	125
<표 4-11>	한·중·일 농산물의 수출유사성 지수	127
<표 4-12>	한·중·일 농산물 RCA지수(1997~2001년)	130
<표 4-13>	동북아 역내 양국간 보완 및 경합 품목	131
<표 5-1>	한·중·일 수산업 현황 비교	144
<표 5-2>	한·중·일 주요 수산물 생산현황	145
<표 5-3>	한·중·일 수산업 수출입 비교	147
<표 5-4>	한·중·일 관세 및 비관세	149
<표 5-5>	한·중·일 HS 2단위 수산물 실행관세 비교표	152
<표 5-6>	한·중·일 3국의 HS 03류 실행관세 구조 비교	153
<표 5-7>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품목	154
<표 7-1>	지역경제통합체에서의 반덤핑제도 철폐 여부	188
<표 7-2>	주요 FTA 또는 CU별 보조금 관련 규정	190
<표 7-3>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현황	199
<표 7-4>	무역규범별 추진 제안	214
<표 8-1>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231
<표 8-2>	국내 외국인 주식투자 현황(2003년 8월)	239
<표 8-3>	일본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240
<표 8-4>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240
<표 9-1>	공적분 추정 결과: 한국	256
<표 9-2>	공적분 추정 결과: 일본	257
<표 9-3>	공적분 추정결과: 중국	258
<표 9-4>	환율제도와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72

그림 차례

<그림 2-1> 한·중·일의 수출유사성지수(ESI)의 변화	52
<그림 4-1> 한국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110
<그림 4-2> 중국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111
<그림 4-3> 일본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111
<그림 4-4> 한·중·일 농촌노임 변화 추이	112
<그림 4-5> 한국의 농가판매가격지수	113
<그림 4-6>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매가격지수	114
<그림 4-7> 일본의 쌀 가격지수(2000년=100)	115
<그림 4-8> 일본의 주요 품목별 과수가격지수(2000년=100)	116
<그림 4-9> 한국의 1인당 양곡 소비량	117
<그림 4-10> 한국의 채소, 과일 및 육류 1인당 소비량	117
<그림 4-11> 중국의 1인당 식량 소비량	118
<그림 4-12> 일본의 농축산물 1인당 소비량	119
<그림 8-1> 한·중·일 은행업 경쟁력지수	226
<그림 8-2> 한·중·일 증권업 경쟁력지수	227
<그림 8-3> 한·중·일 생명보험업 경쟁력지수	228
<그림 8-4> 한·중·일 손해보험업 경쟁력지수	228
<그림 8-5> 한·중·일 투신업 경쟁력지수	229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오늘날의 세계 통상환경은 글로벌화 추세와 지역화 추세가 공존하는 가운데, 심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각국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의 합의 도출 실패로 다자무역체제가 다소 불안정한 가운데 지역 혹은 양자 차원의 자유화 노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의에 뒤져 있던 동북아시아의 국가들도 최근 FTA 추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국간 FTA 논의는 그 자체가 세계의 관심을 끌 만큼 정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과제는 이 FTA에 대한 정치·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중·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예상효과를 정밀 검토하고, 3국간 FTA 체결이 국제질서, 특히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검토하였다. 비록 경제적으로 한·중·일 FTA가 타당하더라도, 3국은 경제적 격차, 역사·정치·사회 등에서의 이질적 요소로 인해 추진상의 애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3국의 지역주의 정책, 대외통상환경의 발전 추이, 국제정치외교적

변화 양상 등을 종합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한·중·일 FTA의 바람직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과제는 2002년 중반 경제사회연구회가 산하 연구기관과 2003년도 연구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며, 이후 경제사회연구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과제의 수행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과제는 1개 연구기관이 담당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과 폭넓은 협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과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첫 해인 2003년에는 산업 및 분업구조 분석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다음 해인 2004년에는 분야별 한·중·일 FTA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 산업별 구조조정 지원 및 방안을 수립하고, 협동연구 마지막 해인 2005년에는 추진전략 및 바람직한 FTA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2003년도 연구의 경우 주관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참여하였다. 2003년 말 연구주제가 확정된 2004년 협동연구는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12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본 총괄보고서는 2003년도에 추진된 8개 협동연구과제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집필되었다.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보고서에서는 세계통상

환경의 변화를 논의하고, 한·중·일 경제관계, 3국간 FTA 추진 여건 및 3국간 FTA 추진당위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현황을 고찰한 후 3국간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한·일 FTA와 한·중·일 FTA의 관계설정(sequencing)을 논의하였다. 이어 한·중·일 FTA 추진 전에 실시할 수 있는 선행과제와 한·중·일 FTA에 따르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중·일 FTA의 의미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지역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먼저 한·중·일 FTA로 3국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3국의 양자간 FTA보다는 3국 전체의 FTA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동북아시아가 뒤져 있던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수동적 의미와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및 이 지역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적극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를 지양함으로써 범지역 통합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의 의미는 현재 한국이 결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FTA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중심국가의 추진과 병행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단기적으로는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력 제도화를 통해 통상분쟁의 예방 혹은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역 차원의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3국간의 협력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

하여 우선 한·중·일 FTA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경제 통합 논의의 시작이 늦었다. 이른 시간내에 유럽이나 미주 같은 수준의 지역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협력과제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이행 가능한 협력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각각의 과제가 나름대로 논리에 바탕을 두도록 노력하였다.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보고서에서는 3국간 제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한·중·일간에는 지리적 근접성을 매개로 한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무역, 직접투자 등 산업협력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각 일본과 한국을 캐치업하는 방식의 소위 기러기형 산업발전 전략(flying geese model)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한·중·일간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서 한·중·일 3국간 산업내무역이 증가하고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한·중·일 3국에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협력시스템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것은 일국 중심의 산업조정에서 국제적 산업조정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기업차원에서의 전략적 분업과 산업차원에서의 전략적 분업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산업별로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분야나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3국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표준화·모듈화이다. 이는 디지털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와 함께 공용부품을

시발로 전용부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단계적인 모듈화를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한·중·일간 분업시스템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21세기형 신산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로서 정보기술(IT)·생물산업(BT), 신소재극미세기술(NT), 신에너지·환경(ET) 등이 유망분야라 할 수 있다. 셋째는 3국간 과당경쟁 및 공급과잉의 조정이다. 석유화학 이외에도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여타 장치산업에서도 한·중·일간 과당경쟁과 공급과잉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에 한·중·일간 전략적 제휴 또는 합의적 분업차원에서 투자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한·중·일 지방간(Local to Local 또는 Region to Region) 산업협력이다. 한·중·일간 실질적인 경제·기술협력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협력방안을 한·중·일의 해당 지자체간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한·중·일간 산업협력협의체 운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중, 한·일, 일·중간 각종 민·관의 협의체를 한·중·일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산업협력의 촉매체로서 한·중·일 FTA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산업협력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FTA에 의해 역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잔존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 및 기준·제도의 조정 및 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농업은 토지절약적 영세 소농구조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비율은 상이하다. 토지생산성은 한국, 노동생산성은 일본, 그리고 자본생산성은 중국이 가장 높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3국의 농업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노동집약적, 일본은 자본집약적인 품목에 집중하고 한국은 토지집약적 품목 생산에 특화가 이루어진다면 역내국 농업의 공동발전을 기할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 상대가격이 변화할 경우 요소집약도 및 생산성 순위가 바뀌어 이러한 보완관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많은 품목의 경작면적을 증대시키고 있어 대부분 농산물 생산이 감소 추세인 일본과 보완적 관계가 고착되고 있다. 반면 시설채소 등의 대일 수출증대를 위해 생산을 늘리고 있는 한국과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역내국간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은 한·일간 또는 중·일간은 높게 나타난 반면 한·중간은 낮았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경합성은 한·일간 또는 한·중간이 높은 반면 중·일간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보완관계가 뚜렷하고 경합관계가 약한 반면 한국과 중국은 경합관계가 강하고 보완관계가 약하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보완관계와 경합관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로는 한·중 양국의 경우 옥수수과 참깨 교역은 상호 보완적이며, 배와 피망은 수출경합, 대두는 수입경합 품목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품목은 파프리카와 피망, 돼지고기였으며 배와 사과를 수출경합, 옥수수와 대두, 참깨, 쇠고기는 수입경합 품목이었다. 중·일간에는 상호 보완 품목이 옥수수, 참깨, 마늘, 생강, 양파, 고추·피망, 돼지고기, 닭고기였으며 수출경합 품목은 배, 수입경합 품목은 대두와 유채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은 역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농산물 교역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수출이 중복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호혜적인 분업과 특화에 의한 공생보다는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무한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내시장 독점은 지속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3국 가운데 농업경쟁력이 가장 높은 중국도 토지집약적 품목에 대해서는 토지자원이 풍부한 역외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또한 저렴한 인건비에 기초한 농업경쟁력은 한계가 있으며 방대한 영세소농의 존재가 농업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역내 농업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농업협력을 통해 상호 신

퇴와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역내국간 농업의 공생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 분업과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역내 교역 전환과 교역 창출에 의해 세계 최대의 농산물시장인 동북아시아를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보고서에서는 동북아 3국의 수산업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인 인접성, 공동어장의 사용, 그리고 각국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수산업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공통점과 함께, 세계 1위의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 그리고 중·일 양국과 비슷한 수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위치 등 상이한 조건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수산업구조를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수산물 생산 측면을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은 전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생산권으로 한·일 양국은 지속적 감소세를, 중국은 지속적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운데 어업인구 역시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

한·일 양국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량을 수산물 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수산물 최대 생산국으로서, 그리고 태국과 세계 제1, 2위를 다투는 수산물 수출강국으로 한국과 일본에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물 관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산물 관세율 수준은 한국 17.7%, 중국 26.7%, 일본 7.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국 모두 종가세 중심체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관세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수산물 비관세장벽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특별한 수산물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은 비관세장벽의 하나인 쿼터제를 실시, 관련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산업 여건을 고려한 수산부문의 FTA 상대국 선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둘째, 각국의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협상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동등성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정규모를 위한 구조조정 및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사전적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3국간의 교역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분석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한·중·일 3국에 국한하지 않고 동남아국가 및 대만까지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아직까지 경제규모에 비해서 상호간 직접적인 의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ASEAN과는 상호 보완성이 낮기 때문에 대ASEAN 교역규모는 크지 않으며 선발개도국(NIES)과의 교역비중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3국 중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가장 높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비중은 빠른 증가세를 보여온 반면 NIES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었다.

한·중·일 3국간의 교역관계로 볼 때, 3국간 FTA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며, 그 다음이 중국이고, 일본은 ASEAN과 NIES를 포함하는 광역화된 지역통합에 높은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수출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중국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비경제적인 요인까지를 고려할 때, 중국을 배제한 한·일간의 통합을 우선시할 유인을 가지고 있음을 이 보고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는 한·중·일 FTA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무역규범분야를 분석하였는데, 원산지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무역규범의 운용현황을 비교하고, WTO의 관련 규범 및 여타 FTA에서의 규범을 비교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회원국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규정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을 수 있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3국간 FTA의 원산지규정의 기본원칙은 공평하고 투명하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이 있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할 때 반덤핑에 대해 견지해야 할 입장과 원칙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하는 목적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 자국산업을 보호하여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데 남용되는 수단인 반덤핑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다만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공동의 반덤핑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이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보다도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이나 상계조사 개시 및 상계조치 부과 건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WTO 보조금협정보다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규범 설정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 비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되는 특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계조사를 실

시할 경우 특별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보조금 규율을 WTO 보조금협정보다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WTO 규율 수준에서 보조금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중·일 FTA 협상과정에서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중국의 규정 중 일부 조항은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데, 한·중·일 FTA 추진시 이러한 부분이 협상과정에서 거론되고 사전에 시정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판정을 내려 상계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러한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정책 관련 법규의 조화보다는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쟁법의 대상이 되는 실체규정은 한·중·일 모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으며 규제강도가 대체로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는 실체규정보다는 대다수의 FTA에서와 같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국의 경쟁법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예양을 존중하면서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협력체계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조약을 중국이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일부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과 TRIPS 규정과의 불합치성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지적재산권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조항 자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특히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침해억제책의 유효성에 집중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FTA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금융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금융서비스 산업, 즉 크게는 은행, 증권, 보험 및 투신업분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기초로 해서 한·중·일 3국의 주요 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쟁력을 추정하였고,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한·중·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협상의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협상 의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국간 FTA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서비스 협상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는 지역무역협정의 기본 골격을 구성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무역 및 투자의 국경간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국경간 거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금융서비스 협상은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서비스부문의 협상은 체결국간의 자본시장 연계를 통해 단순한 금융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국경간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통합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통합을 위한 자본시장의 연계 및 통합, 규제 조화, 그리고 시장 인프라의 협력 등 다양한 자본시장의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각 부분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에 대

한 철저한 3국간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구를 설립하고, 향후 각 부분의 실질적인 시행조치를 위한 금융서비스 행동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3국간 FTA의 체결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득실관계를 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 등과 같은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지역무역협정의 본래 취지인 무역증진을 통한 후생증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간의 환율제도의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율이 불안정한 경우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증진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무역협정에 대한 저항이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는 EU, NAFTA, MERCOSUR, AFTA 등 주요 4대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하고, 환율변동성과 무역, 경제 성장 및 경기동조화 등과 같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았다. 환율 변동성과 무역에 대한 4대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환율 변동성과 무역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환율변동성 감소가 역내 무역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환율과 무역량간의 이론을 고찰하고, 한·중·일간의 환율변동성이 이 3개국간의 무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환율변동성과 무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결과들간에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환율 변동성이 무역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는 견해는 대체로 환율변동성이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점에 주목한다. 즉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위험기피자에게는 위험을 조정할 무역으로부터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어 무

역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론적으로는 위와 상반된 견해도 존재한다. 즉 환율변동성이 오히려 무역증가를 초래한다는 견해인데, 이러한 결론이 도출 가능한 이론적 근거는 환율변동성에 따른 기대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해진 다양한 실증분석도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그 대상을 한·중·일에 국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대일본 및 대미국 수출이, 일본의 경우는 대한국 수출이,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대한국 및 대일본 수출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율변동성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단 한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만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으로 부(-)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한·중·일 3국간 및 미국과의 교역에서 환율변동성이 장기 또는 단기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환율변동성의 감소가 앞으로 3국간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고정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일이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각 국가간의 쌍무적 무역량이 증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FTA와 더불어 이 국가들이 현재와 같이 상호간에 변동하는 환율제도가 아닌 신뢰성 있는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FTA를 통한 무역창출효과가 배가되면서 각 국가의 후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 해부터 정례화되면서 3국간 경제협력 논의도 심화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3국간 FTA 논의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3국간 FTA 논의 자체가 3국간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였다. 2003년 정상회의에

<표 2-1>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과정

일 시	장 소	주요 논의사항
제1차 1999년 11월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WTO 가입문제 등 경제협력방안 논의 ■ 한·중·일 경제협력증진에 대한 공동연구추진
제2차 2000년 11월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 한·중·일 국책연구기관간 경제협력 연구 합의
제3차 2001년 11월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간 경제장관회의 정례화 합의 ■ 테러리즘, 국제범죄, 환경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3국 경찰당국간 협조체제 인식
제4차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한·중·일 3국간 FTA 타당성 조사 제안 ■ 한국, 중국측 제의 동의
제5차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공동선언문 채택(경제분야 협력, 한반도 핵문제, 사회·문화적 협력, 초국가적 범죄행위 단속 협력 등) ■ 한·중·일 FTA 연구결과 논의

자료: 정인교·방호경(2003)

서는 한·중·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제분야 협력,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 사회문화적 협력,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행위 방지 협력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에 있어 한·중·일 FTA의 체결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외 경제정책임에 틀림없다. 물품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통상환경의 구축이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의 중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 구축을 위한 행보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이미 무역 및 투자 면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시장 주도의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한·일 FTA에 대한 공식협상이 2003년 말에 개시되고, 한·중·일 FTA에 대한 3국 국책연구기관간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¹⁾

본 보고서의 제2장은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 이어 제2절에서는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3국간 경제관계를 고찰하고,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이어 3국간 FTA의 의미와 필요성을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와 한국의 입장에서 본 의미로 나누어 고찰한다. 제3절에서는 한·중·일 FTA의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1) 2002년 한·중·일 3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3국의 국책연구기관(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총합연구기구, 중국: 발전연구중심)이 한·중·일 FTA 연구를 진행중(2003~05년)에 있다.

2.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중국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한·중·일 3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면서 EU, NAFTA 등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도약함에 따라,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주요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2002년 전세계 GDP의 17.7%를 점유하고 있으며, 무역량에서도 13.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완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왕성한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2-2> 세계경제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2002년 기준)

	인 구 (억 명)		국내총생산(GDP) (십억 달러)		무역규모 (십억 달러)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한·중·일	14.6	23.6	5,698	17.7	1,733	13.2
EU	3.8	6.1	8,637	26.8	4,658	36.8
NAFTA	4.2	6.8	11,809	36.7	2,672	21.1

자료: Global Insight DRI-WEPA(2003), *World Overview*.

IMF(2003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IMF(2003c),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편 직접투자의 경우, 한·중·일 3국이 2001년 전세계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EU, NAFTA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8.8% 증가한 1,016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고). 특히 2001년 전세계의 직접투자규모가 2000년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기

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의 직접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거대경제권으로서의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중·일의 전세계 직접투자 비중은 2000년 3.3%에서 2001년에는 7.4%로 크게 상승했다. 이를 해외 및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으로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은 각각 7.5%,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2-3> 한·중·일, EU, NAFTA의 직접투자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1995		1999		2000		2001	
	해외	외국인	해외	외국인	해외	외국인	해외	외국인
한·중·일	281	377	282	604	375	559	480	536
E U	n.a.	n.a.	3,381	2,111	3,985	4,000	2,286	1,381
NAFTA	1,103	767	2,045	3,264	2,256	3,880	1,671	1,830

자료: IMF(2003b),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2002년 들어 한국은 일본의 3위, 중국의 4위 수출시장이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2위 수출시장,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3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한편 1995~2002년 기간중 한·중·일 3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표 2-4 참고). 다만 2002년 중국의 대한·대일 의존도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대미 의존도는 급격히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대중·대일 수출비중은 1995년 20.0%에서 2002년에는 21.6%로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대한·대중 수출비중도 같은 기간중 12.1%에서 16.0%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대일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중 23.6%에서 17.5%로 낮아졌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비중이 급상승한 반면, 한·일 양국간 수출비중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2-4> 한·중·일 3국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한 국				중 국				일 본			
	1995	2000	2001	2002	1995	2000	2001	2002	1995	2000	2001	2002
한 국	-	-	-	-	4.5	4.5	4.7	3.7	7.1	6.4	6.3	6.7
중 국	7.0	10.7	12.1	12.8	-	-	-	-	5.0	6.3	7.7	9.3
일 본	13.0	11.9	10.8	8.8	19.1	16.7	16.9	13.8	-	-	-	-
합 계	20.0	22.6	22.9	21.6	23.6	21.2	21.6	17.5	12.1	12.7	14.0	16.0
미 국	18.5	22.0	20.9	21.3	16.6	20.9	20.4	28.2	27.5	30.1	30.4	29.2
E U	12.4	13.5	13.1	12.7	12.9	15.3	15.4	15.2	15.9	16.4	16.0	14.7
기 타	49.1	41.9	43.1	44.4	46.9	42.6	42.6	39.1	44.5	40.8	39.6	40.1

자료: IMF(2003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일 3국은 전세계 GDP와 무역의 17.7%와 13.2%를 보유하고 있어 FTA 체결은 당사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식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FTA 공동연구에서는 2003년 3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2003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FTA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고,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 회의에 보고되었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 일부는 중국, 일본 등의 연구진과 함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발리 한·중·일 정상 회의에 보고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²⁾ 시뮬레이션

2) 자세한 내용은 한·중·일 FTA 공동연구 한국측 발표자료인 Cheong(2003) 참고.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GDP는 1.29~4.73% 성장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의 농업분야는 8~10%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5> 한·중·일 FTA의 GDP에 대한 영향

	GDP에 대한 영향(%)
한 국	1.29 ~ 4.73
중 국	0.03 ~ 1.05
일 본	0.03 ~ 0.16

무역자유화보다는 자본축적(FDI 포함)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DI 유입 및 내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통상제도의 개선 및 투명성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이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영향을 고찰하여 보면, 중국의 경우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한 생산이 축소되는 대신 의류, 농업, 전기전자 등의 산업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나 다수 제조업의 생산은 확대될 전망이다.

<표 2-6> 한·중·일 FTA의 산업별 영향

	한 국	중 국	일 본
생산확대	화학, 가공식품, 섬유	의류, 농산물,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계류,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
생산축소	기타 수송장비,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금속	농산물, 의류, 수산물

한·중·일 FTA로 역내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경우 대일 수출은 2002년보다 50% 내외 증가할 수 있고, 대한 수출규모도

거의 2배로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대중 및 대한 수출을 각각 188억~316억 달러, 90억~194억 달러 증가시켜 2002년 기준 55~75%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각각 85억~121억 달러, 83억~10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국간 FTA로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등에 대한 수출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증가품목은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 가공식품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7> 한·중·일 FTA의 3국간 무역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 달러)

수출국/수입국	한 국	중 국	일 본
한 국	-	8,479~12,139	8,305~10,271
중 국	12,511~15,118	-	20,473~25,386
일 본	9,040~19,445	18,787~31,644	-

<표 2-8> 한·중·일 FTA하에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

수출국/수입국	한 국	중 국	일 본
한 국	-	섬유, 석유화학, 의류, 기계류, 전기전자	가공식품, 농산물, 섬유, 의류, 석유화학
중 국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의류, 전기전자	-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기계류
일 본	기계류,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섬유, 철강	-

한·중·일 FTA로 3국은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역내 무역 자유화가 투자환경 개선과 연계될 때 그 이익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투자와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comprehensive) 협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국간 FTA는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무역 자체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게 된다. 3국 경제가 생산자원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일반기계, 화학 등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3국간 분업구조가 확대되고 있어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산업들은 3국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 무역장벽 제거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수입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한·중·일 각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은 공통적으로 미국이지만, 그 뒤를 이어 3국이 각각 상호 제2위 및 제3위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³⁾ 그만큼 동북아국가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높아졌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외 통상정책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로서 동북아 3국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동아시아지역은 1990년대 이후의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조차 그 주도적 역할은 ASEAN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반면 동북아지역은 동

3) 동아시아국가의 무역파트너에 대해서는 신현수·이원복(2003) 참고.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ASEAN 정상회의에 ASEAN+3의 형태로 참여하면 서부터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은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으로 인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한 불리한 경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인하경쟁을 벌임으로써 많은 동아시아국가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무대에서 사전조율로 한 목소리를 내는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들에 비해 협상력에서 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동아시아국가들은 지역주의에의 참여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전까지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ASEAN이 주도해 왔다. 그러나 ASEAN의 경제 및 시장규모와 경제발전수준, 그리고 개방수준 등을 고려할 때 ASEAN 주도의 지역무역협정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고 이를 통해서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에서 ASEAN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주의는 한·중·일 3국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새로운 성장동인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과 1960~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그리고 1980년대부터 나타난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의 성장이 뒤를 이으면서 동아시아경제는 오랫동안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축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로 접어들었고 1997년의 금융위기로 동아시아국가들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아시아경제는 과거에 비해 그 성장동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이다. 1990년대 말 한국 등 동아

시아국가들이 금융위기로부터 비교적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초부터 10년 동안 지속된 미국경제의 유례 없는 호황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 및 일본경제 등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동인을 외부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편 역내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보면 각국의 국내경제로부터 자체적인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도 쉽지 않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일본의 디플레이션 지속가능성, 한국경제의 부동산 버블가능성, 중국의 부실채권과 실업문제 심화 등으로 자체적 경제 회복 메커니즘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경제 상황으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인의 주요 원천 중 하나는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달라진 지역경제 환경 및 거대규모인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자금의 환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FTA를 통한 무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 채권시장 육성을 통한 간접투자의 확대 등 다각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일본 경제 희생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일본은 이를 통해 경제력에 걸맞은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경제의 막대한 성장잠재력, 역내 무역과 투자에 바탕을 둔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함께 일본의 역할 증대를 지역 무역협정의 활성화로 연결시킬 경우, 이는 지역경제의 회복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매우 활발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시적 성과는 AFTA와 일·싱가포르 FTA(EPA)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수년 이내에 적지 않은 수의 FTA가 이 지역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경제집단으로서 개방과 FTA를 통한 허브(hub)화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ASEAN은 AFTA 결성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중국, CER(호주·뉴질랜드)과의 FTA는 물론, 나아가서는 인도 등 남아시아, 미국 등과의 FTA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FTA 네트워크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과 일본 또한 역내 FTA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지역내 지역무역협정이 경쟁적으로 심화되고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Cheong(2002)에 따르면, ASEAN 10개국간의 AFTA를 제외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FTA는 양자간 FTA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자협력으로의 발전을 상정하지 않은 소수국간의 FTA가 지나치게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spaghetti bowl 현상에 따르는 과도한 조정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 일본간 경쟁적 지역주의 추구, 아세안의 FTA 허브화 추구 등으로 FTA의 도미노현상이 강화될 경우, 동아시아의 지역무역협정은 원래 협력을 통해 언고자 했던 경제적 효율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의 범지역 FTA 형성을 저해하고 다자체제와의 정합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은 FTA 후발주자로서 무리한 경쟁을 지양하고 경제적 보완성 제고를 통한 효율의 향상을 기하는 한편, 지역무역협정의 개방성을 유지함으로써 WTO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일 FTA 구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구상은 우선 역내 양자간 FTA 추세를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

으로는 동아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FTA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아시아 FTA가 다른 소규모 FTA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은 Cheong(2002)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규모나 발전수준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동북아 3국이 FTA로 통합될 수 있다면 이는 동아시아 전체 통합을 향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아시아 FTA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형식으로 완성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동북아 FTA가 형성될 수 있다면 동아시아 FTA는 동북아 3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3국간 FTA는 동아시아의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역내 두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를 경쟁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4) 지역안보환경 개선

경제통합의 역사를 볼 때 대부분의 주요 지역무역협정은 경제적 성격 외에도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출범배경이 그러했고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주도한 대부분의 FTA 또한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동북아 3국간 FTA의 상황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것 또한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지역패권을 두고 세계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이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한편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협력과 안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군사·안보적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불행했던 과거 역사뿐 아니라 북한문제 등 지역에 있어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경제협력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FTA를 한·중·일 3국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이해할 때, 이것은 과거 청산에 대한 3국간 이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이 다자대화로 나아가면서 일본 및 중국의 협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동북아지역 정세의 불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한·중·일 3국간 FTA가 논의되는 상황이 가지는 정치적, 안보적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한·중·일 3국간 FTA는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제고하고 협력의 심화를 통해 3국간에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일반적 안보 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일본과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인바, FTA를 통한 협력 틀의 구축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경제협력을 통한 안보환경의 개선을 다시 경제협력 영역으로 확대하고 협력의 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선순환구조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의 의미

1)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와 한·중·일 FTA

한국의 참여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를 설정하였다. 신 행정부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대내외적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선진경제와 급부상하는 중국경제 사이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에서 모색하겠다는 장기비전으로 볼 수 있다. 즉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 및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이 과제가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IT 중심 구축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역 및 투자협력은 물론 금융협력과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는 산업구조의 조정 그리고 북한의 지역경제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한·중 협력에 이르기까지 대중국 협력분야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러한 포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협력체의 창설, 그 중에서도 FTA 체결이 긴급하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제적 환경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한국이 미래의 동북아시대를 대비하는 데는 동북아 3국을 구성하는 일본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치중하는 전략은 부적절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투자 등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 및 협력은 심화될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가 약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양국간 경제발전 모델과 산업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지난 40여 년 간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상호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의 중요성은 한국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일 FTA 추진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다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과제는 일본 및 중국과의 쌍무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들을 하나로 묶는 동북아 협력체의 출범을 위해 한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향후 한국은 한·일 FTA 및 동북아 FTA를 향한 계획을 동북아 중심과제 추진과 적절

히 연계시키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무역협정의 기반

지역무역협정의 범세계적 확산 추세에 대해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 전까지는 WTO 중심의 다자체제에 참여하는 이외에 다른 적절한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 협력체로는 APEC과 ASEM 정도를 들 수 있으나 이는 경제협력을 위한 협의체에 불과한 수준이며 제도화된 협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ASEAN+3 협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6년 ASEM의 출범이 계기가 되었고 금융위기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세계적 지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의 공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한국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중·일 FTA는 역내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일 FTA를 출발점으로 하는 동북아 3국간 FTA, 이를 토대로 하는 동아시아 협력, 동아시아 협력에 기초한 ASEM 차원의 협력 추진, 그리고 ASEM과 APEC을 매개로 하는 다자체제의 강화라는 연계시스템이 한국 지역무역협정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는 이러한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

3) 산업구조의 고도화

동북아 경제교류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3국의 경제간에는 자연발생적인 산업간 혹은 산업내 분업구조가 정착되어 왔으며 이에 상응하는 무역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 및 무역구조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

라 중국경제의 급속한 양적 성장과 질적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끊임없는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은 이러한 변화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3국간 산업 및 무역의 상호 의존도는 중국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IT 산업 및 자동차, 조선, 기계류 등 중화학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어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⁴⁾ 더욱이 수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정체상태인 반면 한·일 양국의 대중 의존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받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은 첨단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 단기간에 일본의 경쟁력을 따라잡지 못하면 수출과 성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함께 수출시장에서 3국간 상호의존성 증가는 동북아 지역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3국간의 경쟁관계가 심화될수록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제휴와 협력, 그리고 직접투자나 기술이전을 통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4) 역내 통상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처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한·중 양국간 통상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중국과의 통상마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경제의 성장이 진행될수록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에 있어 한국과의 경쟁적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T,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말미암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곧 통상분쟁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과의 통상분쟁 가능성은 이밖에도 또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4)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서는 신현수·이원복(2003) 참고.

있는 무역불균형 때문이다. 대만을 제외할 경우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중국은 대한 무역역조 문제를 양국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고 이것이 각 분야에서 통상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까지 중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해 미국 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만큼의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르는 대중 수입 증가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의 비중증대가 예상되면서 원만한 한·중 통상관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증가하는 산업구조의 결합도, 산업내무역의 증대 등 무역구조의 변화와 3국간 상호 맞물려 있는 무역수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간 통상문제는 양국간 접근을 통한 해결보다는 3국간 협력을 통한 해결모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홍콩을 포함할 경우 이미 2002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대상국으로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역과 투자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분쟁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통한 통상관계의 정립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 FTA는 동북아경제가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한국과 일본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내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

체 생산·공급하는 소위 일관생산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1993년에 이미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도 1998년에는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게 되었다.⁵⁾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 있어 생산설비가 미비한 상태이며 따라서 필요한 물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의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 일본과 유사한 생산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표 2-9> 한국과 일본의 자급률 추이

(단위: 10억 원, 10억 엔, %)

국가	한 국				일 본	
	1985	1990	1995	1998	1993	1995
국내 산출	190,664.2	416,965.1	841,518.6	1,062,958.1	907,405.6	956,520.0
국내 수요	192,034.2	421,739.7	855,409.8	1,019,402.6	898,728.3	953,434.6
자급률 ¹⁾	99.3	98.9	98.4	104.3	101.0	1100.3

주: 1) 자급률=(국내산출÷국내수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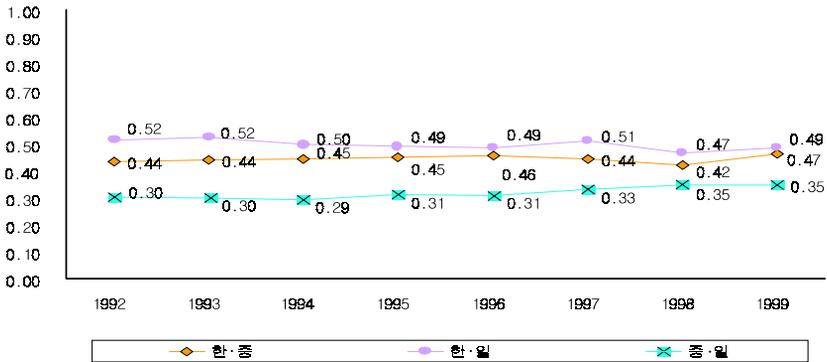
자료: 한국과 일본의 산업연관표에서 계산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국가가 자국내에 필요한 모든 생산설비를 갖춘다면 그만큼 국가간의 무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국내에서 생산하여 소화하지 못한 생산물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과정을 통해 제3국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1>은 세계 30개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수출유

5) 산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국과 일본의 자급률은 산업별로 보아도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1998), 『조사통계월보』, 4월호 참고.

사성지수(ESI)⁶⁾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그림 2-1> 한·중·일의 수출유사성지수(ESI)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유사한 발전 전략에 의한 성장경로를 거치면서 자급자족형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고 세계시장에서도 유사한 수출상품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유사한 생산체제와 유사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은 한국, 중국, 일본이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즉 한·중·일 3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 대한 우위를 지켜 나가야만 자국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 수출유사성지수(ESI)가 1에 가까우면 수출구조가 유사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한 상태를 나타내며, 0에 가까우면 그 반대이다.
- 산업별로 보면 3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영민(2002) 참고.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1957년 출범한 EC의 초기 회원국인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의 경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1989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 당시에 양국은 동일한 경제수준에 있었다. 1950년대나 1980년대의 경제개방 정도는 현재와 비교하여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들간의 개방 정도가 크게 차이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EU나 NAFTA의 출발은 경제규모나 수준 그리고 개방의 정도에서 서로 비슷한 위치의 국가들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10> 한·중·일의 경제규모 비교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GDP(억 달러)	2,525	4,617	3,877	10,800	30,521	47,636
1인당GDP(달러)	5,883	9,822	370	852	25,430	37,578
수출액(억 달러)	678.12	1,722	627.60	2,494	2,876.78	4,781.56
수입액(억 달러)	744.05	1,605	538.09	2,251	2,353.07	3,795.30
FDI 유치액(억 달러)	7,885	92,834		420.90	27.943	289.97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FTA를 비롯한 3국의 경제통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GDP 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일본과 중국의 GDP 규모를 2000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4조 7,000억 달러와 1조 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GDP 4,600억 달러의 각각 10배와 2배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1인당 GDP 측면에

서 볼 때는 일본이 3만 7,000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9,800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은 852달러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즉 인구 12억 명의 중국은 전체 경제규모는 클지언정 개개인의 생활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가 아직 한국이나 일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경제수준의 차이는 한·중·일 경제통합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각국이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상황은 별로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다. 중·일간 패권경쟁

앞에서 지적한 경제규모나 수준 그리고 개방 정도의 차이는 상호 경제 교류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경제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비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있으며, 어쩌면 이러한 비경제적인 요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인 측면의 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도 중국과 일본간에 이어져 오는 뿌리 깊은 반목일 것이다.

중국이 지역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WTO 가입을 위한 ASEAN으로부터의 지지 확보 외에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지역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일본이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국과의 FTA 논의에 상당한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주목하였을 것이다. 한국도 나름대로 지역주의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도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즉 중국은 한국과 일본간 FTA가 조기

에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되던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논의에 중국이 뛰어들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향후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라. 남북한 대결구도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비경제적인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남북한간의 대결구도이다. 이는 남북한 두 당사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 관련국 전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며,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 남북한의 대결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안위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종식하고 통일은 어려울지라도 상호평화를 보장하며 경제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이 함께 발전해 나간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훨씬 자유로운 위치에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와 같은 시나리오는 한국의 희망 섞인 바람일 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체제가 붕괴되어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더욱 정당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의 동의 없이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문제는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연결고리이며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동북아 경제통합은 그만큼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한국, 일본, 중국을 가리켜 유교문화권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동양적 가치관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유교적 전통에 대해 3국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한·중·일 3국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3국간에 공통된 문화적 유산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과거의 폐쇄적인 사회상을 감안할 때 당시의 사회적 교류는 오히려 일부계층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계층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⁸⁾

물론 서구사회의 경우에도 일반계층의 교류가 오늘날과 같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적 국가체제가 확립되고 교통·통신수단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계층간의 상호 교류가 증대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

8) 물론 한국, 중국, 일본은 한자문화권으로 동일문자를 쓰기는 하지만 발음이 전혀 다르며, 특히 중국에서 간자가 사용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중국인들이 알아보기 못하는 등 의사소통을 돕는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깊어지면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기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국가들간 사회·경제적 통합은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EU가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와 행정 분야에까지 통합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일반계층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진 유럽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냉전체제는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간의 외교관계 수립도 상당 기간 지연시켰으며 이 때문에 일반계층의 교류는 더더욱 힘들었다. 특히 앞서서 언급한 북한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한·중·일 일반계층의 교류가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10년 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 사이의 일반교류 역사는 극히 짧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한·중·일 3국의 일반국민들은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상대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기회가 주어진 적이 별로 없다. 이와 같은 상호 이해의 부족과 의사소통수단의 부재는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4.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이에 따르는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로 주요 무역파트너와의 경제협력 심화는 향후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한·중·일 FTA는 경제적 및 비경제

적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 FTA에 대한 대내외적인 장애요인도 적지 않으므로, 이 FTA는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미국경제의 회복 가속화와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지속으로 특징지어질 향후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심화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방향 수립이 중요하며, FTA 정책도 이러한 틀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AFTA 등을 통해 지역주의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이 동아시아국가들의 지역주의 형성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더라도, 한·중·일 FTA와 같은 동아시아내 대규모 경제협력체 구축을 반대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은 동북아와 높은 군사 및 안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내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표면적인 지지입장과는 달리,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는 중국이 포함된 FTA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⁹⁾

따라서 FTA 추진과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은 미국과의 경제 및 정치, 외교적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FTA 정책 방향은 한·중·일 FTA를 추진하면서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FTA의 주도세력(core force)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한·미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양국간 FTA 추진의 사전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제적 실익 확보와 한·미 FTA 추진을 위해 조속한 기간내에 양국간 BIT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9)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 10월 멕시코 Los Cabos에서 개최된 APEC 정상 회의에서 ASEAN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The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AEI) 제안하였는데, 이 제안은 중국의 FTA 추진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한국정부는 한·중·일 FTA를 추진해 감에 있어 그 자체가 대외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세계적 차원의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체제의 완성에 기여하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정책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기반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내의 높은 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역내 무역활성화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자체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의 다음 단계 목표는 순차적으로 AFTA와의 협력으로 가능할 동아시아 FTA의 창설, 그리고 나서 APEC이나 ASEM 혹은 다른 형태의 지역간 경제협력체의 완성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한·중·일 FTA는 최종 목표인 다자주의체제의 완성뿐만 아니라 그 직후 단계인 동아시아 FTA와 지역간 경제협력체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S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AFTA가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그 후 한·중·일 FTA와 연계하여 동아시아 FTA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한·중·일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그들의 협력 역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당장 한·중·일 FTA를 직접 추진하기가 어려워 한·일 FTA가 먼저 추진된다 할지라도 한국정부의 이러한 의도가 중국 및 일본정부에 충분히 전달된다면 앞서 추진되는 한·일 FTA도 결국은 한·중·일 FTA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인정받게 되어 추후 수순을 밟아감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부는 일본 및 중국정부와 위의 장기 계획을 놓고 끊임없는 대화와 논의를 유지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장기적으로 돈독히 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개최

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러한 의제를 논의하는 최적의 회의가 될 수 있다.

다. 한·중·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한·중·일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협력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라도 협력과제를 순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주체가 반드시 정부이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며, 이는 한·중·일 FTA와 그 이후 더욱 진전된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FTA 또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데 있어 어느 한 국가나 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급적 모든 국가가 높은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중국과 일본간 대립관계 등 현실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한국이 3국간 FTA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베네룩스 3국 등 소국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통합은 세계적인 대세이며 통합을 실현한 지역에 비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통합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한국과 한국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손실이 될 것이다.

경제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고, 정치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가시적인 진전을 보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무역원활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관제도의 조화 및 선진화 등 비관세장벽의 개선은 수출입업자 등 상품통관과 관계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과 연계된 문제로서 지역의 경제 발전 및 후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역이 확대되면 해당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그밖에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협력방안인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의 조화, 산업구조 조정 공조, 에너지·환경 협력, 인터넷·정보통신 협력, 중국과 일본간 대결구도의 완화, 남북한 긴장의 완화, 사회·문화교류의 확대 등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인 공통의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국민들은 역내 경제 통합이 특정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FTA의 논의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라. FTA 홍보 강화

범세계적 지역주의 심화 추세와 그 빠른 확산으로 볼 때 한국이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 정책에 대한 국내적 컨센서스의 획득이 선결요건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FTA 추진을 위해서는 2004년 4월 발효되는 한·칠레 FTA협정을 비롯한 FTA 정책의 국내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FTA의 필요성 홍보에는 언론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언론인에 대한 FTA 정책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체결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제조업체들도 FTA 추진정책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비준 과정을 살펴보면, FTA 추진에 정부의 대국민 홍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한·중·일 FTA가 본격적인 협상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꾸준히 한·중·일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FTA는 농민의 피해’라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FTA하의 무역자유화는 관세 부담 없이 수입된 물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값싸고 질 좋은 물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며, 국내 경제제도를 개혁하는 계기로 활용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FTA 전담인력과 협상조직도 보강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USTR과 같은 KTR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통상조직과 외교조직의 혼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FTA는 중요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협력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FTA 정책은 성격상, 특히 정치적인 함의가 크며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가미되지 않은 채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FTA 정책은 궁극적인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상교섭본부내 FTA 전담인력을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통상교섭본부내 다자통상협력과 하나로는 2004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한·일 FTA와 한·싱가포르 FTA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 추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내에 FTA 전담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고, 상대국의 반응을 탐색하며, 협상단계에서는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상대국 입장 및 협상 대안에 대한 정

확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FTA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통상교섭본부내 FTA 전담인력의 공관근무를 FTA 추진대상국 위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2003년 말부터 시작된 일본과의 FTA는 한국 제조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비해, 제조업 전체 입장에서 협상을 준비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FTA 전담인력의 육성과 아울러 FTA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라도 추가 배정할 필요가 있다.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한·중·일 FTA는 한·칠레 FTA와 달리 패자산업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구조조정과 피해보상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농업이 최대의 패자산업이지만 일본, 중국과의 FTA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자제품, 기계산업 등 다양한 계층과 산업이 패자산업이 된다. 따라서 한·중·일 FTA에서는 한·칠레 FTA와 같이 농업을 위주로 한 특별법보다는 국내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지원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FTA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한·중·일 FTA 협상은 국내산업 구조조정정책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 및 일본과의 FTA는 사실상 한국산업이 필요한 구조조정의 대부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자체제하의 무역자유화와 연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한·중·일 FTA 관세양허협상 및 산업구조 조정 방향과 연계

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FTA에는 칠레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농업부문의 충격이 있을 것이므로 WTO, DDA 농산물 개방과 양자간 농업개방의 큰 틀 속에서 개방에 따르는 국내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과의 FTA에는 자동차 및 부품, 전자부품, 기계분야에서의 큰 개방충격이 예상되는데, 이 분야들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사업전환, 직업훈련, 구조조정 지원 등의 제도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일 FTA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 심화문제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일본과의 FTA에서는 양국간 FTA가 향후 추진될 한·중·일 및 동아시아 FTA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를 포함한 전 부문의 개방과 아울러 서비스와 투자, 통상 제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FTA’가 되도록 협상 초기부터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절한 보상수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FTA 피해그룹에 대해 ‘정치적’ 보상이 아닌 ‘합리적 차원’의 보상(side-pay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보상이라 함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또는 선거서 무마용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비관그룹에 대한 과도한 금전적 보상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중 마늘협상시 마늘농가에 대한 1조 8,000억 원을 지원한 것은 정치적 보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합리적 보상이란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FTA로부터 피해를 볼 내부집단에 대해 그 예상 피해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방법은 가능하면 간접적이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공동사용시설 제공, 직업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사업 및 작목 전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보상의 재원은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난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일 3국 정부가 3국간 FTA에 대해 보인 입장은 ‘중국 적극적, 일본 소극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한·중·일 FTA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제조업이 취약하고, 금융부문의 부실로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치적인 요인을 중시하여 한·중·일 FTA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 당장 3국간 FTA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더라도 실제 협상은 3~5년 후 가능할 것이란 추정도 중국이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FTA 정책을 연구하는 중국학자들은 만약 한국과 일본이 예정대로 FTA협상이 진행되고 한·중·일 FTA 논의가 부진할 경우, 중국은 인도, 중남미 등과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ASEAN FTA의 조기 구축으로 한·일 FTA에 대응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전략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양자간 FTA보다는 한·중·일 3자간 FTA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을 국정운영지표의 하나로 설정한 참여정부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3자간 FTA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업 개방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중·일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3자간 FTA에서는 농업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비록 중국 농산물로 인해 한국농업이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일본에 대한 수출증가로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FTA협상을 먼저 타결하고, 한·중·일 FTA는 그 이후 추진할 과제로 보고 있다. 2003년 9월 확정된 한국의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에도 이러한 입장이 제시

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에 대한 견제, 중국시장 접근성 제고로 인한 경제적 이익, 안보적 측면 등을 근거로 한·중 FTA 검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논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배경에는 이 지역의 양대 세력인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대결구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과 일본의 역학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반목의 관계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이나마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관계가 계속 축적되어 상대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간 상호 신뢰의 구축은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방안과 그 밖의 다른 분야 협력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어느 정도의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에 중국과 일본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에 양측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히 중재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 중국과 유사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일본과 중국 중간 정도의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국을 연결하여 동북아를 통합하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 경제제도 선진화 등 철저한 내부개혁으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논의에 있어 도덕적 권위를 함양하며, 정치외교력을 증진시켜야 하고,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권영민. 2002.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신현수·이원복. 2003.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정인교. 2001.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정책연구 99-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방호경. 2003. 「발리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사항과 의의: FTA를 중심으로」. 『KIEP 세계경제』, 11월호.
- 한국은행. 1998. 『조사통계월보』, 4월호.

[외국문자료]

- Baldwin, Richard E. 2002. "Asian Regionalism: Promises and Pitfalls." Presented at the KIEP Seminar on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held in Seoul, Korea, 27 September.
- Cheong, Inkyo. 20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KIEP Policy Analysis 02-20. KIEP.
- _____. 2003. "Prerequisites, Economic Effects and the Environment for a China·Japan·Korea FTA." Presented at Trilateral Joint Research Seminar held in Tokyo. August.
- Global Insight DRI-WEPA. 2003. *World Overview*. March.
- IMF. 2003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June.
- _____. 2003b.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April.
- _____. 2003c.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pril.
- _____. 2003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 Trilateral Joint Research. 2003.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Joint Research on Economic Effects of China, Japan and Korea FTA b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Chin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of Japa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of Korea.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인 지역주의에 대응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중·일 FTA가 논의·검토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한·중·일 FTA가 실현되는 경우 NAFTA를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경제권이 동북아지역에 형성되고 그 시장통합의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산업간 보완구조와 함께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일 FTA의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체제 및 경제운용방식의 차이와 함께 세 나라 모두 플세트형 산업구조를 견지하면서 경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FTA의 제약요인이기도 하다.

그 동안 한·중·일 FTA 관련 연구는 한·중·일 FTA 체결의 정량적인 기대효과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를 위한 산업별 연구도 CGE 모델에 의해 계측된 정량적인 효과를 보완하는 선에서 그쳤다. 또한 FTA의 대안으로서 또는 그 전 단계에서 한·중·일간 경제관계의 강화차원에서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추었던 관계로 FTA를 전제로 한 산업별 체계적·기본적 연구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계측하고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산업의 실상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한·중·일 FTA의 기초연구로서 한·중·일 산업간 경쟁, 상호 의존, 협력관계가 무역과 직접투자 및 산업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FTA의 영향이나 추진전략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논의를 활성화·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업계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한·중·일 FTA의 전략적 전개를 위한 고려 및 판단기준 마련 등 한·중·일 FTA협상시 한국측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가. 개관

산업구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체로 전기·전자, 수송기계, 화학 등이 주력업종이다. 중국의 경우도 전기·전자, 화학, 음·식료품 등의 비중이 높지만, 수송기계의 비중이 특징적으로 낮은 반면 섬유·피혁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3국 모두 전기·전자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특히 한국과 중국의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3국 모두 수송기계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기계산업의 비중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의 기술수준에서 한국은 저위기술산업→중저위기술산업→중고위기술산업으로 발전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ICT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만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ICT산업의 비중이 다소

<표 3-1> 한·중·일 제조업 구조의 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중 국	
	1990	1995	2000	1990	1995	2001	1995	2001
섬유·피혁 (섬유의류)	11.5 (8.2)	7.3 (6.0)	4.2 (3.6)	4.8 (4.4)	4.1 (3.8)	2.9 (2.7)	12.3 (10.5)	11.3 (9.5)
제지·인쇄	4.6	5.1	4.1	7.6	8.2	8.6	3.0	3.3
석유정제	1.8	6.3	11.3	3.5	4.7	6.2	4.7	4.0
화학 (의약)	9.1 (3.0)	9.8 (3.0)	8.9 (2.8)	8.0 (2.6)	8.5 (2.9)	8.6 (3.0)	11.9 (2.2)	11.7 (3.3)
고무·플라스틱	3.8	3.5	3.1	1.3	1.2	1.2	3.1	4.1
비금속광물	5.6	4.3	3.3	3.7	3.9	3.5	7.6	5.5
1차금속 (철강)	9.0 (7.7)	8.5 (7.3)	8.0 (6.9)	8.1 (6.0)	7.1 (5.3)	6.3 (3.5)	11.4 (8.9)	9.7 (7.0)
금속제품	3.8	4.4	4.1	6.1	5.9	5.2	3.2	3.3
기계	5.5	6.2	5.8	11.2	9.9	9.3	9.4	7.4
전기·전자	15.5	17.9	19.4	18.3	18.4	18.1	10.4	15.6
수송기계 (자동차)	13.2 (10.9)	13.4 (10.7)	14.9 (8.9)	9.7 (8.8)	9.5 (8.4)	11.3 (9.1)	6.8	7.5
제조업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부가가치(경상가격) 기준

자료: OECD, *Industrial Database*.

中國國家統計局 編(1996, 2002), 『中國統計年鑑』.

하락하고, 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ICT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표 3-2〉 한·중·일 기술수준별 산업구조의 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중 국	
	1990	1995	2000	1990	1995	2001	1995	2001
ICT산업	16.1	18.4	19.8	19.8	19.9	19.4	10.7	16.0
중고위기술산업	28.8	30.3	30.3	31.2	30.2	31.2	28.7	27.1
중저위기술산업	24.9	27.9	30.3	24.6	24.5	24.0	30.7	27.3
저위기술산업	30.0	23.4	19.6	24.3	25.4	25.4	30.0	2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ICT- 전기·전자

중고위기술- 화학, 기계, 수송기계

중저위기술- 석유정제,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

저위기술- 음·식료품, 섬유·피혁, 제지·인쇄

한편 한·중·일간 상호의존 및 경합구조를 보면,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비율은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로 향후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2001년 현재 18%로 NAFTA(56%) 및 EU 15개국(62%)과 비교하여 낮은 실정이다. 무역·해외직접투자 통한 3국간 보완관계를 보면, 수출을 통한 일본시장과의 보완관계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다. 즉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결합도 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면에서는 일본의 대한, 대중 투자결합도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 투자결합도가 대중 투자결합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투자를 통한 한·일간 보완관계가 일·중간에 비해 높음을 반영한다.

최근 중국의 수출구조가 한국과 일본에 더욱 유사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한·중, 한·일간 수출경합관계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합관계는 아직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중국의 추적이 한국보다 일본에 더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일간에는 산업내무역이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에서도 수직적

인 공정내 분업과 함께 수평적인 제품차별화분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과 한·중과의 기술격차로 일본은 고급·비범용제품에 특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중저급·범용제품에 특화하는 제품차별화분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한·중·일간 산업내분업은 일본의 대중·대한 직접투자,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현지의 일본계 기업 및 제휴기업과 일본의 모기업 및 제휴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기업내무역의 비중증가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섬유

한국 및 중국에서는 생산이 내수를 초과하지만 일본에서는 생산이 내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및 중국의 섬유산업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긴 하나 무역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섬유산업이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인바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및 일본에서의 해외투자는 섬유산업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섬유산업에서의 해외투자비중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는 통신·전자 등 자본·기술집약산업에서의 투자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섬유산업에서의 경쟁력은 RCA지수,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변화, 기술수준(정성적 분석) 및 가격경쟁력 등의 방법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품목 및 업종별 측면에서 한국은 섬유류에서, 중국은 의류에서, 그리고 일본은 화섬원료·모직 및 화섬장섬유사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 RCA지수,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변화를 이용한 분석결과).

기술 및 품질 등 정성적 방법을 이용한 경쟁력 비교에서는 상류(방직

업 및 화섬업), 중류(염색가공업) 및 하류(기획 및 디자인) 등 모든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 및 중국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능력 및 사업환경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우수하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가격경쟁력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섬유산업의 인건비는 2000년 현재 중국에 비해 약 7.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일반기계

한·중·일 3국의 일반기계 세계 생산비중은 약 23%(일본 17%, 중국 4.0%, 한국 2.1%)이며, 자국 제조업의 생산비중(2001년 기준)은 각각 7.6%, 6.0%, 9.9%로 일본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생산액이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중국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계산업강국인 일본의 일반기계 생산이 최근 들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일반기계산업의 수급상황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내수가 감소한 데 비해 중국은 고성장에 힘입어 생산재투자 확대로 일반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출입 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은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한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3국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3국의 무역수지는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기계 전체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일 순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경쟁력은 일본, 한국, 중국 순이나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일의 일반기계산업은 세계 전체에 대해서 수출특화되어 있으나 중국은 수입특화상태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는 개선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수출특화 정도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호간의 특화상

태를 보면, 먼저 한국은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특화이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이다. 한편 일·중간에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수입특화상태이다.

한·중·일의 대세계 시장점유율은 각각 3.1%, 4.4%, 11.0%이며, 3국의 대세계 총비중은 18.5%로 높은 수준이다.

한·중·일간의 상호 무역결합도는 1을 크게 상회하여 일반기계산업의 3국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수출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역내 수출입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즉 한·중·일 3국의 일반기계 전체 대세계 산업내무역 지수에서는 중국(0.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0.82)과 일본(0.63) 순이다. 3국 상호간의 분업도 크게 진전되고 있다.

투자분야에서도 아시아 금융위기 회복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목적도 종래 생산거점 확보 위주에서 현지시장 확보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기계산업 관련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일본의 경우 대체로 무관세, 한국은 0~8%, 중국은 최혜국대우 관세율 기준으로 3~40% 수준이다. 평균실행관세율은 중국 8.32%, 한국 7.8%, 일본 0% 순이다. 중국의 경우 수입허가나 수입할당, 수입입찰 등 제도적인 비관세장벽이 남아 있으나 WTO 가입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철폐중에 있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상관행과 제도운영 등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비관세장벽이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거래관행 등의 면에서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 자동차

한·중·일 3국의 자동차 수급구조(2002년)를 보면 한·일은 승용차 생

산(84%)이 중심인 데 비해 중국은 상용차 생산비중(66%)이 높다. 한·중·일 3국의 생산대수는 각각 315만 대, 1,026만 대, 325만 대, 국내판매는 각각 162만 대, 579만 대, 325만 대, 수출은 각각 151만 대, 470만 대, 4만 대, 수입은 각각 3만 대, 29만 대, 13만 대 수준이다.

한·중·일의 경쟁력은 세계시장 점유율(2000년) 면에서 한국은 3.6%, 중국은 1.0%인 데 비해 일본은 21.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RCA(현시비교우위) 지수도 한국, 중국이 각각 1.0%, 0.2%인 데 비해 일본은 2.2%로 역시 높았다. 여타 품질 면 등에서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중국이 범용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협회 및 3개 주요 자동차업체에 대한 KIE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기준(100)으로 하였을 경우 한국과 중국은 완성차의 품질 면에서는 각각 86.3, 55.0을, 가격 면에서는 각각 76.3과 70.0을, 종합경쟁력 면에서는 각각 83.8, 50.0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품의 경우 품질 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 83.3, 66.7을, 가격 면에서 각각 83.3, 88.3을, 종합경쟁력 측면에서는 각각 88.3과 71.7을 기록하였다.

한·중·일의 분업구조를 보면, 승용차보다는 부품교역이 중심이나 부품의 경우 중국의 대일 수출이 우리를 능가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품의 경우 한·일, 일·중간에는 산업내분업지수가 향상되었으나 한·중간에는 오히려 2001년보다 다소 악화되었다.

또한 한·중·일 기업간 협력 및 전략적 제휴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한·일 양국기업의 중국투자가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기업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부품도입, 해외수출 거점화 등 대중국 협력사업을 다양화하는 등 2국간 혹은 3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면에서 한국의 관세율은 8%(트럭, 버스 10%), 일본의 관세율은 0%이나 중국의 관세율은 2003년 현재 승용차 39.5%(평균), 부품 15.2%로 무척 높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각각 25%와 10.5%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는 반면 중국은 수입할당제와 수입허가제를 채택(2005년까지 철폐할 예정)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수입전용항구제도, 각종 준조세 부과 등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마. 전자

한·중·일 3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세계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5.7%, 중국 11.3%, 일본 15.5% 등으로 세계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전자산업 생산액은 감소 또는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산업의 수급 면에서는 한·중·일 3국 모두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상태이며, 한국의 경우 수요보다 생산액이 약 2배, 일본은 약 1.24배, 중국은 8% 정도 많다. 수출입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전자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입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수출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자산업의 급팽창에 따라 역내 수출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3국의 전자산업은 3국 모두 세계 전체에 대해서 수출특화상태로 치열한 경쟁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2001년부터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었다. 3국간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되어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특화상태에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생산 비중이 높고, 중국내 투자기업으로부터의 역수입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중간에는 일본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 수입특화상태에 있다.

중국 전자산업의 수출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한·중·일 3국 전자산업 전체의 대세계 산업내무역지수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역내 2국간 관계에서는 한·중간 지수보다 일·중간 지수가 높아 한·중보다는 일·중 분업관계가 더

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산업 관련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에서는 일본의 경우 대체로 무관세, 한국은 0~8%, 중국은 최혜국대우 관세율 기준으로 5~40% 수준으로 3국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비관세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우 수입허가나 수입할당, 수입입찰 등 제도적인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기는 하나 철폐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 거래관행 등의 면에서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바. 철강

한·중·일의 조강 생산량은 2억 8,800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6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한 반면 일본은 2위로 역전, 한국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비율이 각각 33.2% 및 29.6%로 수입의존도(각각 26.3% 및 7.7%)를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은 수출비율이 3%로 수입의존도 10.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무역구조 면에서 일본은 부가가치가 크고 가공도가 높은 품목에 특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도가 낮은 원료 또는 1차가공 제품분야에 특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 정도 수준이다.

한·중·일간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면에서 현재 한국은 일부 고급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과 동등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선발국인 일본은 자동차 제조용 표면처리장관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급제품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후발국인 중국은 아직 고급제품을 생산하지는 못하나 여타 제품은 생산이 거의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수출시장점유율, RCSA, 무역특화지수 등 사후적으로 현시된 경쟁력지수로 볼 때도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경쟁력이 높다. 특히 무역특화지수 면에서 일본은 1차원료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에 특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1차원료제품만 수출에 특화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에 특화하고 있다.

한·중·일간 분업구조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Up-Stream 제품과 고급강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한국과 중국은 범용강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현재는 한·중·일간 기술격차에 의한 제품차별화 분업과 공정내 분업이 공존하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과 중국, 대만의 철강산업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일방적인 기술격차분업보다는 규모의 경제와 수요요인, 그리고 직접투자와 산업협력 등을 매개로 한 기업내분업 등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중국이 5.5%로 3국 중 가장 높고 일본이 0.6%로 가장 낮으며 한국은 2.4%로서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비관세장벽분야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수입제한조치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유통구조나 독특한 상관행 면에서 수입억제적인 요소가 많다.

사. 석유화학

한·중·일은 에틸렌 기준 세계 4위, 6위, 2위의 주요 생산국이나 한국과 일본이 생산과잉상태인 반면, 중국은 공급부족으로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이다.

한·중·일의 석유화학산업 발전단계는 한국이 성숙진입단계, 일본은 성숙단계, 중국은 성장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가격, 품질, 기술, 마케팅 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경쟁력은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 중국 순으로 평가된다.

한·중·일 3국간 석유화학산업 무역은 한국, 일본이 중국에 대해 수출에 특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02년 기준 중국무역을 보면 한국은

수출 39억 달러, 수입 2억 달러, 일본은 수출 23억 달러, 수입 3억 달러로 두 나라 모두 압도적인 대중국 수출우위를 기록하였다. 3국간 투자 역시 한국,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전체건수의 61%, 금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2003년 9월 말), 일본 역시 대중국 투자가 2002년 전체 건수의 33%, 금액의 8%를 차지하였다.

한·일간의 무역과 투자규모는 양국의 대중국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한·중·일간 산업내무역 추이를 보면 한·일 모두 대중국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수출을 하고 있어 산업내무역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에서는 상호간 차별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해 산업내무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국의 관세는 중국의 관세율이 14~16% 수준으로 가장 높고, 한국은 5~8%, 일본은 대부분 품목에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종가세 환산시 10% 수준의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면에서는 수입수요가 큰 중국의 경우 수입허가 및 사전승인, 쿼터 등 제도화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반덤핑 제도도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수입수요가 약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도화된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으나 폐쇄적인 유통구조 등 비공식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역내 분업구조와 무역장벽문제를 들 수 있다. 섬유산업에서 한·중·

일간 분업구조를 살펴보면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 + - + >형¹⁰⁾이다. 화섬원료, 화섬장섬유사, 화섬장섬유 직물 등 자본집약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역내 수출우위는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 - - - >형이다. 화섬단섬유사, 모사 등의 품목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이러한 품목에서 중국 및 일본 모두에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저가공세에 시달리며, 한국내에서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 품목인바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 - + - > 형이다. 의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섬유산업 전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집약적 품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내 수출경쟁력 역시 중국·한국·일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 - - + > 형이다. 모직, 면직 등의 품목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고가, 중국으로부터는 저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섬유산업에서 한국과 일본간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관세율이 대체로 낮으나 수입규모를 고려한 가중평균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류제품의 수입비중이 한국보다 일본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간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관세율은 한국의 관세율에 비해 약 7~8%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2005년까지 관세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에서는 한·중·일 모두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여타 선진국인 EU, 미국 및 호주 등에 비해 월등히

10) 여기서 + 및 - 는 무역특화상태를 의미. + 는 수출특화 그리고 - 는 수입특화. 맨 왼쪽의 부호는 한·중간 분업에서 한국의 상태를, 가운데 부호는 한·일간 분업에서 한국의 상태를, 그리고 오른쪽 부호는 일·중간 분업에서 일본의 상태를 시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비관세장벽은 일본보다 높으며 방글라데시 및 모로코 등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국은 러시아 등과 함께 섬유산업에서의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에는 무역허가제, 수입허가증, 특정상품 등기제도 등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한편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WTO 가입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일반기계

수급구조상 한·일은 수출의존적인 데 비해 중국은 내수 위주의 수급구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중국시장 확보가 양국 일반기계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범용기계에서는 중국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일본, 독일 등 기계강국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첨단 고급기종인 MC, NC기계를 생산하고 있어 자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변화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의 발전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중국의 변화는 한·중·일 3국간의 급변하는 분업구조 변화속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분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과 철저한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안목의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과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한·중·일간의 FTA 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선행과제라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3국간의 효율적인 산업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중·일간의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중국의 고관세를 국제수준으로 낮추고,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3국간의 무역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주로 마케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기계처럼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별로 심도 있는 시장분석이 요구된다.

향후 한·중·일간의 FT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국간의 효율적인 분업구조 형성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3국간의 비교우위분야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인증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또한 핵심부품의 독자적인 개발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의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다. 자동차

3국간의 FTA를 상정할 때, 3국간 자동차산업의 이슈 및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3국간 자동차 교역은 3국간의 생산량을 고려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이 세계 2위, 중국이 4위, 한국이 5위의 생산 대국인 데 비해서 3국간 역내의 수출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완성차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중간에는 완성차의 교역이 거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일간에도 극히 교역이 부진한 실정이다. 일·중간에는 중국의 수입이 일반적으로 많은 등 아직 분업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부품의 경우에는 완성차보다는 교역이 활발하다. 그러나 아직 부품의 경우에도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교역이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우리 부품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의 대세계 교역에서 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대일 교역에서는 6.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일본에는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흑자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대중국 교역에서 일본과의 경쟁을 극복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업체의 활발한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한·중·일 3국의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어 너트 크래커의 위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역내 투자의 비대칭성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의 3국간의 투자도 일본이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중심이며,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한국의 외국인투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의 대일 투자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며, 한·중간에도 우리가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는 있으나 아직 양국간에 그다지 투자가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다.

넷째, 전술한 바와 같이 3국간에는 상당한 경쟁력 격차가 존재하며, 아직도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한·일 양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국간에 이른 시간내에 FTA 논의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따라서 3국간의 자동차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3국간 FTA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2국간 혹은 3국간 산업협력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라. 전자

최근 들어 전자산업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먼저 품목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한·중·일 3국은 전자산업 전체의 수급상황에서 3국 모두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상태이고, 특정품목의 경

우 수급상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3국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3국 상호간 교역 및 교역의존도 증대 측면에서 볼 때도 새로운 형식의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전자산업 관련제품 수출입에서 3개국 모두 상대 2국에 대해 수출에서는 17~20%를, 수입에서는 1/3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산업은 기술력 있는 세계적 기업들만 생존하는 무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세계동향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의존도가 증대하고 있어 투자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도 3국간 협력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행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협력관계 구축시 실질적으로는 일·중간 협력체제로 변질되어 기술력이나 시장규모, 임금 등에서 불리한 우리의 입지가 불명확해지고, 결국에는 전자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에 뒤지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분업관계보다 일·중 분업관계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일 또는 한·중보다는 일·중간 산업의 보완관계가 보다 완벽하고, 일본의 기술개발 및 해외생산전략, 한·일 FTA에 대한 태도 등으로 볼 때도 기술이전이나 투자협력,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기존의 협력범위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자산업은 특정 단일품목에 국한되지 않은 복합기술 성격이 강하고, 전자산업 전반이 기술에 의한 세계 경쟁체제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3국에 국한된 협력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에서 진행되는 핵심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은 사실상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전자산업 분야별 육성정책에서도 국가별 전략에 차이가 있어 포괄적 협력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하더라도 각자 자국의 경제발전전략이

나 육성정책의 목표가 상이할 경우 협력효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해외생산비중이 높은 전자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협력의 실익과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중국의 전자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시장 전망 등이 불확실한 관계로 중국과의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모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마. 철강

철강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한·중·일간 경쟁력 격차가 작고 무역장벽도 높지 않은데다 한·일간에는 WTO협정에 의거 2004년에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중·일 FTA 체결의 무역확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철강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설비투자경쟁으로 한·중·일간 중복투자, 과잉설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중·일간 FTA는 상호간의 이해를 비교적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효율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 역내 2국간 또는 3국간 FTA 형성은 상호 수급관계에 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생산량 조정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만일 포괄적인 FTA 체결이 어렵다면 FTA에 앞서 한·중·일 3국간 철강산업부문을서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수요량 예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FTA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기반 강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수요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특히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설비의 생산성 및 효율성에 의해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는 점

을 고려하여, 한·일 또는 한·중·일 FTA에 대비하여 과잉설비 해소, 부실기업 정상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균형적 시장구조 및 효율적 생산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바. 석유화학

최근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값싼 원료를 배경으로 한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공세와 수입국이던 동남아국가들의 수출국 전환, 선진국기업들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IT, BT 등 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신화학기술 도입 등으로 급속한 시장여건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생산과잉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국내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자급도를 올려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대외적 도전과 대내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국은 기술우위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과 자본협력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에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문제의 부각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3국의 공동대응도 필요하다.

4. 한·중·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한·중·일 섬유산업 관련 사항의 분석결과 역내 시장성 확보, 상호 의존성, 역외 경쟁력 등에서 FTA 결성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간 FTA가 추진될 경우 섬유산업에서는 비관세장벽 및 원산지협상이 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

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간 FTA가 결성되면 3국간 섬유산업 분업구조 특성에 따라 3국 모두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상호 FTA가 결성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상호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직접투자 등 산업 협력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체결되고 상호간의 무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개개 국가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기업이 발생한다. 한·중·일 가운데에는 한국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화섬장섬유사, 화섬원료, 화섬장섬유직물 등의 생산업체들, 그리고 일본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화섬단섬유직물, 모직물, 면직물 생산업체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후설비 폐기시 세제지원 등이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한편 섬유산업에는 품목별로 노동집약 품종에서 자본·기술집약 품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바 FTA 체결 혹은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여타 산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일반기계

먼저 시장접근 원활화와 관련하여 일반기계 산업분야에서 한·중·일 간 공통적인 무역·투자장벽으로는 부품이나 제품의 기준·인증제도 및 품질수준 차이로 인한 부품·제품의 호환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전 분야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비관세장벽 해소에 3국의 공동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먼저 제도적 장애요인으로서 무역 제한과 할당, 관세와 무역 관련 행정조치의 복잡성, 위생규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라이선스, 그리고 정부정책적 대응상 문제로는 정책의 미흡·불투명, 보호주의, 정부조직의 복잡, 느린 행정시책, 불공평·부패, 끝으로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는 문화적인 차이, 상관습의 차이, 언어의 차이, 정보의 부재, 배타적인 문화 등의 해소·완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한·중·일간의 상호 무역과 시장접근을 더욱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 및 규제 전달경로의 신속화, 통관·검사·검역제도에 관한 훈련시스템 구축, 무역마찰 조기경보 시스템을 창설·운영, 민간사업자의 이동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조정과 관련하여 일반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은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업종 전문화, 대기업과 하청기업과의 협조시스템 구축에 있다. 일반기계산업의 경우 그 동안 기술 도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한편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인투자는 확대될 것이나 이것이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경쟁력 강화에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기술격차로 인한 한·일간 분업구조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FTA의 대안으로서 한·중·일간 기계류에 대해서만이라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일본의 기술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만큼 기준·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준·인증제도를 정비가 MRA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자본재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강화에 연계되는 방향으로 일본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기계산업의 한·중·일간의 FTA 추진은 3국간의 심한 기술격차, 경제사회 시스템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조만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3국간의 FTA 추진은 먼저 가능한 국가끼리 2국간의 FTA를 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일 것이다. 즉 가장 가능성이 가장 큰 한·일

간의 FTA를 추진하고 한·중, 일·중간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FTA 체결 상대국인 한·중·일 3국의 심도 있는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고 3국간의 컨센서스, 특히 중국의 이해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3국간의 FTA 체결 없이도 경제발전에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한·중·일간의 FTA 추진은 서두를 필요 없이,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데 국가적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중·일간의 FTA 체결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기계산업에 대한 미미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투자촉진협의를 구성하여 상호투자제약요인을 발굴·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체결 전에 한·중·일 3국간 부품의 호환성 제고와 공용화를 위한 3국간 협력, 특히 일본의 대한국, 대중국 산업기술협력이 선행되어 보다 고도화된 형태로 일본과 제품차별화 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 자동차

중국은 WTO 가입으로 각종 장벽이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 규모는 2003년에 400만 대, 2005년에 530만 대, 2010년에 700만~800만 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향후 중국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일본의 활발한 중국 진출 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일 FTA시 자동차분야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일본과 중국 위주의 협력관계가 전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3국간 산업협력 기반의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부품의 공통화, 표준화, 모듈화 추진 ② 3국간 부품 구매네트워크 통합추진과 품질 인증제도의 표준화, ③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④ 외자계 기업을 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추진, 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우리의 코어 컴피턴스 배양·강화, ⑥ 산업구조 조정 및 퇴출을 대비한 부품기업의 대형화·전문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로서는 한·일 FTA보다는 한·중·일 FTA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산·관·학 공동대책반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차분야는 각국의 중요 기간산업으로서 한·중·일 FTA 논의는 특히 중국의 여건 미비로 인해 시간이 걸릴 것(2006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으로 생각되며, 설사 교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외품목으로 지정되거나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전자

전자산업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중·일 3국의 전자산업 관련 협력정책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글로벌 차원의 방향정립과 3국 공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본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자산업의 영역 확대 및 국제적 기술력 경쟁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협력만으로는 전자산업의 무한경쟁에서 생존이 어려우므로 3국이 세계 전자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표준화 등 협력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일 FTA는 한·중·일 FTA의 추진전략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일 FTA는 한편으로 중국의 추격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도 작용해야 하므로 기술이전이나 공동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

어야 한다.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일 FTA를 활용하여 최소한 일본과 중국의 협력 확대로 한국의 입지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협력체제 구축시 국가별, 산업별, 주요 품목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 협력방향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일본의 대중국 전략, 해외생산전략 및 한·일 FTA에 대한 접근 정책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여타 산업보다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산업분야에서 우선적으로 FTA에 준하는 한·중·일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거나 기술력 열세를 면하지 못하는 품목 등은 일정한 보호책 마련과 함께 FTA에 따른 이익이 상호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시나리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각 부문 주요 업종별로 나타날 효과와 사례연구 및 관련업계의 제안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적·장기적 전략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는 물론 상대방 국가의 전략과 대응시스템에 걸맞은 추진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마. 철강

국내 철강산업은 현재 일관제철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수강 및 전기로업계의 열위 등 업종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업종간 전문화·계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설비의 폐기 및 해외매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국내 철강산업은 높은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향후 저성장시대 도래에 따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일, 한·중 철강업체간 산업협력을 전략적으로 mix시키면서 강화해 나가는 것 또한 FTA 시대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현재 한·일 양국의 철강산업은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일 FTA가 철강업체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체결 이전에 상호 기술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포항중합제철과 新日本製鐵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포괄적인 제휴를 양국 철강업체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양국간 철강분업구조의 고도화에 이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휴의 내용 면에서 상호 기술공급, 제품유통은 물론 철강원료의 공동구입, 설비조정협력 등도 협력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철강산업은 한·중·일간 경쟁과 협력의 비중이 높아질 것인바 품목, 경쟁상황, 협력의 목적 등에 따라 한·중연합과 한·일연합을 전략적으로 mix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바. 석유화학

한·중·일 3국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단계와 수급상황, 기술수준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강해 상호간 분업관계 구축을 통해 시장여건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3국간 상호 투자와 기술협력,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 구조조정 촉진, 규모의 경쟁력 제고 등을 실현한다면 이러한 시너지 효과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FTA는 관세철폐를 통한 역내 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나, 전반적인 공급과잉 상황과 중국의 생산기반 확대를 고려할 때 경쟁의 격화로 영세업체의 도태 등 가속적인 구조조정을 수반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공동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

가는 한편, 기술개발로 범용제품 위주에서 고급제품 위주로 발빠르게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업체들의 폐쇄적인 상관행에 대응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아울러 환경문제에 중국, 일본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5. 결론 및 시사점

한·중·일의 雁行形(flying geese model) 발전구조 붕괴, 디지털경제의 도래, 지역블록화의 확산 등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한·중·일간 산업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최근 엔화와 한·중의 산업발전 등을 배경으로 일본을 주체로 한 직접투자, 기술제휴 등의 전략적 제휴 등 산업협력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산업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관세·비관세장벽과 함께 일본과 한국 및 중국간 산업기술격차가 산업협력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제약요인의 감소로 적어도 양적인 규모에 관한 한 산업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요인들의 감소추세, 한·중·일간 지리적 근접성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3국간 산업협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일간 산업내분업의 확대과정에서 3국간 경합분야가 많아지고 있고 석유화학 등의 일부 산업에서는 과당경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중의 부품산업 취약, 구미업체에 비해 3국 기술의 열세와 일본의 구조개혁 지연 등이 3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한·중·일의 산업별 및 산업간 관계의 주요 지표를 제시한 것이 <표3-3>이다.

이에 기존 협력체제의 공통적 문제점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협력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한·중·일 3국 공동의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1국 중심의 산업조정에서 국제적 산업조정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자국 중심의 내포적 산업구조조정에서 동북아 경제권을 고려한 외연적 산업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는 역내 분업구조의 고도화이다. 역내 국가 모두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이어지는 방향으로 산업차원에서 전략적 분업과 기업차원에서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3국간 협력관계의 강화이다. 즉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체제의 차선책으로서 지역주의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FTA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중 첫째나 둘째는 결국 산업협력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산업협력의 중점으로는 다섯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① 3국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표준화·모듈화이다. 이는 디지털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와 함께 공용부품을 시발로 전용부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단계적인 모듈화를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한·중·일간 분업시스템을 유도하는 것이다. ② 21세기형 신산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로서 정보기술(IT)·생물산업(BT), 신소재극미세기술(NT), 신에너지·환경(ET) 등이 유망분야라 할 수 있다. ③ 3국간 과당 경쟁 및 공급과잉의 조정이다. 석유화학 이외에도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여타 장치산업에서도 한·중·일간 과당경쟁과 공급과잉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에 한·중·일간 전략적 제휴 또는 합의적 분업차원에서 투자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한·중·일 지방간(Local to Local 또는 Region to Region) 산업협력이다. 한·중·일간 실질적인 경제·기술협력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협력방안을 한·중·일의 해당 지자체간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한·중·일간 산업협력협약체 운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중, 한·일, 일·중간 각종 민·관의 협의체를 한·중·일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칭 ‘동북아 경제협력기구 산업장관회의’에서 특정사항의 의제로 상정될 경우 하부전문가그룹이 보고서 작성→ 이를 토대로 산업장관회의 개최→ 각 당사국 정책에 반영시키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표 3-4>는 한·중·일 산업별 대응과제 및 방향을 제시해 본 것이다.

<표 3-3> 한·중·일의 산업별 주요 비교지표

	수출비율 (%)			수입 의존도(%)			경쟁력						산업내 분업			무역장벽		
							가격·비가격			현시 경쟁력지표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중	중·일	한·일	한	중	일
섬유	◎	◎	▷	○	○	▷	○	◎	▷	○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	○	▷	◎	○	▷	◎	○	◎	▷
자동차	◎	▷	◎	▷	▷	▷	○	▷	◎	○	▷	◎	▷	▷	○	○	◎	▷
전자	-	-	-	-	-	-	○	▷	◎	◎	○	▷	○	◎	○	○	◎	▷
철강	○	▷	○	○	▷	▷	○	▷	◎		○	◎	○	◎	▷	○	◎	▷
석유화학	◎	○	○	○	◎	▷	○	▷	◎	○	▷	◎	○	▷	◎	◎	○	▷

주: ▷ 낮거나 작음, ○ 높거나 큼, ◎ 매우 높거나 큼.

<표 3-4> 한·중·일 산업별 대응과제 및 방향

	시장접근성 확대	FTA의 영향		산업내분업 촉진		
		무역	산업협력	분업확대	분업구조 고도화	산업조정
섬유	◎	◎	○	○	◎	○
일반기계	○	○	◎	○	◎	○
자동차	○	○	◎	○	○	○
전자	○	○	◎	○	◎	○
철강	○	○	◎	○	◎	◎
석유화학	◎	○	○	○	○	◎

주: ○ 크거나 중요, ◎ 매우 크거나 중요.

끝으로 산업협력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 못지않게 산업협력의 촉매제로서 한·중·일 FTA를 활용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즉 산업협력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역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잔존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 및 기준·제도의 조정 및 통일(cooperation & convergence)이 필요하다. 다만 산업협력 가운데는 산업기술협력과 같이 공공베이스의 성격이 짙은 산업기술협력은 FTA의 사전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섬유>

- 박 훈. 2002a. 『미국시장에서 주요 수출국들의 경쟁력분석과 우리 섬유산업의 대미수 출확대전략』. 산업연구원.
- _____. 2002b. 『섬유산업의 한·중 경쟁력비교 및 중국진출 확대방안』. 산업연구원.
- 섬유패션미래전략기획단. 2003. 『섬유·패션산업의 새로운 도전』.
- 『日本紡績月報』. 각호.
- 日本化學纖維協會. 『纖維ハンドブック』. 각호.
- 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研究所. 『中國工業發展報告』. 각년호.
- Textiles Intelligence. *Textiles Outlook International*. 각호.

<기계>

- 신태용 외. 2002.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협력 방안의 연구』. 산업연구원.
- 재정경제부. 2003.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현황』.
-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2003. 『중국 기술경쟁력 건설기계』.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3a. 『기계산업편람』.
- _____. 2003b. 『기계산업무역통계연보』.
- 經濟産業省. 2003. 『通商白書 2003』.
- 鎌倉 建. 2002. 『産業集積の地域經濟論』. 勁章書房.
- 機械振興協會經濟研究所. 2003. 『東アジアにおける日韓機械, 部品産業の關係展望調査報告書』.
- 稻壇 清. 2003. 『中國進出企業地圖』. 蒼蒼社.
- 木村 福成·鈴木 厚. 2003. 『加速する東アジアFTA』. ジェトロ.
- 阿部 一知·浦田 秀次郎. 2002. 『中國のWTO加盟と日中韓貿易の將來』. 日本經濟評論社.
- 日本競争研究センター. 2002. 『アジア研究報告書, 擴大する自由貿易協定と日本の選擇』.
- 日本機械工業連合會. 2003a. 『機械統計要覽2003』.
- _____. 2003b. 『東アジア機械産業競爭力調査報告書(II)』.
- _____. 2003c. 『日本の機械工業が再活性化するための方向性に關する調査』.
- 日本機械輸出組合. 2002. 『中國主要機械産業の國際化動向』.
- _____. 2003. 『アジア市場における中國機械企業の戰略展開』.

-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問題研究會. 2003. 『日本製造業復活の戰略』, ジェトロ.
 綜合研究開發機構. 2003. 『NIRA政策研究, 經濟統合の深化を通じた東アジア經濟の進むべき方向』.
- 海外投融資情報財團. 2002. 『中國の産業力』, 蒼蒼社.
 荒木 一郎·西 忠雄. 2003. 『全譯 中國WTO加盟文書』, 蒼蒼社.
 JETRO. 2003. 『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 2003年版』.
- 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研究所. 2002. 『中國工業發展報告(2002)』, 經濟管理出版社.
 _____. 2003. 『中國工業發展報告』, 經濟管理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3. 『中國統計年監2002』, 中國統計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 2002.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2002』, 中國物資出版社.

<전자>

- 김학기·이문형·이석기. 2003. 『한·중 산업기술 및 정책 비교』, 산업연구원.
 김홍석·김학기·이문형. 2003. 『중소기업의 대중국 진출 방안』, 산업연구원.
 신태용·김학기. 2001.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시장 활용방안』, 산업연구원.
 _____. 2002. 『한·중·일간 효율적 산업협력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신태용·김학기 외. 2001.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의 연구』, 산업연구원.
 유관영·김학기 외. 2001. 『한·일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http://www.ksia.or.kr>.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정보. <http://www.koreaexim.go.kr>.
 한국전자산업진흥회. <http://www.eiak.org>.
 _____. 『전자산업통계』, 각년호.
 競爭力戰略會議. 2002. 『第7回 産業競爭力戰略會議參考資料集』.
 經濟産業省. 2002. 『第31回 2001年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日本貿易振興會. 2002. 『ジェトロ投資白書』.
 株式會社 富士通 綜合研究所 經濟研究所. 2002. 『中國における外國企業の活動實態と今後の展望に關する調査』.
 蒼蒼社. 2003. 『全譯 中國 WTO 加盟文書』.
 丸川知雄 編. 2000. 『中國産業ハンドブック2001-2002年版』, 蒼蒼社.

APEC Tariff Database. <http://www.apectariff.org>.

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철강>

- 한국철강신문·한국철강협회. 2002. 『鐵鋼年鑑』.
- さくら総合研究所. 1999, 2000. 『アジア主要産業の回顧と展望』.
- 野村総合研究所. 2001. 『韓・日 産業比較에 관한 内部資料』.
- 伊藤元重. 2003. 『日中關係の經濟分析』. 東洋經濟新報社.
- 日本 經濟企劃廳. 2000. 『政策效果分析レポート』.
- 日本 經濟産業省. 2001. 『鐵鋼業の競争力強化と將來展望』.
-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2003. 『中國研究報告書』.
- 日本機械輸出組合. 2002. 『各國・地域の貿易・投資上の問題点と要望』.
- 日本鐵鋼聯盟. 2002. 『鐵鋼要覽』.
- 日中經濟協會. 2001. 『日中經濟ジャーナル』.

<자동차>

- 관세청. 2003. 『관세율표』.
- 산업자원부. 2003. 『한·중 기술경쟁력 연구 - 중소형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3. 『2003 한국의 자동차산업』.
- 한국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2003. 『자동차산업편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3a. 『2003 세계자동차 산업』.
- _____. 2003b. 『2003 한국자동차 산업』.
- 經濟産業省. 2002. 『技術調査レポート-東アジアの技術力について』.
- みずほ総研研究所. 2003. 『中国自動車 市場の現状と行方』. みずほアジアインサイト.
- 日経ビジネス. 2003. 『特集自動車王国ニッポンの挑戦』, pp. 30-59.
- 日刊自動車新聞社. 2000. 『自動車産業ハンドブック2001年版』.
- 日本自動車工業協会. 2003a. 『2003 日本の自動車工業』.
- _____. 2003b. *Motor Vehicle Statistics of Japan*.
- 中国汽車技術研究中心 外. 2002. 『中国汽車工業年鑑 2001』.
- 中小企業金融公庫調査部. 2003. 『大手自動車メーカーの中国進出と中小部品産業への影響と対応』.
- FOURIN. 2001. 『2002 中国自動車・部品産業』.
- _____. 2003a. 『中国自動車部品産業の競争力』.

- FOURIN. 2003b. 「世界最適生産実現へ向け重視される日米欧部品メーカーの中国進出」.
『中国自動車調査月報』, pp. 8-19.
- _____. 『国内自動車調査月報』. 각호.
- _____. 『中国自動車調査月報』. 각호.
- _____. 『海外自動車調査月報』. 각호.
- Power, J. D. 2003a. *Initial Quality Study*.
- _____. 2003b. *Vehicle Dependability Study*.
- JAPIA. 2002. 『自動車部品出荷動向調査(平成13年版)』.

<석유화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한·일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 산업연구원. 1999.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전략: 한 중일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1999. 『한·일 FTA와 신산업정책연구』.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2002. 「제28회 극동 플라스틱업계 간담회 자료」.
- 일본경제통상산업성. 2003. *Forecast of Global Supply and Demand Trends for Petrochemical Products*.
- 日本重化学工業通信社. 2003. 『アジアの石油化学工業』.
- ChemChina.com. 2002. Analysis for Korean PE Products in 2002.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다자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역시 확산·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WTO/DDA 칸쿰 각료회의가 선언문 합의에 실패한 이후 양자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WTO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조차 최근 관련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FTA의 열풍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구도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동아시아의 3국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10월 한국이 칠레와의 FTA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일본이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발효시켰다. 이어 한국과는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ASEAN과는 향후 10년 이내에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도 2002년 11월 ASEAN과 2010년까지 FTA를 발효시킨다는 목표 아래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에는 3국간 FTA 추진을 제의한 상태이다. 또한 태국과는 조기 무역자유화를 위해 2003년 10월부터 20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일 FTA 창설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다. 이 3국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

에서 상호 유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시아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경제체제와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유사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요소도 있어 지역경제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농업은 역내 FTA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농업은 국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부문으로, FTA 추진으로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와 교역이 가속화할 경우 농업경쟁력이 낮은 국가의 농업은 급속하게 붕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의 농업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공유하는 한편 농업 생산물 구성이 유사한 상호 경쟁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 등 농업 생산요소의 부존비율이 국별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단계와 국민소득수준의 격차가 크므로 역내 농업협력을 우호적으로 추진할 경우 호혜적인 발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한국농업에 있어 중대한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중·일 FTA 출범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의 역할과 대응방안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역내 FTA 출범에 따라 역내 농업이 경쟁과 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역내 경제협력의 장애물로 간주되는 농업의 구조분석을 통해 국별 농업 생산요소와 생산성 및 생산물 구성 등 농업 생산여건에 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호혜적 공존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특히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농업분야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역내 수평적 분업 방안을

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역내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동북아지역을 한·중·일 3국으로 한정하고 국별 통계기관에서 발행한 농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특히 일본 관련 자료는 현지 거주인력의 도움으로 최근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관련 자료는 두 차례 현지를 방문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그밖에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FAO 등 국제기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국별 농업 및 경제 개황을 개관하고, 농업 생산요소 부존과 생산물 구성 등 세부적인 농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FTA와 지역경제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비농업분야의 교역구조 분석에 적용되던 국별, 품목별 경쟁성과 보완성에 대한 분석기법을 기초로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및 역내 농업의 경쟁성과 상호 보완성 분석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2. 한·중·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한·중·일 3국의 농림어업 생산액은 약 3,000억 달러가 넘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로 선진국보다는 높고, 개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은 선진국 수준인 반면, 중국은 전형적인 최빈개도국의 수준을 나타냈다. 역내 인구는 14억 5,000만 명으로 세계 지역경제협력체 가운데 최대이며 농가인구는 전체의 56%인 8억 명

이상으로 역시 세계 최대의 농가인구를 갖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총국토면적은 약 1,000만km²이고 그 중 농경지면적은 약 13.6%인 137만km²였다. 국별 농경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18.9%)이 중국(13.5%)과 일본(12.7%)보다 높았다.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0.56ha로 미국(176ha)이나 호주(400ha)는 물론 EU 15개국 평균(18ha)보다도 훨씬 작았다.

한·중·일 3국의 2001년 농산물 수출액은 195억 달러, 수입액은 약 54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액이 연간 3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약 60억 달러의 흑자인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각각 350억 달러와 7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관한 입장이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양분되어 상반된 가운데 중국이 품목별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대외 농업협상에서의 공조체계 구축 등 역내 농업협력에 복합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와 농업에서 일본은 경제규모와 구매력, 특히 농산물 수입에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과 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거대시장으로서 향후 세계 농산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역내 농업 생산과 교역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 주도권을 가질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일 FTA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추진시 일본과 중국의 단순한 중간자 역할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통합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국익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시급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대사의 결정을 주변국들이 결정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표 4-1> 한·중·일 주요경제 및 농업지표(2001년)

(단위: 억 달러,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합계
GDP (1인당, 달러)	4,574 (8,918)	11,558 (909)	41,760 (32,524)	57,892
농림어업GDP (성장률)	199 (1.9)	2,253 (6.1)	668 (0.4)	3,120
농림어업 비중(%)	4.4	22.2	1.6	5.4
인구(만 명) - 농가인구(비중)	4,734 393(8.3%)	127,627 79,563(62.3)	12,691 1,017(8.1)	145,052 80,973(55.8)
국토면적(천km ²) - 농경지(비중) - 호당경지면적	99.5 18.8(18.9%) 1.4(ha/호)	9,597 1,300(13.5) 0.54	378 48(12.7) 1.6	10,075 1,367(13.6) 0.56
수출액 (농산물)	1,504 (15.8)	2,492 (154.5)	4,035 (24.9)	8,031 (195.2)
수입액 (농산물)	1,411 (84.6)	2,251 (97.6)	3,491 (354)	7,153 (536.7)
무역수지 (농산물)	93 (-68.8)	241 (57)	544 (-329)	878 (-341)

자료: 농림부(2003), 『농림업 주요 통계』.

일본 재무성(2002), 『무역통계』.

중국인민은행(2001), 『통계연보』;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한·중·일 3국의 농가인구는 한국과 일본, 중국 모두 감소하였지만 농업생산의 기초단위가 되는 농가 수는 한국과 일본이 감소한 반면 중국은 증가하였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8%로 낮은 편이지만 중국은 6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업 취업자 수는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감소하였다. 노동/토지 비율

인 농업취업자 밀도(1ha당 농업취업자 수)는 2001년 한국이 1.14명, 중국은 2.5명, 일본은 0.6명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체 경지면적이 넓지만 농가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노동/토지 비율이 한국의 두 배, 일본의 네 배를 넘었다. 일본은 취업자 밀도가 한국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아 농업 노동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농경지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2> 농업노동 투입 현황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농가호수(천 호)	1,767	1,354	222,372	244,322	3,835	3,072
농가인구(백만 명)	6.66	3.93	841.4	795.6	17.3	10.2
호당인구(명)	3.79	2.89	3.78	3.26	4.51	3.31
농업취업자(백만 명)	3.1	2.1	333.4	324.5	4.1	2.9
취업자밀도(명/ha)	1.53	1.14	3.49	2.50	0.86	0.60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중국통계출판사(2002),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촌통계연감』.

농경지 면적은 한국과 일본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파종면적인 경지이용면적도 한국과 일본은 감소한 반면 중국은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경지이용률이 100% 이하로 하락하여 휴경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국은 소규모 영농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한국이 1.39ha, 일본은 1.56ha, 중국은 0.53ha로 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1ha 미만의 농가비율이 93.0%로 높았다.

〈표 4-3〉 농경지 현황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국토면적(천ha)	9,926	9,954	959,696	959,696	37,774	37,788
경지면적(천ha)	2,109	1,876	95,673	130,040	5,243	4,794
경지이용면적(천ha)	2,409	2,089	148,363	155,708	5,349	4,520
경지이용률(%)	113.3	110.6	155.1	120.2	102.0	94.3
호당 면적(ha)	1.19	1.39	0.43	0.53	1.37	1.56
- 논	0.76	0.85	0.11	-	0.74	0.85
- 밭	0.43	0.54	0.32	-	0.63	0.71
1ha 미만 농가(천 호)	1,027*	828*	-	-	1,762**	1,335**
(비중)	(58.9)	(62.0)	-	93.0 1)	(59.3)	(58.3)

주: * “경종 외 농가” 제외, ** “자급적 농가” 제외.

1) 1996년 센서스 결과(서종혁 외 2001, p. 28에서 재인용)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연도; 농수산물유통공사(2001), 『중국농산물무역핸드북』.

일본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중국통계출판사(2002),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촌통계연감』.

중국농업출판사(1999), 『중국농업통계자료』.

농기계를 포함한 농가 평균 고정자본액은 3국 모두 증가하였다. 중국의 고정자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호당 고정자본액은 아직도 일본의 26분의 1,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농업부문의 위축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유인이 사라져 최근 농업분야의 고정자본은 감소 내지 정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생산요소들의 상대적 부존비율인 자본/노동 비율(자본장비율)은 2001년 한국이 8,550달러, 중국 359달러, 일본은 9,370달러였다. 자본/토지 비율(자본집약도)은 한국이 1,777달러, 중국 221달러, 일본 1,989달러로 나타났다. 중국의 자본장비율과 자본집약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과 일본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동과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자본액이 낮은 수준이다.

<표 4-4> 농업 자본 투입 현황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비료(kg/ha)	458	343	175	273	344	343
호당 트랙터(대) ¹⁾	0.45	0.83	0.04	0.06	1.13	1.0
호당고정자본(달러)	14,823	24,699	694	1,172	24,892	31,020
자본장비율(달러)	3,911	8,546	184	359	5,519	9,371
자본집약도(달러)	1,245.6	1,777	161.4	221.1	1,817	1,989
벼농사 기계화율(%)	62.3	86.2	-	36.42)	100	100

주: 1) 경운기와 소형 트랙터 포함, 2) 2000년 경운(65.2%), 파종(25.8), 수확(18.3%)
작업의 평균임.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연도; 농수산물유통공사(2001), 『중국농산물무역핸드북』.

일본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중국통계출판사(2002),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촌통계연감』.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농업의 토지생산성은 한국이 832달러로 중국은 물론 일본보다도 높았으며 중국은 217달러, 일본은 542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은 실제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실제 생산성 자체가 감소했고, 중국은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토지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은 그만큼 중국, 일본보다도 토지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8,200달러, 중국은 870달러, 그리고 일본은 18,100달러였다. 한국은 중국의 약 9배, 일본은 중국의 21배나 되어 환율 변동에 의한 편차를 감안해도 노동생산성의 국별 격차가 요소생산성 가운데 가장 컸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국별 격차는 1990년의 14배와 42배에 비해 줄어들었다.

자본생산성은 한국이 0.47, 중국이 0.98, 그리고 일본은 0.27로 나타나 중국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았다. 한국의 자본생산성은 1990년에 비해 33%나 감소하여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일본의 자본생산성도 29% 감소한 반면 중국의 자본생산성은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투자의 한계효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요소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토지생산성은 한국이 가장 높고 중국이 가장 낮았으며, 노동생산성은 일본이 가장 높았고 중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본생산성은 중국이 가장 높고, 한국, 일본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소규모 영농구조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요소의 부존비율이 상이하어 각국이 한 가지 요소의 생산성은 가장 높은 상호 보완적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역외국과의 교역으로 생산물의 상대가격이 변화할 경우 국별 요소생산성 우위가 변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표 4-5〉 농업 생산성(농가경제지표) 현황

구 분	한국		중국 ¹⁾		일본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토지생산성(달러)	872.3	831.7	158.6	217	692.7	542.3
자본생산성	0.70	0.47	0.98	0.98	0.38	0.27
노동생산성(달러) ²⁾	6,142	8,212	445	870	18,601	18,106

주: 1) 중국의 토지 및 자본생산성은 농업부문 GDP를 경지면적과 고정자산으로 나누어 산출

2) 노동생산성은 농림업 GDP를 농림업 취업자 수로 나누어 산출

* 토지생산성은 10a당 생산액, 자본생산성은 자본액당 생산액, 노동생산성은 1인당 연간 생산액임.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연도; 농수산물유통공사(2001), 『중국농산물무역핸드북』.

일본 농림수산물통계정보부, 『농림수산물통계』, 각 연도.

중국통계출판사(2002),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촌통계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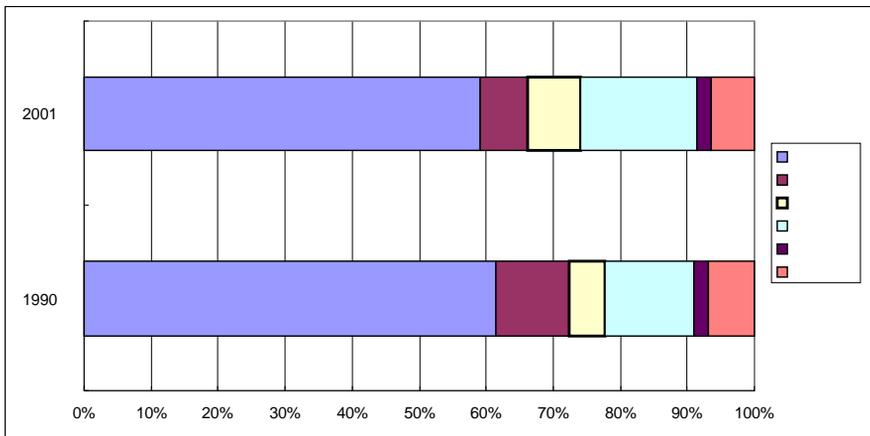
중국농업출판사(1999), 『중국농업통계자료』.

라. 농업 생산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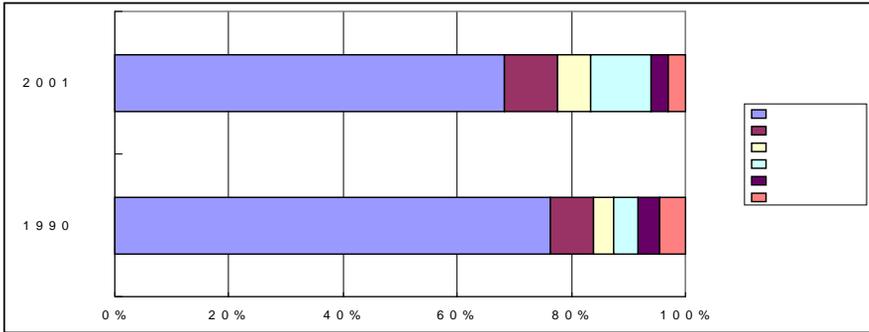
한·중·일 3국의 식량작물 경작면적은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품목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특히 중국은 식용작물 비중이 70%에 달해 아직도 주식 자급이 중요한 현안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품목의 경작면적은 국별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모든 작물의 경작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면화를 제외한 모든 작물의 경작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채소류와 과실류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유지류와 특용작물의 경작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채소류의 경작면적 증가는 주로 시설채소 재배면적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상당 부분 대일 수출용 채소재배를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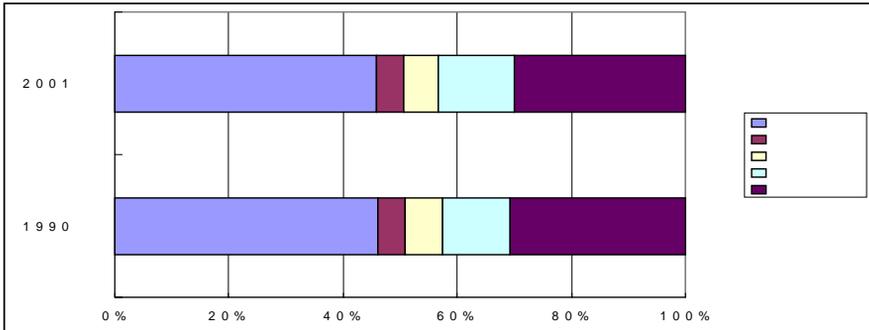
<그림 4-1> 한국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그림 4-2〉 중국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그림 4-3〉 일본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도 국별로 서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쌀과 소맥 등 대부분의 곡물 생산량은 3국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옥수수과 대두, 유지작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두와 우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급률도 낮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류와 유지류 생산이 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어 자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채소류와 과일류 생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축산물에서도 돼지고기와 육계 및 우유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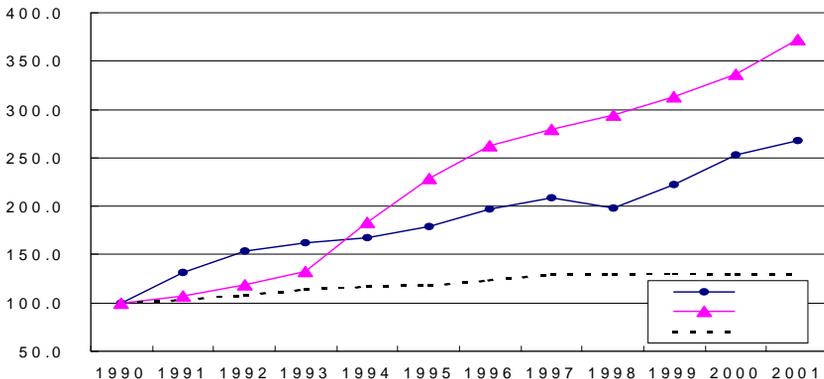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2001년 국별 농촌노임지수는 1990년 기준 중국이 372.6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129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267.7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을 나타냈다. 중국의 농촌노임지수가 가장 높다는 사실은 저렴한 인건비에 바탕을 둔 중국의 농업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이다. 한편 한국의 농촌노임지수도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의 화학비료가격지수 변화는 국별 화학비료 투입량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비료가격 안정이 비료투입량의 일정수준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은 비료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입량이 감소하였다. 중국도 비료투입량이 증가한 것은 비료가격이 1990년에 비해서는 상승하였지만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변화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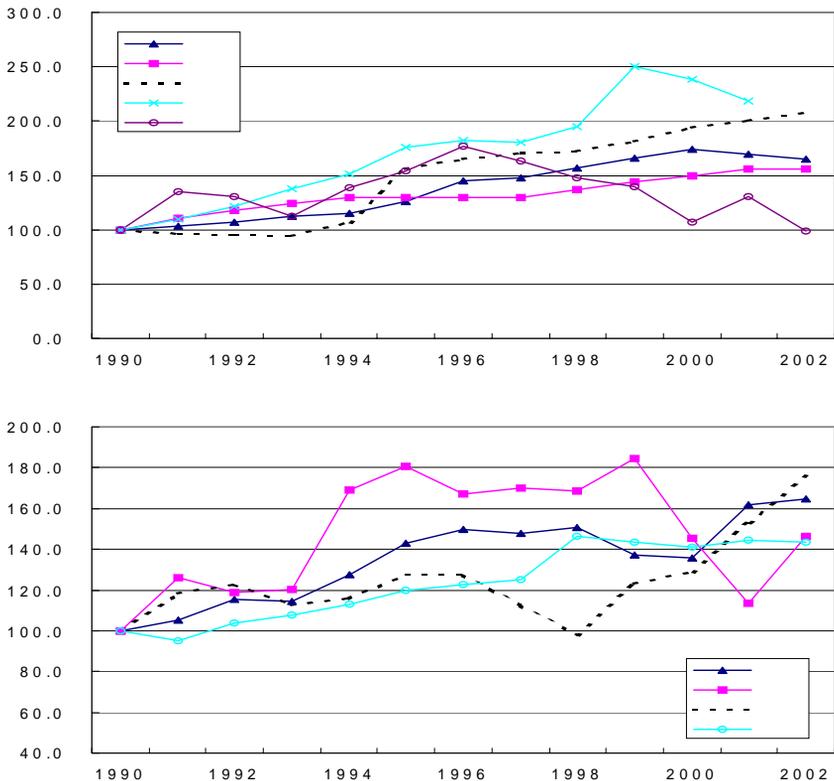
<그림 4-4> 한·중·일 농촌노임 변화 추이



나. 농산물가격

한국의 농산물 품목별 농가판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쌀을 제외한 곡물류 생산은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 가격상승에 따라 생산이 증가한 품목은 채소류와 과실류, 그리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및 우유이며, 쇠고기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잡곡류와 쇠고기 등의 수입으로 인해 가격변화가 국내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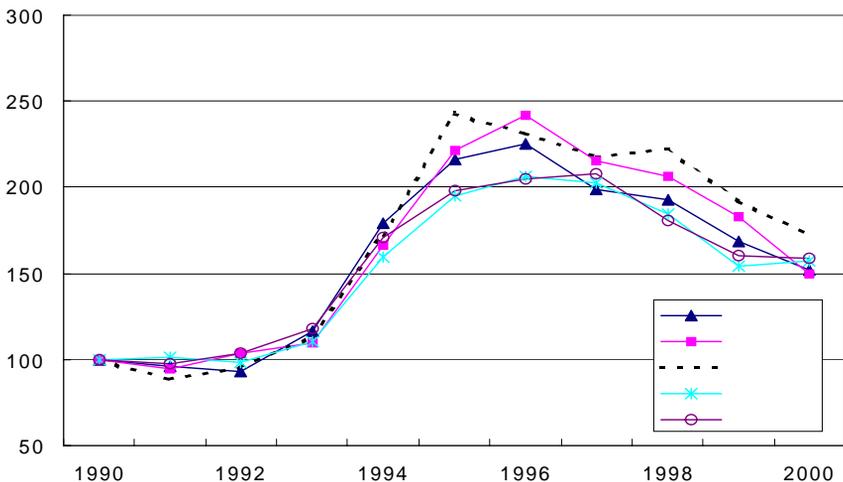
<그림 4-5> 한국의 농가판매가격지수



중국의 농산물 수매가격지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아니지만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하는 가격으로서 결과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곡물류 수매가격의 변동은 생산량 감소와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쌀과 소맥의 경작면적 및 생산량 감소는 수매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옥수수의 경작면적과 생산량 증가는 옥수수 수매가격이 다른 곡물류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매가격 책정은 농민들의 생산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채소류와 과실류 등 경제작물과 축산물의 가격변동은 생산량 증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작물과 축산물은 가격하락폭이 곡물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수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 및 사육두수와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 품목들은 정부의 수매가격 외에 시장가격이나 수출가격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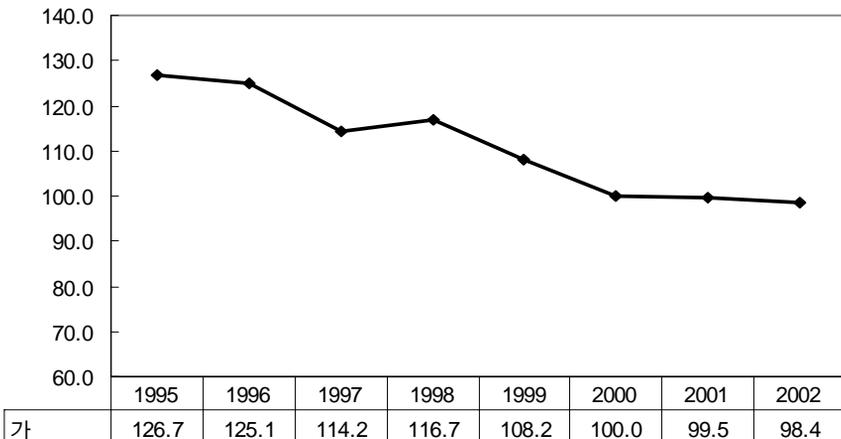
<그림 4-6>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매가격지수



일본의 쌀 경작면적과 생산량 감소는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맥을 같이한다. 일본의 정부미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쌀 생산량도 당분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 생산량 감소도 가격하락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일본의 채소류 농가판매가격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소비감소와 수입채소증가로 인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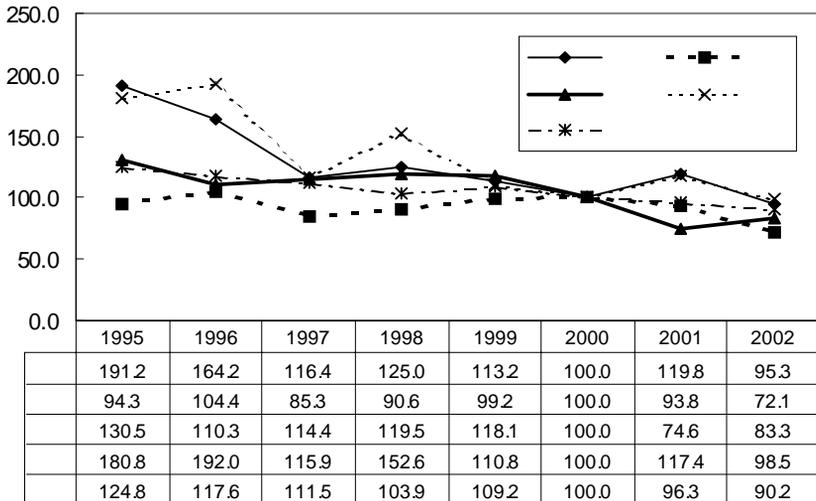
과실류도 생산량 감소가 가격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실류 농가판매가격은 밀감과 사과, 감, 포도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고 있다. 육류 농가판매가격도 하락하였다. 쇠고기와 비교적 소비가 안정된 돼지고기, 닭고기의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7> 일본의 쌀 가격지수(2000년=100)



자료: 農林水産省, 『平成14年 農作物價指數』(www.maff.go.jp).

<그림 4-8> 일본의 주요 품목별 과수가격지수(200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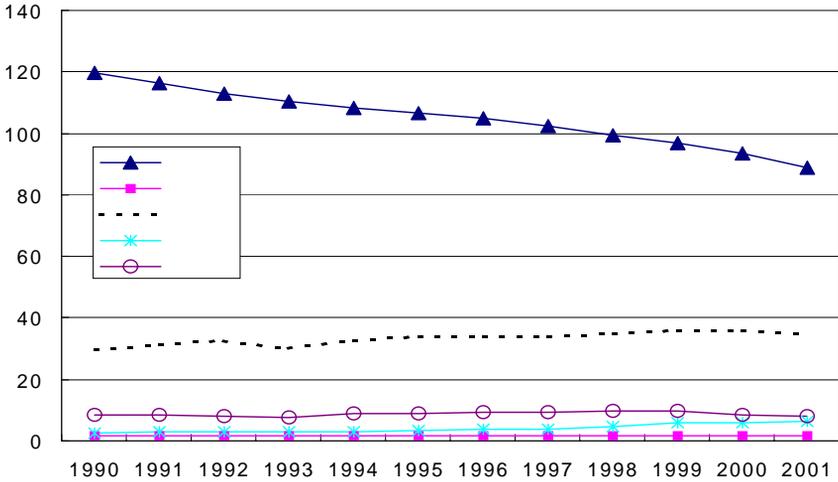


자료: 農林水産省, 『平成14年 農作物價指數』(www.maff.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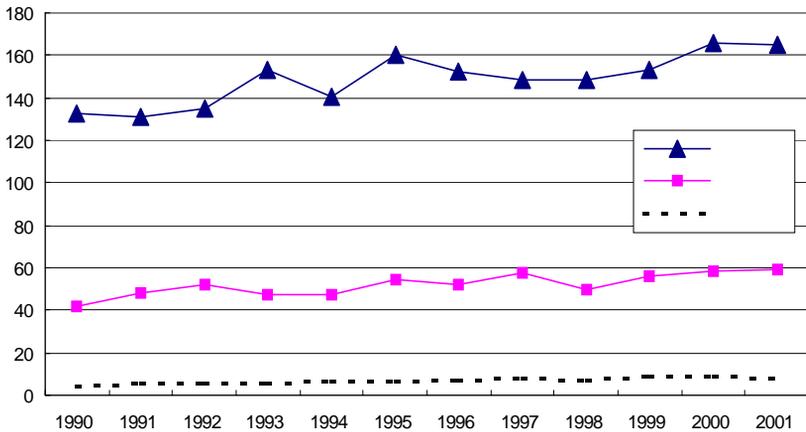
다. 농산물 소비

한국의 농산물 생산은 소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인당 곡물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채소 및 과실과 육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설채소와 배 등 소비가 증가한 품목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육류 소비량도 유럽 및 일본지역의 광우병 여파로 위축되었으나 이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는 소비량 증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여 생산량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림 4-9> 한국의 1인당 양곡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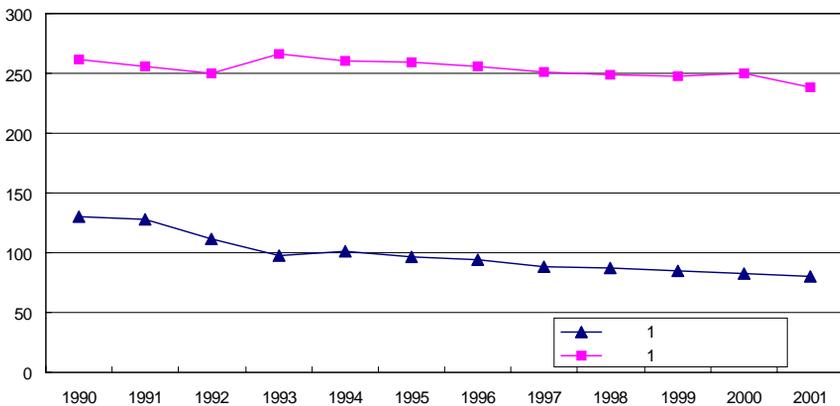
<그림 4-10> 한국의 채소, 과일 및 육류 1인당 소비량



중국은 최근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순증가인구가 약 1,0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촌인구는 감소

하는 반면 도시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소비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품목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지만 총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증가는 이러한 소비량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류소비는 사료용 곡물 생산까지 증가시켜 과급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농촌주민의 육류 소비량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모든 종류의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1> 중국의 1인당 식량 소비량



<표 4-6> 도시와 농촌주민 1인당 식품 소비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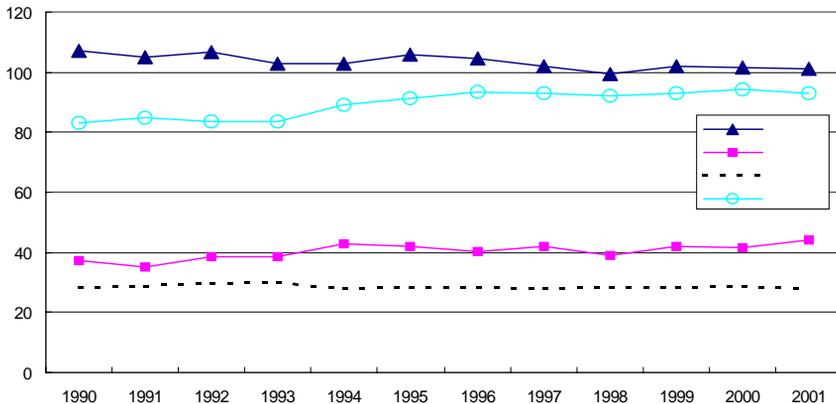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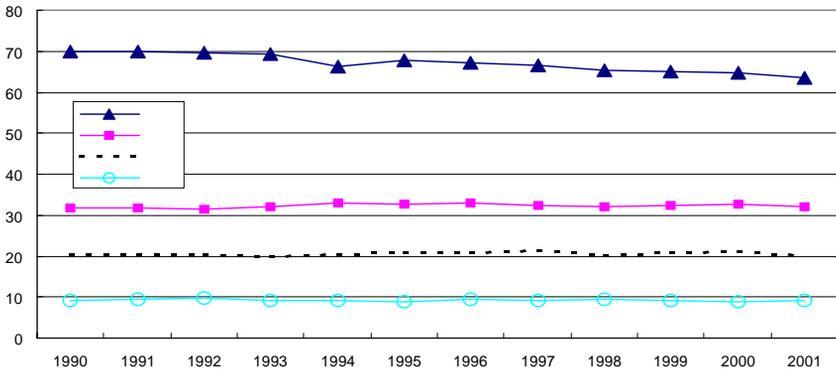
(단위: kg/년)

	곡류		채소		식용유		육류		가금		수산물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985	257.0	134.8	131.1	144.4	4.0	5.8	11.0	18.7	1.0	3.2	1.6	7.1
1990	262.0	130.7	134.0	138.7	5.2	6.4	11.3	21.7	1.3	3.4	2.1	7.7
1995	258.9	97.0	104.6	118.6	5.8	7.6	11.3	19.7	1.8	4.0	3.4	9.2
2000	249.5	82.3	112.0	114.7	7.1	8.2	14.6	20.1	2.9	5.4	3.9	9.9
2001	238.0	79.7	109.3	115.9	7.0	8.1	14.5	19.1	2.9	5.3	4.1	10.3

자료: 『중국 농업발전보고』(2000), 『중국통계연감』(2001, 2002).

일본의 1인당 농산물 소비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쌀을 비롯한 곡물류 소비량은 물론 채소류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다. 육류 소비량은 1990년대 후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한 품목군은 과일류와 유제품이지만 소비량이 증가한 품목도 국내 생산품목보다는 수입과실인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일본 농업생산량 감소는 국내산 농산물 소비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2> 일본의 농축산물 1인당 소비량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동북아 경제협력체 출범에 대응하여 역내 국가간 농산물 교역의 국가간 보완성과 경합성을 계측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한·중·일 3국간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3국간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을 분석하였다.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국별 산업 중분류(HS-2 단위) 23개 품목별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총수출액대비 농산물 수출비중과 농산물 총수출에 대한 역내 수출비중을 계측하였다. 농산물 수출비중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낮아졌지만 일본은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의 농산물 수출의존도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액대비 품목별 비중은 1998년 육류와 육어류 조제품, 곡분 및 베이커리 제품이 높았다. 그러나 2002년에는 육류가 낮아진 반면 담배와 술, 조제식료품 등 가공농산물의 비중이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의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비중은 1998년 곡물류와 채소류, 육어류 조제품이 높았다. 그러나 2002년에는 추가로 채소조제품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중국도 점차 가공식품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수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비중은 1998년 조제식료품과 육어류 조제품 및 담배, 술 등 가공농산물 위주로 높게 나타났다. 2002년에도 이 가공품목들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 농산물 수출구조는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산물 총수출액에서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역내

수출비중은 1998년 52.7%에서 2002년 46.1%로 낮아졌다. 역내 수출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8~2002년 평균 역내 수출비중은 52.9%로 나타나 역내 수출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7> 한·중·일 농산물 수출비중

(단위: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1998	2002	1998	2002	1998	2002
01(산동물: 소, 돼지, 닭 등)	0.21	0.05	3.78	2.37	0.43	1.36
02(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6.24	1.08	7.27	4.58	0.54	0.22
04(낙농품: 치즈, 버터, 계란, 유장, 꿀 등)	0.18	0.31	1.51	1.34	0.18	0.30
05(동물성 생산품: 동물털, 뼈 등)	1.22	1.05	5.57	4.47	0.86	0.98
06(산 수목: 뿌리, 종균, 절화 등)	0.65	1.80	0.25	0.30	0.46	0.64
07(식용채소류)	4.21	4.27	12.76	12.96	0.96	1.35
08(식용과실류)	4.58	6.56	3.72	3.82	1.59	2.04
09(커피, 차, 향신료 등)	0.30	0.71	4.48	3.80	0.96	1.17
10(곡물류)	0.02	0.02	13.04	11.36	8.41	0.33
11(곡분, 전분, 맥아 등)	0.94	1.09	0.92	0.81	4.63	4.91
12(채유용 종자, 과실류 등)	8.67	6.33	6.44	6.47	5.75	5.73
13(검, 수지, 진액 등)	1.95	2.12	0.47	0.53	1.26	1.41
14(식물성 섬유류: 길대, 골풀 등)	0.08	0.04	0.39	0.30	0.07	0.05
15(동식물성 유지류: 라드, 마가린 등)	1.53	1.03	2.69	0.74	3.29	3.91
16(육어류 등 조제품: 소시지 등)	15.24	12.45	10.44	16.01	13.74	12.88
17(당류와 설탕과자)	9.33	8.11	1.57	1.56	3.12	2.86
18(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1.24	1.47	0.38	0.25	1.11	1.43
19(곡물조제품)	10.98	15.27	2.25	3.13	8.42	8.75
20(채소 및 과실조제품)	3.17	5.17	8.84	12.12	2.02	1.88
21(소스, 베이킹파우더 등 식료조제품)	7.54	9.42	2.81	3.17	16.25	22.52
22(음료, 술 등 조제품)	6.21	9.77	3.84	4.11	10.22	8.40
23(식품공업잔해물, 박류 등)	2.16	1.91	1.64	2.81	3.96	4.37
24(담배 및 대용품)	3.37	9.97	4.95	2.99	11.14	12.52
전 체	1.47	1.24	6.25	3.79	0.44	0.84

주: 품목별 수출비중은 국별 농산물 전체 수출액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종합무역정보 무역통계(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중국의 농산물 역내 수출비중은 1998년 42.7%에서 2002년 45%로 하락하였다. 중국도 2000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존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 역내 수출비중은 47.4%로 아직은 역내 수출의존도가 높은 수준에 있다.

일본의 역내 농산물 수출비중은 1998년 9.6%에서 2002년 16.3%로 증가했다.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역내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 수출비중은 13.3%로 낮은 역내 수출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8> 한·중·일 농산물 역내 수출비중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한 국	52.7	61.1	55.5	48.9	46.1	52.9
중 국	42.7	49.0	51.8	48.6	45.0	47.4
일 본	9.6	12.4	17.3	11.0	16.3	13.3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무역결합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 TII)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II_{ij} = \frac{X_{ij}}{X_i} / \frac{M_j}{M}$$

여기서 X_{ij} 는 i 국의 j 국에 대한 수출, X_i 는 i 국의 총수출, M_j 는 j 국의 총수입, M 은 세계 총수입을 나타낸다.

즉 TII는 i 국의 총수출에서 j 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입에서 j 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이므로 세계 전체의 j 국 시

장점유율에 대한 i 국의 j 국 시장점유율의 비율이다. 따라서 TII지수가 1보다 크면 양국간 상호 보완성이 높은 반면 1보다 작으면 상호 보완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국별 농산물 무역결합도는 모두 1보다 높아서 3국의 상호 보완성은 역외국과의 농산물 무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양국간 상호 보완성은 한·일간이 가장 높고 중·일 및 한·중 순으로 높았으며 한·중간 보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9> 한·중·일 농산물 무역결합도

	기 준	1997	1998	1999	2000	2001	평균
한국시장	중국 무역결합도	-	4.9	4.2	6.2	4.6	5.0
	일본 무역결합도	6.4	4.6	6.0	7.2	4.7	5.8
중국시장	한국 무역결합도	-	1.8	1.6	2.0	2.2	1.9
	일본 무역결합도	-	3.0	3.1	3.1	1.8	2.8
일본시장	한국 무역결합도	5.4	6.5	7.2	6.0	5.4	6.1
	중국 무역결합도	-	4.7	5.3	4.8	5.0	5.0

농산물 교역에서 품목별 상호 보완성은 농업분야내에서의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개념으로 계측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무역이란 품목 분류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농산물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산업내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품목 부류라도 품질과 가격이 차이나는 상품 차별화와 가공도에 따라 중간재로 수입한 다음 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내분업 등을 들 수 있다. 산업내무역은 1차로 '수직적 분업'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산업분류가 대분류일수록 활발하고 소분류일수록 저조하게 나타난다.

'산업내무역'은 양국간 '수직적 분업'뿐만 아니라 '수평적 분업'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생산물은 차별화되어 국가간 산업내무역이 빈번해진다.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산업내무역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활발하다면 ‘수평적 분업’이건 ‘수직적 분업’이건 교역의 상호 보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내무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가를 계측하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을 추정할 수 있다. 산업내무역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그루벨-로이드지수(GL지수)에 의해 계측할 수 있다.¹¹⁾

$$GL(IIT) = 1 - (|X_i - M_i| / (X_i + M_i))$$

여기서 X_i 는 I 산업의 수출액, M_i 는 I 산업의 수입액이다.

따라서 GL지수가 클수록 특화 정도가 낮아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반면 GL지수가 작을수록 산업내무역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1998년과 2002년 한·중·일 3국의 농산물(HS-2 단위 기준) 부류별 GL지수를 산출한 결과 농산물 부류별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산업내무역이 가장 활발한 한·일간 교역의 평균 GL지수는 1998년 0.17에서 2002년에는 0.39로 상승했다. 한·중간 평균 GL지수는 0.13에서 0.15로 상승했으며 중·일간 GL지수도 0.03에서 0.04로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품목별 산업내무역지수에 의한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은 한·일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역결합도지수에 의한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중·일간 산업내무역이 가장 저조해 보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김남두 외(1997) 참고.

<표 4-10> 한·중·일 농산물 산업내무역지수

구 분	한·일		한·중		중·일	
	1998	2002	1998	2002	1998	2002
01(산동물: 소, 돼지, 닭 등)	0.41	0.39	0.00	0.00	0.28	0.26
02(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0.00	0.21	0.15	0.24	0.00	0.00
04(낙농품: 치즈, 버터, 계란, 유장, 꿀 등)	0.19	0.85	0.17	0.09	0.00	0.02
05(동물성 생산품: 동물털, 뼈 등)	0.98	0.72	0.53	0.51	0.02	0.02
06(산 수목: 뿌리, 종균, 절화 등)	0.07	0.04	0.66	0.92	0.02	0.05
07(식용채소류)	0.00	0.01	0.00	0.02	0.00	0.00
08(식용과실류)	0.00	0.01	0.35	0.59	0.00	0.00
09(커피, 차, 향신료 등)	0.43	0.47	0.01	0.43	0.01	0.01
10(곡물류)	0.06	0.17	0.00	0.00	0.00	0.00
11(곡분, 전분, 맥아 등)	0.35	0.37	0.25	0.14	0.51	0.64
12(채유용 종자, 과실류 등)	0.20	0.3	0.19	0.13	0.04	0.05
13(검, 수지, 진액 등)	0.34	0.47	0.07	0.28	0.13	0.12
14(식물성 섬유류: 길대, 골풀 등)	0.17	0.92	0.06	0.06	0.03	0.01
15(동식물성 유지류: 라드, 마가린 등)	0.35	0.27	0.86	0.62	0.34	0.69
16(육어류 등 조제품: 소시지 등)	0.02	0.04	0.07	0.06	0.01	0.01
17(당류와 설탕과자)	0.23	0.38	0.35	0.71	0.86	0.39
18(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0.19	0.19	0.92	0.45	0.13	0.10
19(곡물조제품)	0.05	0.15	0.29	0.32	0.07	0.16
20(채소 및 과실조제품)	0.05	0.07	0.07	0.07	0.00	0.00
21(소스, 베이킹파우더 등 식료조제품)	0.82	0.76	0.24	0.51	0.89	0.77
22(음료, 술 등 조제품)	0.02	0.07	0.50	0.88	0.10	0.10
23(식품공업잔해물, 박류 등)	0.41	0.83	0.11	0.02	0.12	0.05
24(담배 및 대용품)	0.50	0.23	0.03	0.97	0.02	0.03
평 균*	0.17	0.39	0.13	0.15	0.03	0.04

주: 농산물(HS 2단위) 전체에 대한 산업내무역지수임.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수출상품의 구조, 즉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이 유사할수록 경합성이 높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간 수출경합 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출 유사성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에 의해서도 계측할 수 있다.¹²⁾

$$ESI_{ab} = \sum_{i=1}^n \min(X_a^i / X_a, X_b^i / X_b)$$

단 X_a 는 a국의 총수출액, X_a^i 는 a국의 I상품 수출액이다.

즉 어떤 시장에서 a, b 양국간의 수출경합도를 나타내는 수출유사성 지수(ESI)는 특정 상품의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별로 산출한 뒤 작은 값을 선택하여 합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ESI는 양국의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할수록 증가하므로 수출경합성이 커지는 반면, 특정 품목의 수출비중이 국별로 다르다면 ESI가 감소하여 양국간 수출경합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수출상품의 품목 분류가 세분될수록 양국의 수출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낮아져 ESI가 작아지는 반면, 대분류일수록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져 ESI가 증가하게 된다.

농산물 ESI지수 계측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한·중·일 3국의 양국간 ESI지수를 HS-2 단위와 HS-4 단위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실제로 3국 모두 HS-2 단위의 지수가 HS-4 단위 지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HS-4 단위 기준 2002년 양국간 농산물 ESI지수는 한·일간이 가장 높았고, 한·중간 및 중·일간 순으로 컸다. 따라서 수출경합도는 한·일간이 가장 높고 중·일간 경합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6~

12) J. M. Finger and M. E. Kreinin(1979), "A Measure of Export Similarity and its Potential Uses", *Economic Journal*, pp. 905-91(December), 김남두(1997) 참고.

2002년 평균 ESI지수는 한·중간 지수가 한·일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4-11> 한·중·일 농산물의 수출유사성 지수

	기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한국·일본	HS 2단위	0.263	0.269	0.297	0.266	0.309	0.318	0.338	0.294
	HS 4단위	0.141	0.146	0.137	0.133	0.164	0.175	0.200	0.157
한국·중국	HS 2단위	0.330	0.242	0.310	0.340	0.304	0.367	0.290	0.311
	HS 4단위	0.186	0.115	0.139	0.195	0.183	0.231	0.198	0.178
중국·일본	HS 2단위	0.198	0.247	0.252	0.246	0.221	0.288	0.285	0.220
	HS 4단위	0.005	0.006	0.007	0.007	0.009	0.008	0.012	0.008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앞에서 한·중·일 3국의 양국간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은 사용지표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상호 보완적 관계와 경합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품목별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을 계측하기 위하여 수출 및 수입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이용하였다.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는 흔히 특정 품목의 수출경쟁력 지표로 많이 쓰이지만 양국간 수출입에 대하여 각각 계측하면 품목별 상호 보완관계는 물론 수출경합과 수입경합관계를 분리하여 계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무역 정도도 측정할 수 있다.¹³⁾

특정 품목의 수출 RCA지수가 교역당사국 모두 1보다 클 경우 두 나라는 이 품목의 수출에 대하여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수출경

13) 박승록(2003), pp. 44~48 참고.

합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입 RCA지수가 양국 모두 1보다 크다면 양국은 모두 이 품목을 세계 평균 이상의 비중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수입경합관계에 있다. 만일 한 국가의 특정 품목 수출 RCA지수가 1보다 크고 상대국은 그 품목의 수입 RCA지수가 1보다 크다면 한 국가가 이 품목을 수출하는 데 비교우위가 있고 다른 국가는 세계 평균 이상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 국가의 특정 품목 수출 RCA지수와 수입 RCA지수가 모두 1보다 크다면 그 나라는 이 품목을 수출하는 데 비교우위가 있는 동시에 세계 평균 비중 이상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이 품목의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혹 RCA지수가 1보다 작아도 의미 있게 크다면 적어도 산업내무역이 어느 정도는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출 RCA지수(RCAX)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RCAX_{kj} = \frac{X_{kj}}{X_k} / \frac{X_{wj}}{X_w}$$

여기서 $\frac{X_{kj}}{X_k}$ 는 k국의 총수출에 대한 j 상품 수출액 비중이고 $\frac{X_{wj}}{X_w}$ 는 세계 총수출에 대한 세계 전체의 j 상품 수출액 비중이다. 따라서 RCAX가 1보다 크면 k국이 j 상품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입 RCA지수(RCAM)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CAM_{kj} = \frac{M_{kj}}{M_k} / \frac{M_{wj}}{M_w}$$

여기서 $\frac{M_{kj}}{M_k}$ 는 k국의 총수입에 대한 j 상품 수입액 비중이고 $\frac{M_{wj}}{M_w}$ 는 세계 총수입에 대한 j 상품 수입비중이다. 따라서 RCAM이 1보다 크면 k국

은 j 상품 수입우위를 갖는다.

1997~2001년 기간 한·중·일 3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과 수입 RCA지수를 계측하였다. 품목별 수출입 RCA지수에 의하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은 국별로 일정하지 않고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양국간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품목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이 공존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옥수수과 참깨의 교역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마늘, 생강, 양파, 닭고기 등의 교역에 대해서는 약한 보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경합품목은 배와 피망인 반면 대두는 수입경합품목이다.

한·일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품목이 파프리카와 피망,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수출경합품목은 배와 사과이며 수입경합품목은 옥수수와 대두, 참깨, 쇠고기 등으로 나타났다.

중·일간에는 상호 보완관계인 품목이 옥수수, 참깨, 마늘, 생강, 양파,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8개 품목이나 되었다. 반면 수출경합품목은 배 한 품목이었으며 수입경합품목은 대두와 유채로 나타났다.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무역은 농산물에 비교우위를 갖는 국가가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반면 비교우위가 없는 국가는 산업내무역도 저조한 편이었다.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품목은 중국의 경우 옥수수와 사과, 참깨, 닭고기 등 4개 품목이고 한국은 고추·피망과 돼지고기 두 품목인 반면 일본은 한 품목도 없었다. 그밖에 한·중·일간 산업내무역이 일어나는 품목은 대부분 가공농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4-12> 한·중·일 농산물 RCA지수(1997~2001년)

품목	한국		중국		일본		경합·보완관계		
	RCAX	RCAM	RCAX	RCAM	RCAX	RCAM	한·중	한·일	중·일
쌀	0	0	0	0.49	0	0.42	-	-	-
밀	0	1.86	0.15	0.65	0	0.82	수입경합	수입경합	수입경합
옥수수	0	5.17	2.57	1.87	0	2.43	보완	수입경합	보완
대두	0	1.91	0.24	5.19	0	1.58	수입경합	수입경합	수입경합
사과	0.31	0	1.1	1.08	0.67	0	수출경합	수출경합	수출경합
배	3.47	0	1.33	0.13	3.27	0	수출경합	수출경합	수출경합
복숭아	0	0	0	1.1	0	0	-	-	-
포도	0	0.21	0	0.4	0	0.1	-	-	-
오렌지	0.14	1.12	0	0.31	0	0.68	수입경합	수입경합	-
참깨	0.15	5.15	4.39	1.22	0.17	2.7	보완	수입경합	보완
유채	0	0	0	5.67	0	3.58	-	-	수입경합
마늘	0.3	0.66	8.8	0	0	0.52	보완	수입경합	보완
생강	0.13	0.7	17.0	0	0.3	6.1	보완	수입경합	보완
양파	0.24	0.16	1.3	0.23	0.1	0.8	보완	-	보완
파프리카	2.44	0	0	0	0	0.4	-	보완	-
고추, 피망	3.39	1.64	6.2	0.1	0.32	0.89	수출경합	보완	보완
쇠고기	0	3.65	0	0.14	0.14	3.1	수입경합	수입경합	수입경합
돼지고기	5.31	1.1	0.6	0.17	0.01	3.53	수출경합	보완	보완
닭고기	0	0.39	2.63	1.04	0.1	1.76	보완	수입경합	보완

주: 1) 수출입 RCA지수는 연도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최근 평균치를 사용하였음.

2) RCAX와 RCAM 모두 1보다 큰 품목은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임.

자료: FAO Statistics(www.fao.org)

<표 4-13> 동북아 역내 양국간 보완 및 경합 품목

교역 상대국	보완관계	수출경합	수입경합
한-중	옥수수, 참깨 (마늘, 생강, 양파, 닭고기)	배, 고추/피망 (돼지고기, 사과)	대두 (오렌지, 쇠고기, 밀)
한-일	파프리카, 고추/피망, 돼지고기	배 (사과)	옥수수, 대두, 참깨, 쇠고기 (밀, 오렌지, 마늘, 생강, 닭고기)
중-일	옥수수, 참깨, 마늘, 생강, 양파, 고추/피망, 돼지고기, 닭고기	배 (사과)	대두, 유채 (밀, 쇠고기)

주: () 안은 RCA지수가 1보다 작지만 의미 있는 값이므로 약한 보완 및 경합관계임.

5. 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한·중·일 3국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 시장규모는 NAFTA나 EU보다 작지만 농산물에 관한 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순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순수출국인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일본은 경제규모와 구매력, 특히 농산물 수입에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과 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거대시장으로서 향후 세계 농산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역내 농업생산과 교역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 주도권을 가질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일 FTA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추진시 일본과 중국의 단순한 중간자 역할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통합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확고하게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대사의

결정을 주변국들이 결정하도록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3국의 농업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상호 경쟁적인 관계로서 역내 농업 협력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별 농업구조 및 농산물 교역구조를 분석하였다.

3국은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측면에서 토지절약적 영농형태를 갖는 소규모 농업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농업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비율과 요소생산성은 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자본/노동 비율과 자본/토지 비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 중국이 가장 낮은 반면, 노동/토지 비율은 중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았다. 한국은 자본/노동 비율과 자본/토지 비율은 일본보다 낮고 중국보다 높은 반면, 노동/토지 비율은 일본보다 높았다.

농업의 토지생산성은 한국이 가장 높고 중국이 가장 낮았으며 노동생산성은 일본이 가장 높고 중국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자본생산성은 중국이 가장 높고, 한국, 일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국의 농업이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어 역내 농업협력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집약도 순위(factor intensity ordering)는 역외국과의 교역으로 농산물의 상대가격이 변화할 경우 생산요소의 상대가격과 요소생산성 순위가 변동하게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품목별 경작면적 분석결과 중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많은 품목의 경작면적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일본과는 보완적 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는 반면 시설채소 등의 대일 수출증대에 따라 경작면적을 늘리고 있는 한국과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는 추세다.

한·중·일 모두 주식인 쌀과 소맥 등 대부분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옥수수과 유지작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쌀 등 수출용 곡물과 채소류, 과일류 및 축산물 생산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품목의 내수충족과 수출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

해 농업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대부분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국내수요가 증가해도 수입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류와 유지류 생산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채소류와 과실류 및 축산물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수요와 대일 수출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업구조의 변화요인으로 농촌노임을 비롯한 생산요소가격과 농산물가격, 그리고 국별 소비량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농촌노임지수는 중국이 가장 높아 저렴한 인건비에 바탕을 둔 중국의 농업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산물가격 변화가 생산량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쌀과 채소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가격과 생산량간에 연관성을 찾기 힘든 상태이다. 오히려 중국에서 수매가격과 생산량이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일본도 생산량 변화가 가격 변화와 잘 연계되어 있었다.

농산물 소비량은 3국 모두 곡물류 소비량이 줄어들고 과실류와 육류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품목별 소비량 변화가 생산량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도 생산량과 소비량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소비량 감소가 국내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가 증가해도 생산량 증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실류와 유제품 등 소비가 증가한 품목의 국내 생산 대신 수입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한국의 대일 농림축산물 무역은 신선농산물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흑자 기초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다. 대중 농림축산물 무역은 옥수수 등 곡물류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과 일본간 농림축산물 무역은 중국의 곡물류 수출이 주도하고 있지만 축산물과 임산물도 비교적 고르게 수출되고 있다. 일본의 대규모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매년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 가운데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은 한·일간이 가장 높은 반면 한·중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산업내무역도 한·일간이 가장 활발했으며 중·일간이 가장 저조하였다. 농산물 수출경합성은 한·일간 수출구조가 한·중간보다 중복 품목이 많았지만 수출유사성 지수(ESI)는 한·중간 지수가 한·일간 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일간은 농산물 수출경합도가 가장 낮았다. 농산물 전체로 볼 때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수출경합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에서 중국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농산물 수출경합성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품목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및 경합성을 국별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측정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중·일 농산물 교역의 보완 및 경합관계는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중 양국은 옥수수와 참깨의 교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마늘, 생강, 양파, 닭고기는 약한 보완관계를 보였다. 수출경합품목은 배와 피망이고 대두는 수입경합품목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품목이 파프리카와 피망,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수출경합품목은 배와 사과지만 사과는 약한 보완관계도 보이고 있다. 수입경합품목은 옥수수와 대두, 참깨, 쇠고기 등이며 밀과 오렌지, 마늘, 생강, 닭고기 등은 약한 수입경합관계이다.

중·일간에 상호 보완관계인 품목은 옥수수, 참깨, 마늘, 생강, 양파, 고추/피망, 돼지고기, 닭고기였다. 수출경합품목은 배뿐이며 수입경합품목은 대두와 유채이고 밀과 쇠고기는 약한 수입경합관계에 있었다.

한·중·일 3국간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무역은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클수록 활발한 반면 비교우위가 약할수록 산업내무역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품목은 중국이 옥수수와 사과, 참깨, 닭고기 등이며, 한국은 고추/피망과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은 한 품목도 없었다. 일본이 수출 가능한 신선농산물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최근 대일 돼지고기 수출 중단으로 산업내무역 품목이 축소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농업분야에서 산업내무역을 하는 품목은 대부분 신선농산물보다는 가공농산물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수평적 분업’이나 ‘수직적 분업’을 통해 산업내무역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농산물의 산업내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별, 품목별 가공 정도에 따른 비교우위와 상대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력차원에서 분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가 출범할 경우 농업분야의 과제는 3국의 농업이 지역 통합 이후에도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역외국 농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3국이 역내 농업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나 일본보다 농업경쟁력이 높은 중국도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역외국들에 비해 토지집약적인 품목의 경쟁력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가소득이 상승할 경우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경쟁력마저 상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업생산과 농산물 교역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은 산업내분업(Intra-Industry Division of Labor)과 역내 교역 전환(Regional Trade Diversion) 및 역내 교역 창출(Regional Trade Creation)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한·중·일 3국이 상호 경쟁적인 품목의 생산을 국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상호 보완적 품목의 교역을 내부화(Internalize)하는 방식으로 역내 농산물 교역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이 쌀과 채소, 과일 등 경쟁적 품목의 자급률을 일정한 수준만큼 유지하는 대신 옥수수과 대두 등 보완적 품목의 수입선을 역내국인 중국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중·일 3국은 농산물 교역의 역내 시장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 수출경합도가 상당히 높고 한국과 중국도 경합되는 품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의 산업내무역은 한·일 및 한·중간 가공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의 산업내무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국별 수출경합도를 의미하는 농산물의 수출 유사성 지수가 높다는 사실은 향후 고급화와 기능성 농산물 개발 등 제품차별화(Products Differentiation)를 통한 경우 경합품목의 산업내무역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농산물의 산업내분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소득수준의 차이가 커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수준의 격차도 심한 편이다. 따라서 역내국별 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과 기술이전 및 농산물 품목별 생산분담 등 다각적인 농업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산업내 분업체계를 구축할 경우 가공농산물은 물론 신선농산물분야에서도 농산물의 산업내무역을 통한 교역 창출과 교역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6. 결론 및 시사점

한·중·일 FTA가 출범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호당 규모는 작지만 전체 경지면적이 넓고 기후조건이 다양하여 수요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건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적어도 한국농업에 있어 기회이기 이전에 위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의 과제는 3국의 농업이 지역통합 이후에도

공동으로 발전 및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로 귀착된다.

국별 농업의 공생을 위해서는 역내 농업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농업 경쟁력이 토지자원보다는 저임의 노동력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곡물류 등 토지집약적 품목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따른 농가소득 증가로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경쟁력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축산과 낙농, 고급 화훼 및 과실과 채소류 등 고도의 농업기술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농업선진국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중국은 단순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전략한 측면도 있는 실정이다.

3국의 농업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상호 경합성이 높은 가운데 생산요소별 부존비율이 달라 보완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교역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역내국간 호혜적인 생존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경쟁력이 높은 역외국들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호 경합되는 품목을 산업내분업을 통해 교역을 창출할 경우 경쟁력 있는 분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농산물의 산업내분업과 역내 교역 전환 및 교역 창출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FTA 출범은 시장단일화를 의미하므로 한·중·일 3국이 상호 경쟁적 품목의 생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대신 상호 보완적 품목은 역내국으로 교역 전환할 경우 역내 농산물 교역증대를 통한 역내국들의 복리후생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3국의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소득수준의 차이가 커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제품차별화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교역을 창출할 경우 농업경쟁력을 제고 또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이면서 국내 소비 증가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는 일본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의 거대시장을 역내국으로서 개척하는 것은 일종의 배타적 기회일 수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에 국한하지 말고 시장 조

사와 소비자 연구 등 마케팅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경우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도 해외시장 개척 등 WTO에서 허용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과 단체차원의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율·김윤경. 2002.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정책연구 02-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남두·원용걸·전재욱·정훈. 1997. 『동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정책연구 97-09.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한. 2003.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 연구-비대칭적 국가간 동태적 협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연구』, 제5권 제3호, 246-285.
- 김정호·정정길. 2001. 「한국의 농업기술 발전과 대중국 협력 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3-251.
- 김태근. 2001.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구조 변화」. 서중혁 외. 『동북아시아 농업협력 강화 방안: 중국 농업의 구조와 한·중 간 농업경쟁 관계를 중심으로』. C2001-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연도.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1. 『중국농산물무역핸드북』.
 _____ .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박승록. 2003.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연구자료 03-10. 한국경제연구원.
- 박중구. 2003. 「한·중·일 산업경쟁력 비교분석」. 『동북아경제중심·이상과 현실』. 2003년도 하계정책세미나 자료, 5-25. 한국국제경제학회.
- 서중혁. 2001. 『중국의 농업발전과 잠재력』. 서중혁 외. 「동북아시아 농업협력 강화 방안: 중국 농업의 구조와 한·중 간 농업경쟁 관계를 중심으로」. C2001-35, 12-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중혁·박현태·김태근. 2002.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생산구조』. 연구자료 D16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손병해. 1991.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도 및 전략」.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320-36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용대·신태용·유관영·김화섭·이문형·사공 목. 2000.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 21세기 준비연구보고서 시리즈 2000-13. 산업연구원.
- 이재욱·정정길·김정호·어명근·강정일·임정빈. 200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1997.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연구총서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창재 외. 1994.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홍익표. 1999.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 101-1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배·岡本信廣. 2002.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국제산업연관 모델에 의한 실증 연구』. 정책연구 02-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영록. 1991. 「동북아 지역의 무역구조 및 비교우위」.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57-9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2. 『동북아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시리즈 99-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2002. 「한국의 FTA 추진배경과 중장기 추진전략」.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 외교: 방향과 전략』, 9-28.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세균·어명근·허주녕. 2002.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 분야 대응 방안』. C2002-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 협력 방안 연구』.
- 한국무역협회종합무역정보 무역통계(www.kita.net)
- 홍유수. 1995. 『동북아 지역기술협력체의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農林水産省. 『平成 14年 農作物價指數』.
- 일본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 JETRO. 2003. “Prospects for Free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중국농업발전보고』. 2000.
- 중국농업출판사. 1999. 『중국농업통계자료』.
- 중국인민은행. 2001a. 『통계연보』. 중국통계출판사.
- _____. 2001b.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 중국통계출판사. 2002a. 『중국통계연감』.
- _____. 2002b. 『중국농촌통계연감』.
- FAO statistics (www.gao.org)
- J. M. Finger and M. E. Kreimin. 1979. “A Measure of Export Similarity and its Potential Uses.” *Economic Journal*.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005년에는 지구상에 300여 개의 FTA가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무역협정의 추세는 세계 각국에서 거스를 수 없는 당면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이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한국이 세계의 FTA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중심국가를 국가정책의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첫 번째 대상국으로 협정체결을 추진해 온 칠레와의 FTA 비준이라는 국내장벽을 힘겹게 넘어온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지역별 대상국을 선정하여 협정체결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한·일 FTA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중·일 FTA의 실현은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거대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지역무역협정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FTA의 경우에도 모든 대상국 및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 줄 수는 없다. 1국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는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최대 수산물시장인 일본과 최대 생산국이며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중·일 FTA 체결에 대비하여 3국의 수산업구조 및 수산물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중·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수산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중·일 수산업 현황

가. 한·중·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수산업은 식량산업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업·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등 1차산업에서 3차산업 까지를 포괄하는 범위로 파악할 수 있다.

수산업의 특징은 첫째, 소비자의 건강과 식생활을 위해 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시키는 다차 또는 복합산업으로서의 다양한 특징을 가지며, 둘째, 생산단계에서 자연적 조건에 의해 생산량이 달라져 향후 예측이 곤란하며 이로 인한 어업경영이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고, 셋째, 다수의 영세한 소규모 생산자에 의해 분산적으로 생산되며, 자연조건의 변화로 일시 다확성, 중단성 등 생산량의 변동폭이 심하여 이로 인하여 가격변동이 매우 크다는 데 있다. 넷째, 강한 부패성에 기인한 유통상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으며, 다양한 품종과 품질로 인한 표준규격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중·일 3국에 있어 수산업이 각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GDP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의 10%를 차지하여 매우 비중이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 비중과 비례하여 한국과 일본의 어업인구 감소와 어업종사

자의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 등으로 수산업비중이 일정 내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중·일 3국 수산업의 다원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수산물이 국민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둘째, 어촌은 주거공간과 산업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셋째, 어촌은 국토보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넷째, 물의 보수 및 저장기능뿐만 아니라 홍수나 가뭄시 수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으로 수산부문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어촌은 고유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어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 발전하는 기능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편안한 여가장소로서 관광기능을 지니고 있다.

나. 수산물 생산구조

한·중·일 3국의 수산업 규모는 한국과 일본이 GDP 중 각각 0.6%, 0.4%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약 1.5%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어업인구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총인구대비 0.3%와 0.2%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며 노령화로 인한 어촌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으나, 중국은 총인구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며 또한 약간의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경제성장의 발전 정도가 느린 중국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한국과 일본의 수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임에 반하여 중국의 수산업은 다른 1차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획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산업을 둘러싼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일 양국은 자원회복 및 연안역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자국내 생산감소로 인한 수산물 수급문제를 적정한 수입관리정책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중국은 내수면 및 해면 양식 생산의 증대정책으로 자국내 수급문제 해결과 수출확대를 꾀하고 있다.

<표 5-1> 한·중·일 수산업 현황 비교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GDP 비중 ¹⁾	0.6%	1.5%	0.4%
어가인구(천 명) ¹⁾	128(0.4%)	19,422(1.5%)	205(0.2%)
생산량(천 톤) ¹⁾	2,665(세계 12위)	43,821(세계 1위)	6,093(세계 3위)
어선척수(척) ¹⁾	94,935	479,810	204,162
1인당 연간 소비량 ²⁾	30.7kg	10.7kg	35.8kg
주요 생산 수산물 ¹⁾	멸치, 고등어, 갈치, 삼치, 굴, 김, 미역 등	멸치, 고등어, 갈치, 삼치, 가리비, 홍합, 다시마 등	고등어, 전갱이, 꽂치, 대구, 정어리, 굴, 가리비 등
수산업 특징	해면어업치중(73%), 생산량 감소, 어업인 노령화, 수입수산물 증가	해면어업과 함께 내수면 발달, 비약적 생산증대 및 내수면 어업 발달	해면어업 치중(79%) 생산량 감소, 어업인 노령화, 국내수요의 절반 이상이 수입수산물
중점 정책	자원회복 및 연안관리와 수급 치중(수입비중 36%)	생산증대를 통한 내수 공급 및 수출증대 치중	안정적 자원관리 및 수급 치중(수입비중 53%)

주: 1) 2001년 기준.

2) 한국과 일본은 어패류만 포함한 수치임. 1999년 기준.

각국의 상이한 수산정책하에 한·중·일 3국은 전세계 생산량의 약 40% 가까이 차지하는 거대 생산권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각국 생산에

서의 특징은 중국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내수면 어업비중이 전체 생산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가운데 해면 어업생산량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해면 어업비중이 각각 73%, 79%로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연안 및 근해의 환경 및 자원수준에 따라 생산량 변화폭이 심하고, 향후 어장의 오염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표 5-2> 한·중·일 주요 수산물 생산현황¹⁴⁾

(단위: 톤)

구분	한국 ³⁾	중국 ³⁾	일본 ³⁾	
1	멸치류 ¹⁾	249,519	470,616(2) ²⁾	1,373,328(1) ²⁾
2	고등어류	172,925	511,238(1)	385,185(8)
3	오징어류	165,579	308,660(5)	229,319
4	갈치	74,851	22,268	1,223,360(2)
5	강달이류	53,998	-	-
6	새우류	45,099	28,436	1,046,787
7	붉은대게	33,146	27,838	-
8	조기류	27,738	5,430	596,507(5)
9	삼치류	28,809	2,864	517,528(7)
10	전갱이	22,132	370,389(3)	532,986(6)
11	꽃게	13,814	3,528	266,630(10)
12	청어	13,340	52,427(9)	21,796
13	병어	13,210	45,484(10)	303,024(9)
14	임연수어	7,911	240,971(6)	-
15	정어리	7,595	167,073(7)	121,120
16	명태	6,232	315,987(4)	191,433
17	송어류	4,962	4,003	616,551(4)

주: 1) 한국 생산량 기준(2000년).

2) () 안은 각국의 수산물 생산순위임.

3) 한국-해양수산부자료, 중국-『중국어업연감』 및 『어업·양식어업생산통계연보』, 일본-『한·중·일 수산통계』 기준임.

14) 한·중·일 3국의 주요 수산물 현황은 패류와 해조류는 제외한 수치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일 3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수산물은 공동해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10대 수산물 생산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과 일본에서 순위권 안에 들고 있는 생산물은 중국의 경우 멸치류, 고등어류, 오징어류, 전갱이류 등이 있으며, 일본은 멸치류, 고등어류, 갈치류, 조기류, 삼치류, 전갱이류 등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산물 교역구조

한·중·일 수산물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정책수립에 있어 한·일 양국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공급량을 수산물 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들어와 수산물 수입국으로 이미 전략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2001년을 기하여 수산물 교역 적자국으로 돌아서 장기적으로 수산부문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모두 수입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수입관리가 최대의 정책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세계 수산물 최대 생산국으로서, 그리고 세계 제2위의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에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이후 수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은 일본 1국에 대한 편중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주요 수산물의 수입증가와 일본산 고급 활선어의 수입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일본으로의 각국 수산물 수출경쟁은 전 품목에 걸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산 수산물의 시장점유

율이 6%대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수산물 수입시장 비율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소비자의 고급화된 기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급 활어 및 새우와 같은 특정 수산물을 중국내 양식시설을 통하여 일종의 OEM방식으로 생산·수입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일본시장내 중국산 수산물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수출은 단기간에 있어 일정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간에 있어서 수출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비례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갑각류 소비뿐만 아니라 활어와 같은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5-3> 한·중·일 수산업 수출입 비교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수산물 교역	수입	1,585,243 (1.12) ¹⁾	1,319,019 (0.54) ¹⁾	13,394,308 (3.83) ¹⁾
	수출	1,139,667 (0.76) ¹⁾	3,996,459 (1.50) ¹⁾	755,426 (0.19) ¹⁾
	무역수지	-445,576	2,677,440	-12,638,882
수산물수출입 위치 ²⁾		세계 14위 수출국 및 12위 수입국	세계 2위 수출국	세계 1위 수입국
수출입구조		일본으로의 수출 집중도 약화	한국 및 일본시장 으로의 수출증가	중국 및 동아시아 로의 수입다변화
주요 수출품목		굴, 김, 미역, 다시 마 등 해조류 위주	조기, 갈치, 민물 장어, 꽃게, 오징 어류	연어, 가다랑어, 다랑어, 새치류, 가자미
주요 수입품목		조기, 갈치, 명태, 꽂치, 꽃게	대구, 갑오징어, 새우, 가자미, 갈치	고등어, 연어, 새 우, 가다랑어, 뱀 장어류
수출입 특징		일본시장내 점유 율 하락(6%대)	북한 수산물의 수 입이 증가(수입순 위 3위)	중국으로부터의 맞춤생산 증가 및 양식어 수입 증가

주: 1) () 안의 수치는 각국의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001년 기준.

2) 2000년 기준.

현재 중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이 자국내 소비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수출비중이 생산량 중 10% 정도인 현 시점에서 수출여력을 급격히 증가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장기적인 수산정책을 설명하며 급격한 수산물 증가는 없을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급속히 증가한 내수면 양식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해면 어획생산의 증가가 자원남획과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하여 어업활동을 자제하며, 장기적인 수산물 수급균형에 중점을 둔 수산정책을 펼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한국의 수산물은 국제적으로 고관세의 기준이 되는 1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약 70%에 달하며 증가세 중심의 관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수산물 HS품목은 2002년 기준 총 403개로, 이 중에서 03류가 262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66개, 12류가 39개 등 3개 부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03개 전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2~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기본관세율은 17.7%, 평균 실행관세율은 18.6%로 나타났다. 전체 수산식품의 64.2%를 차지하는 03류는 3단계 관세율구조(5%, 10%, 20%)를 가지고 있으며, 한·중·일 3국 중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대대적 관세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수입관세는 최혜국 대우와 방콕협정관세 대상품목 57개의 관세율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HS 2단위 기준 수산물 품목수는 2002년 기준 188개이며, 이 중 03류가 전체 수산물의 76.1%인 173개, 05류와 12류가 각각 4개와 6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HS 2단위 기본관세는 0~37.2%까지 34단계의 복잡한 관세율구조를 지

니고 있으며, 20~25% 사이의 관세율품목이 전체품목 중 4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35%가 40개 품목, 15% 이하가 18개 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본관세율은 25.74%, 실행관세는 25.69%로 실행관세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한·중·일 관세 및 비관세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수산물관세율 구조	증가세 위주의 관세 및 관세율 단순 조정관세 부과(12개 민감품목)	협정세율 적용 및 한국에 최혜국우대세율 적용(13%, 17%)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의 방콕협정세율적용	증가세와 종량세 병행한 혼합세 일부 품목 적용 한·중·일 3국 중 가장 낮은 관세구조
HS 품목 구성*	품목코드 : 10단위 품목수: 403	품목코드 : 9단위 품목수: 188	품목코드 : 8단위 품목수: 322
HS 2단위 기본(실행)관세율	기본 : 17.7% 실행 : 16.2%	기본 : 17.7% 실행 : 14.3%	기본 : 7.8% 실행 : 7.6%
HS 4단위 기본(실행)관세율	기본 : 18.6% 실행 : 17.6%	기본 : 25.7% 실행 : 25.7%	기본 : 5.8% 실행 : 5.5%
관세율 특징	한·중·일 3국 중 가장 단순한 관세구조(03류 기본관세구조)	소비세의 일종인 최혜국우대세율이 관세와 같은 효과 발생(가장 높은 실행관세율 구조)	낮은 관세율구조 속에 12류의 경우 40%의 고율관세 부과, 12, 13, 16, 21류 등 상대적 고관세율
수산물비관세 특징	원산지 및 위생관리 중점	행정적 처리지연	김, 다시마 등 9개 품목에 수입쿼터(IQ) 적용

주: 2002년 기준.

일본은 수입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증가세와 개수와 증량이 기준이 되는 종량세(혼합세) 두 가지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은 증가세를 적용하며, 한국 수산물에 대하여는 WTO협정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HS 2단위 수산물 전체 품목 수는 2002년 기준 322개이며, 관세율구조는 0~40%(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품목 제외)까지 17단계로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관세율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산물의 73.9%를 차지하고 있는 03류는 9단계(0~15%)의 관세율구조로 가지고 있으며, 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품목을 제외한 319개 품목의 2002년도 평균 기본관세율은 7.8%, 평균 실행관세율은 5.84%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전체 319개 품목 중에서 44%에 해당되는 144개 품목이 5% 미만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124개 품목이 10% 미만, 그리고 47개 품목이 15% 미만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고차가공품을 중심으로한 15% 이상의 고율 관세품목도 42개로 나타났으며, 40% 이상 관세율 품목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의 수산물에 대한 비관세조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없으나, 수입 또는 국내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와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수산물에 관한 수입할당, 수입허가 및 금지제도는 없으나 원산지규정, 수입검사 및 위생조치 등과 함께 수산물 수입시 통상절차가 까다롭고 수입 관련 법제도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지나친 행정간섭이 존재하는 등 비제도적인 규제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비관세조치의 특징은 수산물 쿼터 할당(통산성 고시), 위생조치(식품위생법), 통관절차, 원산지 표시(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제도(식품품질 표시, 기준인증) 등 법제도내의 규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수산물의 쿼터 할당을 민간협회에 위임하고, 위생 및 검사절차의 강화, 통관절차의 엄격성 등 법제도 외의 규제

가 혼용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 외에 민간업체의 거래 할당, 담합, 복잡한 유통구조 및 관행 등의 비제도적인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3.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각국의 생산구조는 상당 부문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한·중·일 각국의 해면 조업의 어장이 같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해면 어업생산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해면 어업생산량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어종의 구조에서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주요 생산어종과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주요 어종이 상당수 일치한다. 특히 이 어종들 가운데 중국은 4개 어종(멸치류, 고등어류, 오징어류, 전갱이류), 일본은 6개 어종(멸치류, 고등어류, 갈치류, 조기류, 삼치류, 전갱이류)이 양국의 10대 생산어종으로 나타났다.¹⁵⁾

공동해역에서 각국의 치열한 어획노력은 남획과 불법어업으로 자원고갈과 생산량 감소의 결과를 낳고 있는데, 최근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으로 경계설정과 불법입어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중국어선의 한국 서해어장에서의 불법입어로 인하여 한국의 연근해 자원감소 및 어업인의 조업 포기 등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 체결에 앞서 문제해결에 대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수산부문에서의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 이밖에도 중국은 청어, 병어, 임연수어, 정어리, 명태, 송어류가 10대 어종으로 포함되었으며, 일본은 꽃게, 병어, 송어류가 10대 어종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시 떠오르는 최대 문제로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들 수 있다.

<표 5-5> 한·중·일 HS 2단위 수산물 실행관세 비교표

구 분	03류			05류			12류			15류			16류			21류			23류			합 계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5%≤	1		146	1		9			5	5		3			7				2		4	9			176		
10%≤	90		76	15						2		1			36	2									123	113	
15%≤		18	16						5						6				1						19	27	
20%≤	159									25					63				1		1	250	1	1		1	
25%≤		62			3										2				1		1				69	1	
30%≤	2	17			1						1		3	3		1									7	23	
35%≤	2	40							6		2			15												64	
40%≤	4	4								1				1												8	1
45%≤		2																	1							3	
50%≤								14																	14		
60%≤	3																		1						3	1	
70%≤	1																								1		
합 계	262	143	238	16	4	9	39	6	11	7	3	4	66	21	49	3	2	2	2	3	4	403	188	319			

주: 1) 일본의 수산물 품목 수는 총 322개이나 표에서는 종량세 2개 품목 및 선택세 1개 품목은 제외하였음.

2) 한·중·일 3국 중 실행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 25.74% > 한국 17.63% > 일본 7.6% 순임.

우선 관세구조는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물의 경우, HS 2단위 한·중·일 각국의 실행관세는 일본이 가장 낮은 7.6%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중국이 14.3%, 한국이 가장 높은 16.2%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산부류인 HS 4단위 03류의 실행관세는 중국이 가

장 높은 25.7%로 나타났으며, 한국 18.6%, 그리고 일본이 5.5%의 관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어,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중·일 3국간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 영향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5-6> 한·중·일 3국의 HS 03류 실행관세 구조 비교

(단위: 품목 수(개))

구 분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합 계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5%≤			12			31			40			24			2			24	1		13	1		146
10%≤	24		1			10	51		11	10		8			10			4	5		32	90		76
15%≤		6													1	10	19	5			6	6		18 16
20%≤				38						6			38							58			159	
25%≤		4			24			30									4							62
30%≤	1	1			4		1	3			2			4	1	1				2		2		17
35%≤					1						3			14			12		1	10		2		40
40%≤	1						2									1				3		4		4
50%≤		1																						2
70%≤							1									1				1		4		
합 계	28	12	13	38	29	41	55	34	51	16	4	32	38	19	22	21	24	28	66	21	51	262	143	238

주: 한·중·일 3국 중 실행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 25.69% > 한국 18.64% > 일본 5.47% 순임.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12개 품목에 고율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향후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의 실질적인 피해는 중국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HS 03류의 실행관세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2001년 WTO 가입 이후 꾸준한 관세율 인하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자국내 피해는

한국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수산물 관세율은 한·중·일 3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도 관세를 꾸준히 인하시키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관세영향은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관세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원산지규정이나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비관세장벽의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비관세장벽은 없다.

<표 5-7>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품목

분류코드	대 상 품 목
0301.99-2ex	살아 있는 청어, 명태,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03.02ex	신선, 냉장청어, 명태, 명란,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03.03ex	냉동청어, 명태 및 명란,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및 꽂치
03.04ex	청어, 명태,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및 꽂치의 필레 기타어육(신선 및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함.)
03.05ex	건조, 염장 또는 염수절인 청어, 명태,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및 꽂치 또는 이들의 어종피시밀, 명란 및 찌서말린 것
03.07ex	가리비, 패주 및 오징어(몽고오징어는 제외)
1212.20-1-(1)ex	식용해초로 1매의 면적이 430cm ² 이하의 것
1212.20-1-(2)	홍조류의 바닷말 및 이것을 섞은 식용의 해초 (관세율표 제1212.20호인 1-(1)에 나열된 것을 제외)
1212.20-1-(3)ex	기타 식용해초(파래·녹조류속, 다시마과의 바닷말속)
2106.90-2-(2)-Eex	해초의 조제식품(홍조류의 바닷말속, 파래·녹조류속, 다시마과의 바닷말속의 것에 한함.)
수 입 할 당 량	2003년도: 4,000만 달러(대한민국)
규제근거·형태	잔존수입 제한, 일방적 국별 쿼터
일본 관련법규	수입무역관리령 9조

주: ex는 관세율표번호등란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일부만이 비자유품목임을 나타냄.

중국의 경우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비관세장벽은 없으나 수입통관절차에 있어 행정적인 지연과 넓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통관절차가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비관세장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선진국 중 유일하게 수산물 수입쿼터제를 유지하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한·중·일 3국 중 유일하게 비관세장벽을 가진 국가로 향후 FTA 체결시 협상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하다.

4. 한·중·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한 수산부문의 정책은 앞서 살펴본 중요 이슈 및 문제점과 같은 맥락에서 크게 생산과 교역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생산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수산업 생산량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내 경제발전과 더불어 수산물 소비의 증가는 전통적인 내수면 어업생산뿐만 아니라 해면 어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둘째, 다른 1차산업인 농·임·축산업 종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얻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따라서 수산물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는 첫째, 연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원감소, 둘째, 어민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자원감소, 그리고 셋째, 최근 대규모의 중국어선의 한국내 수역에서의 불법입어로 인한 자원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그 동안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

는 어업'으로의 정책전환과 이를 위해 바다목장화사업 및 간척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현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회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향후 한·중·일 FTA에 대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산물 수출입에 있어, 한국은 2001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수산물 수급에서 차지하는 수입 수산물의 비율은 약 36% 정도로 그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 한·중·일 FTA 체결로 인한 중국과 일본산 수산물의 급격한 증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수산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의 증가가 식품안전에 있어 큰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안전조치로는 원산지 표시제나 위생관리의 강화 및 시장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FTA협정 체결은 관세 철폐 또는 인하로 인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가져와 국내 수산물 생산어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동안 한·칠레 FTA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농업계뿐만 아니라 어업계의 심한 반발에 부딪힌 이유는 협상 과정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인 충격완화장치의 부재에 있다 하겠다. 사후 FTA 체결로 수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대한 피해대책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구조조정 및 침체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만 수산업 종사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생산어가에 대한 보상과 국내 생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수산정책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와 같이 한·중·일 각국의 상이한 수산업구조로 인하여 한·중·일 FTA 수산부문 협상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지난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에서 대부분의 수산물품목을 협상 예외로 한 바 있으며, 지난 한·칠레 FTA에서도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인하방안을 이끌어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일 FTA 체결에 있어 한·일 양국정부는 타산업에 비하여 취약산업인 수산부문 협정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일 양국은 새로운 어업인력의 확보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수산업 생산구조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중·일 3국간의 어업협정에 기초한 자국 자원관리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입어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은 수산물 수출입규모 면에서 200억 달러라는 거대 교역권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한·일 양국은 수산물 무역적자국, 중국은 수출흑자국의 위치에 있다. 한·중·일 FTA 체결은 이러한 구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위생관리의 강화 및 다양한 수산물 수입관리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충격 완화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일 수입수산물 관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특정품목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민간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유도하여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일본은 한·중·일 3국 중 유일하게 비관세장벽을 사용하는 국가로서, 수입할당을 자원관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WTO협상에서도 수입할당의 존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한·중·일 FTA에 대한 최대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비관세장벽 요인으로 존재 가능한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협상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등성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한 협상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은 지난 일본·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한·중·일 FTA협상에서도 수산부문을 사실상 제외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산업에 대한 기반이 취약하여 수산업을 비롯한 농업 등 1차산업에 대한 개방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협상 예외 또는 관세인하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안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수산업부문 FTA 추진 이전에 국내 수산업에 대한 적정규모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업의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관세청. 1999. 『중국의 통관제도』.
-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1998.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규정에 대한 설명』.
- 박상태. 1997.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 이 균. 2001. 『관세론』. 박영사.
- 이춘삼. 1996. 『무역관계법(제2전정판)』. 법문사.
- 주문배. 2001a. 「제4차 WTO 각료회의와 수산분야 시장개방화 대책」. 『21세기 해양시대의 개막과 한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해양대학교.
- _____. 2001b. 「한국의 수산물 무역자유화 과정과 정책적 변용」. APEC 수산물 무역 세미나 발표논문.
- _____. 2001c. 『WTO체제하의 수산식품 관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_____. 2002a. 『한·일 FTA 추진과 수산업 부문의 정책적 시사점』.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2-4호.
- _____. 2002b. 『WTO-DDA 수산물 관세분야 논의동향과 주요쟁점』. 대외경제전문가 폴 세미나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문배 외. 1999.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해양수산부.
- 주문배·고종환. 2001. 「다자간 관세인하방식별 수산물 관세율 인하효과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여름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문배·고종환 외. 2001. 『WTO뉴라운드 대비 수산물 HS 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 해양수산부.
- _____. 200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 최낙균·고준성. 1999. 『뉴라운드논의의 산업별 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산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02a. 『일본의 비관세장벽현황』.
- _____. 2002b.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
-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 2000. 『일본의 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 _____. 2001. 중국 관세관련 동향자료.
- 해양수산부. 2001. 『2001년도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_____. 2002. 『2002년도 해양수산백서』.
- _____.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물)』. 각연도.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연도
- 해양수산부·농수산물유통공사. 1999. 『중국수산물시장동향』.
-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2002. 『水産統計』.
- 日本農林水産省. 2001. 『日本農林水産統計』.
- 日本農林統計協會. 2002. 『2001年度 水産白書』.
- 日本貿易振興會. 2000. 『貿易投資ハンドブック 2000-2001』. JETRO事業統括部.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1. 『2000年度水産物輸入統計年報』.
- _____. 2002a. 『2001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入編』.
- _____. 2002b. 『2001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出編』.
- _____. 2003a. 『2002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入編, 輸出編』.
- _____. 2003b. 『2002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出編, 輸出編』.
- 日本水産物振興會. 2001. 『アグロトレード ハンドブック2001』.
- 日本 水産廳. 1999. 『平成10年度漁業の動向に関する年次報告』.
- _____. 2002. 『水産基本計劃』.
- 日本輸入食品安全推進協會. 2001. 『食品輸入ガイドブック』.
- 藤本進編. 1997. 『日本の關稅』. 財經詳報社.
- http://www.kati.net/m_country/t21-6.htm.
- <http://www.apectariff.org>. Table of Duty in Japan(2002).
- ITC(<http://www.intracen.org/>).
- 國家統計局. 1998~2001. 中國農業統計資料.
- _____. 1996~2000. 『中國統計年鑑』.
- 譚 向 외. 2001. 『中國主要農產品市場分析』.
- 朱國興 외 主編. 1995. 『中國對外經濟貿易體制改革全書』. 北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 中國農業部. 1989~2000. 『中國農業年鑑』.
- _____. 1994. 『中國漁業統計彙編 1989~1993』.
- 『中華人民共和國 對外貿易法』.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2003, 2003.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年鑑』.
-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2001. 中國農業統計資料.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중·일의 입장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심화되는 지역주의 경향과 역외국가들의 차별적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의 대처능력의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냉전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상징되는 미국의 시장근본주의적 태도에 대한 반작용도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외부적 자극뿐만 아니라, 역내 분업구조 확대에 따른 내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국 금융위기라는 지역공통문제에 직면함으로써 동아시아국가들도 지역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한·중·일 FTA 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최초의 지역통합 시도는 1992년 ASEAN 국가들의 AFTA 제안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동남아국가들은 나름대로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동북아국가들은 그와 같은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1993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APEC에 상당한 기대를 건 적도 있으나, APE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의 차이도 크고, APEC은 ‘열린 지역주의’의 특성으로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없이 의제의 수만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동아시아국가들의 양국간 특혜무역협정은 2000년 11월 싱가포르와 일

본, 싱가포르와 미국의 협상이 개시되고,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제안함으로써 급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역내국가 중에서 FTA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P5의 일원으로 이 지역에 있어 FTA의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는 싱가포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움직임은 이 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는 EAFTA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도달하는 과정은 역내국가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EAFTA는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이 ASEAN과 개별적으로 FTA협상을 체결하는 방법과 한·중·일간 FTA가 체결되고 이를 AFTA와 결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한·중·일이 개별적으로 ASEAN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은 ‘ASEAN+3’에서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동북아 3국의 영향력에 압도될 위험을 염려하여 최근 인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동북아 3국간 연대 강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3국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국은 한·중·일 FTA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의견을 먼저 제안하였지만 현재까지의 태도는 다소 유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는 경제발전단계나 경제제도상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며, 또 일본을 미국의 하위 파트너(junior partner)로 보는 중국의 정치적인 인식 때문에 아직은 3국간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WTO 가입 이후 관세나 비관세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기술적 제약 요인은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또한 중국의 태도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FTAA의 출범으로 미국의 소비재 수입이 중남미국가로 전환된다든가 DDA협상이 난항에 빠져 서방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보일 경우 중국은 동북아협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일본도 한·중·일 FTA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본정부의 전통적인 신중성에도 기인하지만, 중국과 관계에 있어 정치·외교적 제약이라든가 혹은 경제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적 문제를 단기간내에 극복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일본내에서도 중국과의 FTA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경제적 기회의 포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시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겠지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상당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성숙되는 단계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FTA 추진전략은 실현 가능성과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소규모 내지는 중급규모의 국가들과 먼저 FTA를 추진한 후 미국이나 중국 등 대규모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한·중·일 FTA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것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대 수출상대국인데다 최대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중요성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마찰 등으로 중국과의 제도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중간 관계는 역동적인 확장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가 앞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국을 대상으로 한국이 전체적인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힘들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어느 한 국가라도 적극성을 보일 경우 한국은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동아시아는 체제의 상이성, 폐쇄적인 대외관계 등으로 1980년대 전반까지 역내국가간 분업관계는 별로 진전되지 못했으나,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기업들의 대규모 동남아 진출이 이루어진 이후 분업관계는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어 NIES 국가들도 투자국으로 변모하였으며, ASEAN의 시장개방 확대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동아시아국가들의 상호 의존관계는 현저히 심화되었다.

1990년대 동북아 역내 분업관계의 변화는 중국요소에 의해서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경제발전단계나 산업구조에서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대중관계가 더욱 긴밀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반면 중국과는 대체 혹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ASEAN은 중국의 부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크게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중국의 수출시장으로서 기능보다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의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대만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 각종 중간재나 자본재의 공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중국상품의 수입이 크게 확대된 점이 두드러진다. 한편 한국이나 대만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으로 만성적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국가들간의 교역수지는 양자간에 균형을 유지하기는 힘들고 다자간 관계를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NIES 국가들이나 ASEAN 국가들의 교역내용의 변화를 보면, 홍콩의 중국에 대한 중개무역기능은 1990년대를 통해서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중국은 직접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홍콩에 대한 의존이 줄어드는 비대칭적인 변화를 보였다. 동남아국가 역시 싱가포르의 중개기능에 의존하는 부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긴밀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ASEAN 4의 경우, 역내무역에 대한 비중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중국이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 대부분을 흡수함으로써, ASEAN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구축(驅逐)효과가 발생하였고, 또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음으로써, 위축된 교역은 일부 국가의 경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역내국가들의 교역에 심한 충격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충격은 2000년에 와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시장의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역할은 장기불황으로 역내 교역의 회복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던 일본과는 좋은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아시아의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더욱 증가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역내 경제통합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드러난 동아시아 각국의 산업구조상의 차이를 볼 때도 이 지역국가들의 순차적 산업화 경향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비교대상 10개국 중에서 산업화가 가장 늦은 인도네시아는 1995년 당시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이전하는 단계에 있었으며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경공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중화학공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경공업의 비중이 이미 매우 낮은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중공업의 비중이 3차산업의 비중 증가로 상쇄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내용이기 때

문에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산업연관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으로서 대부분 동아시아국가의 총수입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어서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은 1990년대 전반기를 통해서 계속 20%를 넘어서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990년 21.7%였으나 1995년에는 18.7%로 크게 낮아졌지만 대일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동아시아국가들의 중간재 자체 조달비율은 대체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 경제규모가 비교적 크며 풀세트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조달비중이 높았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도 국내조달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국내경제의 규모가 거대하고 내수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는 점 이외에 아직도 사회주의 경제의 유산이 남아 있어 과거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국내 시장규모가 워낙 거대한데다 대규모의 FDI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재산업도 짧은 기간내에 육성되어 소위 풀세트형의 경제구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도 핵심기술이나 주요 부품의 해외의존을 피하기 어려우며, 대외개방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수입중간재 사용비중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내부지향적인 공업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공정의 국제적 확장과 산업내무역의 확대로 대부분 동아시아국가의 자국에 대한 유발계수가 저하된 반면, 역내국가들에 대한 유발계수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국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는 국제산업연관표가 1995년까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되며, 중국도 1995년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국별의존도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의 대미 의존도 대체로 줄어들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국과 태국이 증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생산유발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한국과 대만 모두 중국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내용으로서, 그 후 FDI의 진출에 따른 기업내무역이 크게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국시장 의존도는 그 후에도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동아시아국가들의 수출상품 구성을 보면 일본은 중간재, 자본재, 내구소비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00년 기준 77.3%). 한국을 제외한 NIES 3국의 수출구조는 1차산품가공품이나 섬유제품에서 중간재, 자본재로 이동하여 이 두 부문이 2000년에는 총수출의 6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품목별 수출구조는 일본과 NIES의 특징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타 NIES에 비해서 내구소비재의 비율이 높고,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의 수출로 소재부문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수출구조의 특징은 섬유제품, 1차산품가공품·소재의 비율이 높고 대신 자본재나 중간재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수출구조를 소득수준이 비슷한 ASEAN 4와 비교할 때 섬유제품, 자본재, 내구소비재의 수출비중이 높고 대신 중간재나 1차산품가공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각 산업별 교역내용의 특징적인 면을 보면, 1차산품(소재 및 가공품)의 경우 소재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ASEAN인데 이 상품들은 역외보다는 주로 역내에 공급되고 있다. 현재 1차산품의 가공은 차츰 생산지

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1차산품은 소재보다는 가공품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섬유산업은 동아시아 선발국에서 후발국으로의 이전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부문이지만 현재는 중국이 NIES뿐만 아니라 ASEAN의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역외 수출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2000년 동아시아 총수출의 31.2%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며, EU에 대한 수출은 16.2%였다. 역내국가 중에서는 2000년 일본의 수입이 약 150억 달러에 달해서 동아시아 총수출의 20% 가량을 흡수하고 있는데, 일본 수입액의 대부분은 중국산 제품이다. 한편 섬유산업의 중간재 생산과 수출 역시 선발국에서 후발국으로 이전되어 왔으며, 현재 한국과 중국의 수출비중이 비교적 높다.

자본재시장은 근년까지 일본이 오랫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 왔으나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NIES 국가들과 중국에 상당 부분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계류를 주축으로 한 자본재산업의 향후 역내 분업구조의 전개방향은 일본의 핵심부품 개발능력에 대해서 한국이나 대만 등 NIES의 추격노력이 예상되나, 이 부문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한국이나 대만은 현재 중위기술이나 제품개발능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재나 부품의 역내 공급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치형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은 주로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여타 NIES에 집중되어 있으며, 역내 교역에서도 주로 한·중·일 3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5개국간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재의 수출을 보면, 일본과 한국 등 NIES 3국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잠식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지역별로 볼 때 역내와 역외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해 왔으며 역외 수출지는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는 철강수출에 기인한 것이다. 장치산업 중간재의 경우 일본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한국이나 대만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양국의 수출은 주로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구소비재는 동아시아 무역의 특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문으로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종재 역내 수출은 불과 16.9%로, 83.1%를 역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외국가 중에서도 미국시장의 비중이 특별히 높다. 최근 중국의 수출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 등은 대체로 하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동아시아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역내국가간의 거래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동아시아 교역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역내 부품교역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조립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의 역내 무역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21%의 비율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역내 무역의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7%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동아시아 부품교역은 사무용기기 및 통신장비, 그리고 스위치 기어 등이 전체 부품교역액의 3/4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완성품의 역외 수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부품교역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국가는 수입비중이 높은데 이 국가들은 전세계 기준에서 볼 때도 중요한 부품수입 국가들이다. 국가별로는 홍콩의 수입이 큰데, 주로 중국에서 조달된 부품을 조립·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홍콩 다음으로 큰 부품수입국으로, 주로 일본에서 조달되는 비중이 크며, 대만이나 한국에서도 일부 조달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부품수입은 주로 일본에서 조달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부품무역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은 부품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지만 소규모에 불과하다.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중·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중국경제의 향방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중국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이나 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실적 면에서 볼 때,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국의 산업화와 수출의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FDI는 최근 전세계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WTO 가입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개선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FDI는 과거의 노동집약적 산업 집중현상을 벗어나서 전기전자, 자동차, 기간산업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R&D 현지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선도산업 육성정책의 결과 철강, 석탄 및 시멘트, 화학비료 등 일부 기초산업에서 이미 세계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본재부문의 현저한 발전은 물론 기술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부품산업의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첨단 전자제품의 핵심기술은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제휴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외국 부품 수입에 의한 조립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통신기기, 가전분야에서도 토착기업의 활동이 활발하며, 통신기계에서도 디지털 교환기, 휴대전화기지국 등의 국내시장의 과반수를 중국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부문간 격차와 소득불균형, 국유기업의 비효율성과 금융부실, 재정적자의 누적, 직접금융의 미발달 등은 중국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이며, 최근 위안화의 환율자유화나 디플레문제 등도 중국 당국에 부담을 주고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서부대개발이나 동북 3성의 개발, 그리고 법인

재산권의 확립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가 단기간내에 시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어도 15년 정도는 7% 정도의 고속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은 연해지역의 개발효과가 내륙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일종의 안행형 구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노동집약형의 대표산업인 섬유·의류산업은 2020년에도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은 분야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노동장비율(자본/노동)의 향상과 인적자본의 누적이 자본집약적 산업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 기계 등 자본형 제품의 수출비중을 상승시키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의 상대적 우위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일 때, 결국 중국이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구조를 합리화하여 주력 수출제품을 자본집약형으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에도 많은 도전이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나, 이를 바탕으로 더욱 높은 성장률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베트남, 인도 등 후발국들의 거센 추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수출증대는 주로 제품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 도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직접투자 유치

또한 중국에 대한 FDI도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의 가장 중요한 수출국은 홍콩인데, 여기에는 화교자본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

국의 국내자본이 해외로 진출한 후 홍콩을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재투자 되는 경우도 많다. 대만의 경우 버진아일랜드 등 제3국을 경유한 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투자액은 통계상의 수치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중국의 FDI의 많은 부분은 화교자본이나 중국 국내자본의 재투자이며 조만간 이 부분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12월 WTO 가입으로 관세율의 인하를 비롯하여, 수입할당제나 수입허가제, 그리고 외환규제 등 각종 비관세장벽도 크게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진출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현지조달비율이나 수출의무비율의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강화 및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자유화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FDI 유치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FDI 유치에 있어 중국의 장점은 인구나 국토면적의 측면에서 중국에 버금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 비교할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국은 소득수준이나 낮은 문맹률, 교육수준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천연자원의 부존 정도가 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인도보다 잘 정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인도가 가진 영어구사능력의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평가된다.

FDI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 절차와 관련된 제반요소들에서도 중국은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인도보다 더욱 비즈니스 지향적이며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친근성, 의사결정과정의 신속성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법이나 노동조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 전략상의 차이도 FDI의 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는 오랫동안 수출지향보다는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집중해 온 결과 FDI는 국내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의 육성에 높은 비중을 두어 왔기 때문에 입지가 비교적 좁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 수입대체보다는 수출지향적인 산업의 육성에 집

중해 왔을 뿐만 아니라 FDI에 대해서 파격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도 최근에 와서 경제특구를 허용하는 수출입법(EXIM Law)을 제정하는가 하면, FDI에 대한 개방정책을 주도할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FDI의 유치를 둘러싼 양국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T부문의 경우, 중국은 하드웨어쪽에 특화된 반면 인도는 소프트웨어에 높은 비중을 두어 왔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는 양국이 직접적인 경쟁은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경쟁 관계는 중저위기술이나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노동집약적인 분야의 제조나 조립, 가공 등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중국 역시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 부문에 비교우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FDI 유치나 국제시장에서 양국간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수도 있다.

다. 한·중·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국가들은 역내 분업의 진전에 따라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어 왔으며, 특히 한·중·일 3국간의 분업 관계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역외 수출시장에서 한·중·일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품목별) 세계시장점유율 및 그 순위, 수출경합지수(E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등과 같은 지표들을 사용하여 한·중·일 3국간의 무역경쟁력을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산업별 수출구성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전기전자 및 섬유·의복부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으며, 다만 자동차나 화학부문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우위를 가

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동차, 일반기계, 화학제품 및 전기전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협소하고 이 분야들이 상호 겹쳐 있어 경합관계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데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영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경합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추세적으로 볼 때 한국이 전통적으로 경쟁우위를 지켜온 섬유·의복산업의 경우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한 상태이며, 전기전자부문의 경우 3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이 산업부문들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전기전자부문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에 생산거점을 구축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반도체, IT기기, 가전기기, 석유·석탄 및 섬유·의복 등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역시 IT기기, 가전기기, 전자부분품, 섬유·의복 및 기타 제조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분품, IT기기, 정밀기계, 일반기계에서 비교우위를 현시하고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분야가 대부분 상호 중첩되어 있어 향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기계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은 전기전자부문에서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보완관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상호관계에 있어 경쟁관계만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은 화학제품 및 석유·석탄제품 등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최종재 수출을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조달시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즉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전기전자부문에서의 높은 경합관계 속에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보완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중간재, 자본재시장은 물론 아직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최종재시장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 1차금속, 정밀기계 및 일반기계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합관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여 각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를 동태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국은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며, 일본은 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산업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수출특화품목인 가전기기, 기타 제조업 및 금속제품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금속제품, 가전기기, 자동차, 선박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왔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화학, 석유·석탄 및 전자부분품 등이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중국경제의 성장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분야인 섬유·의복, 반도체, IT기기, 기타 제조업제품 등은 중국의 성장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중국은 경쟁과 보완이라는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수출증대는 수입증대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쟁과 보완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향후 한국은 중국의 성장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핵심부품·소재산업의 육성에 집중 노력하여, 대중국 중간재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수출구조 방정식

동아시아 역내 무역의 확대요인을 비교우위와 산업내무역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소를 두고, 이들이 각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 중력모형(weighted gravity equ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확대효과의 측면에서 한국,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수출이 시장확대에 대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일본은 추정치가 1보다 낮아(0.757)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비교우위향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부호가 (+)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비교우위의 개선이 수출증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업내무역향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은 칠레,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대만 등과 함께 추정결과가 (+)부호를 갖고 있었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중·일을 비롯한 이 국가들의 경우 산업내무역산업과 비교우위산업이 수출증진에 상호 비경합적(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은 칠레와 함께 추정치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수출증가가 산업내무역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내무역향의 추정치는 다른 항들에 비해 나라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나라별로 수출증진에 있어 비교우위와 제품차별화(규모경제) 효과가 상호 보완적인가 아니면 상호 대체적인가 하는 점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일의 경우 비교우위와 제품차별화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 역시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과거 동아시아 분업구조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인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와 분업구조의 다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하나는 수출시장에서 여타 역내 국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구미시장에서 중국상품의 공급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여타 역내 국가들과의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동아시아국가들과 중국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비율은 1990년대를 통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미 ASEAN은 물론이며, NIES의 경우에도 중국과의 경합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 비율은 낮지만 경합범위는 빠르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중국과 ASEAN은 보완적인 관계보다는 경합적인 관계가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그에 비해서 열위에 있는 ASEAN 국가들(특히 ASEAN 내의 후발국)의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체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의 산업화와 수출시장 점유 확대를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은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일 상품군에 포함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일본은 고가제품을 공급하는 반면, 중국은 저가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대체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출상품 수출에서 발생하는 중간재 수요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소재(장치산업) 및 자본재(그 중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수출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NIES 국가들에 비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비교적 덜 노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산화에 따른 대중 수출시장의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제3국 시장에서도 일본과 같은 정도의 브랜드 이미지나 상품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며, 기술격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역외 의존구조

전체적으로 보아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이 갖는 특징은 중간재의 역내 시장점유율에 비교할 때 최종재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며, 또한 중간재 중에서도 자본재부문이 증가해 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재 수요의 높은 역외 의존성은 동아시아 교역구조의 가장 큰 문제였으며, 앞으로 이 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동아시아 경제가 자기완결적인 요소를 강화해 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최종재 형태의 다양화와 국가간 최종재의 거래활성화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간의 경우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의 다양화로 인하여, 기능이 유사하더라도 동종의 최종재(예를 들면 승용차나 고급의류)의 수출입이 이루어지며, 동아시아에서도 전체적인 소득증대로 이러한 경향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요인으로는 이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가계최종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¹⁶⁾ 그리고 세계적인 다자교역질서의 규범의 수용과

16)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세계평균이 1980~90년의 3.4%, 1990~99년이 2.6%인 데 비해서, 태평양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같은 기간에 6.9%에 이른다.

FTA 등 지역협력의 확대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최종재 수입 억제정책은 차츰 완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현재 역외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역내 생산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으나, 무역대체효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¹⁷⁾

동아시아도 NIES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는 NIES의 수요구조의 선진국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ASEAN이나 중국의 도시지역 소비자에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역내에도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특성은 EU와 같이 최종재 중심의 수평적인 분업구조보다는 NAFTA의 수직적인 분업구조가 주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한·중·일 3국은 아직까지 경제규모에 비해서 상호간 직접적인 의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의 수출구조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수출시장은 전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고, 특히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이 높으며, 역내 교역에서도 ASEAN 및 NIES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ASEAN과 상호 보완성이 낮기 때문에 대 ASEAN 교역규모는 크지 않으며, NIES와의 교역비중은 높으나 이는 홍콩이 NIES로 분류된 결과이며, 수입에서 한국,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3국 중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가장 높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비중은 빠른 증가세를 보여온 반면 NIES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었

17) 이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최종소비재가 점차 고급화되어 구미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이 지역의 시장확대에 따라 역외 브랜드의 현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고급품의 수입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또 이러한 상품의 현지 생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급품의 수입대체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는데, 이는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이 중국과의 직접수출로 전환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간의 교역관계에 기초할 때, 3국간의 FTA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며, 그 다음이 중국이고 일본은 ASEAN과 NIES를 포함하는 광역화된 지역통합에 높은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수출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중국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비경제적인 요인까지를 고려할 때, 중국을 배제한 한·일간의 통합을 우선시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고일동·조병구·김주훈·임원혁·이재형·전일수·정진영. 2000. 『한·중·일 경제 협력의 추진방안과 주요 부문별 과제』. 연구보고서 2000-05. 한국개발연구원.
- 김중귀. 2000. 『國際産業聯關表로 본 아시아 太平洋 各國間 相互依存關係 分析』. 한국은행.
- 김홍렬. 2001. 『미부시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 부여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손정식·한홍렬. 1998.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유철. 1998. 『APEC 자발적 분야별 조기자유화의 논의사항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2002. 「한국의 FTA 추진배경과 중장기 추진전략」.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 외교: 방향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국가통계국. 각년호. 『중국통계적요』. 중국통계출판사 편.
-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각년호. 『중국경제연감』.
- 중국대외경제무역출판사. 각년호.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 주중한국대사관. 200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 계획 요강」.
- 박번순 외. 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산업자원부. 2002. 『중국경제의 평가와 전망』.
- 산업연구원. 2002. 『한·중·일제조업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 2003. 『2004년 중국경제 전망』.
- 한국은행조사부. 2003. 『중국경제의 고성장 배경과 성장지속가능성』.
- Asian Development Bank. 2002.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2002*. Hong Kong,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 Cheong, Inkyo. 20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Policy Analysis 02-02.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Dereffi, Gary and Olga Memedovic. 2003. *The Global Apparel Value Chain: What Prospects for Upgrading by Developing Countries*. UNIDO Sectoral Studies Series. Vienna: UNIDO.
- Lemoine, F. and D. Unal-Kesenci. 2002. “China in the International Segmentation of Production Processes.” Working Paper 2002-02. Paris: 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 Internationales.

- Munakata, Naoko. 2002. "Whithe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2-E-007. Tokyo: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Ng, Francis and Alexander Yeats. 1999. "Production Sharing in Asia: Who Does What for Whom, and Wh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197. Washington D. C.: World Bank.
- Ng, Francis and Alexander Yeats. 2003. "Major East Asian Trade Trend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084. Washington D. C.: World Bank.
- The Indian Express. 2002. WWW.indianexpress.com/full.php?content_id=13038.
- UNCTAD. Various issues.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Statistics*. New York: United Nations.
- World Bank. 1994. "External Markets and China's Exports." chapter 7 in *China: Foreign Trade Reform*. Washington D. C.: World Bank.
- _____. 2002a. *2000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 C.: World Bank.
- _____. 2002b. *World Development Report 2002*. Washington D. C.: World Bank.
- 山口重克 編著. 2003. 『東アジア市場經濟: 多様性と可能性』. 東京: 御茶の水書房.
- 渡辺利夫 編. 2002. 日本總合研究所 調査部 環太平洋研究センター 著. 『中國の躍進 アジアの應戰: 中國脅威論を超えて』. 東京: 東洋經濟新聞社.
- 木梶弘和・荒井 崇. 2001. 「東アジア域内分業の変化: 中間財分業から最終財分業へ」. 富士通總研(FRI) 『經濟研究所 研究レポート』, No. 22.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세계경제의 국가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무역규범(trade rules)에 대한 다자간·지역·양자간 논의는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활성화의 배경에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국가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교역이 급증하자 다자차원의 ‘무역규범의 조화(harmonization)’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 관세동맹(Customs Unions: CUs)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서도 참여국간의 통일된 무역규범 마련이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무역규범에 대한 초기 논의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규정, 세관통과절차 등에 집중되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중이던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 이후 다자간·지역·양자간 무역협상에서 논의되는 무역규범의 범위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관세철폐와 같은 이슈에 관심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비관세장벽은 물론 환경 및 노동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 역시 FTA 조문에 포함되고 있다. 또한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분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무역규범의 조화는 필수조건이며, 거론되는 무역규범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될 경우 ‘무역규범의 조화’는 반드시 고려될 협상이슈라 평가된다. 본 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무역규범의 운용현황을 비교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범 및 여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규범을 비교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역규범의 대상은 원산지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긴급수입제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조치, 표준관련조치, 정부조달, 투자, 서비스, 통신 등 여러 가지이나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에 연구초점을 맞춘다.

우선 원산지규정의 경우 한·중·일 3국간 교역되는 상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거나 관세를 철폐할 경우 3국간 교역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반덤핑과 상계조치의 경우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로서 한·중·일 3국이 이 조치들의 법적·제도적 틀과 운용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3국의 보조금 운용실태를 비교·분석하는 데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WTO에 통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 협상시 경쟁정책분야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역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의 인식공유가 중요한바, 3국의 제도적 측면을 고찰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중국이 협상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전 연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중국의 열악한 지적재산권 보호현황을 파악하고 한·중·일 FTA 추진시 고려할 부문을 제시한다.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상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성을 갖고 있으나, 반덤핑조치 등 기타 수입제한조치와 연계되어 보호무역주의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세계무역자유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원료나 부품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공정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게 되어, 원산지를 판정하는 작업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그 종류에는 특정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특정국가군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무역상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에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인 상품의 원산지를 반덤핑, 쿼터, 정부조달, 수출입통계 작성 등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모든 비특혜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타 무역정책상의 목적으로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다양한 원산지규정의 존재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하고자 공동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에서의 작업은 지역무역협정에서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특혜원산지의 통일에 관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범세계적인 통일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특혜원산지규정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확인을 위한 WCO의 기술적 검토는 완료되었으며, WCO내에서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1999년 5월에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WTO 원산지규정위원회는 WCO에서 회부된 미타결분야의 많은 부분을 타결하고, 2002년 7월 93건의 핵심정책이슈(core policy issues)를 일반이사회에 송부하여 일반이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일반이사회에서는 이 이슈들에 대한 타결시한을 2004년 7월로 정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반덤핑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수입제품에 의해 야기되는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하는 수입규제조치이다. 수차례의 다자간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서 무역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반덤핑조치는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현재에 이르러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자리잡고 있다. UR이 타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체제 확립을 목표로 출범한 WTO체제 이후 반덤핑 제소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장벽의 주된 형태가 반덤핑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덤핑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이전의 반덤핑협정에 비교하여 모호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하여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현행 반덤핑협정은 덤핑의 결정,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덤핑조사의 발동, 반덤핑조치의 기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덤핑마진이 매우 미미하여 덤핑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미소마진(de minimis)의 경우에 WTO 반덤핑협정 이전의 규정은 계량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현행 협정은 덤핑마진이 2% 이하일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의 국내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구성가격을 산정할 때 이전의 반덤핑규범은 일반판매비와 이윤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그 개념이 모호하였던 데 반해, 현행 협정은 실제 자료에 의거하여 일반판매비와 이윤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반덤핑조치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선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덤핑이 지속되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하여 일몰재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소자격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은 국내 동종 상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의견표명과 찬성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가 당해 국내산업 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GATT 체제하의 반덤핑협정에 비해 상당히 구체화하였다.

지금까지 체결된 지역경제통합체는 각기 서로 상이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천층 통합(shallow integration)을 반덤핑법의 철폐를 포함하는 조건 없는 상품의 자유무역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실현한 지역경제통합체로는 EU, EEA, 호주·뉴질랜드 FTA 및 캐나다·칠레 FTA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을 마련한 지역경제통합체는 EU, EEA 및 호주·뉴질랜드 FTA인데, 접근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호주·뉴질랜드 FTA는 각 국가의 법이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택한 반면, EU는 각 회원국의 법을 조화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이 단일 경쟁원칙을 확립하고 초국가적인 기관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EU와 EEA에서 각 회원국은 공동의 경쟁법 또는 매우 흡사한 경쟁법을 마련하였으나, 이것이 반덤핑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EA가 형성되기 전에 EU와 유사한 경쟁법을 지

년 EFTA 국가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지역들 경제통합체가 역내 무역에 대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폐지한 것은 단일 시장을 창출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EU가 중·동구권 국가 및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경쟁법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반덤핑조치를 계속 발동했던 사실에서도 경쟁법의 마련이 반덤핑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1> 지역경제통합체에서의 반덤핑제도 철폐 여부

	반덤핑제도의 철폐	회원국 독과점 금지법의 조화
EU	○	○
EEA	△	○
NAFTA	×	×
호주·뉴질랜드	○	○ (상당 정도)
캐나다·칠레	○	×
한국·칠레	×	×

주: ○ 반덤핑 철폐, △ 부분철폐, × 반덤핑 유지.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보조금(subsidies)’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보조금의 경우 특정산업이나 기업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양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한 국가의 경제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디자인하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정책적 주권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국가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왜곡적 기능 역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보조금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자규범이 WTO의 보조금협정이다. 현행 보조금협정은 기존의 GATT 1947에서의 보조금규정(제16조)에 비해 상당한 규범적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첫째, 보조금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보조금협정을 준수함으로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점이 GATT 1947 및 도쿄라운드 보조금협정과는 다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둘째, GATT 1947과 도쿄라운드 보조금협정과는 달리 보조금협정은 보조금 및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기본개념이 정의됨으로써 보조금에 관한 규범체계가 보다 분명하게 되며, 그만큼 관련 분쟁의 여지도 감소하게 되었다. 셋째, 보조금협정은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실상의 수출보조금(*de facto export subsidies*)은 물론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의 사용도 금지한다. 이로써 보조금을 통한 시장질서 왜곡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넷째, 보조금협정은 조치가능보조금의 중심요소인 심각한 손상이 추정되는 경우와 절차를 강화하였고, 다섯째 원칙적으로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허용보조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밖에 보조금협정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으며, 보조금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WTO 분쟁해결양해(DSU)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동맹의 경우 농산물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의 교역에 있어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주지역의 자유무역협정 규정은 일반 공산품의 경우 WTO 규정을 준용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보조금 규제에 유럽지역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로마조약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농업 수출보조금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역내 교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없다. 이

는 EU의 경우 다른 지역무역협정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강해, 역내 교역을 한 국가의 국내 교역 정도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7-2> 주요 FTA 또는 CU별 보조금 관련 규정

	수출보조금 금지	무역(경쟁) 왜곡 보조금 금지	농업부문 수출보조금 금지	비재정적 지원 금지	평가
WTO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로마조약	○	○	규정 없음	규정 없음	WTO Plus
EEA	○	○	×	규정 없음	WTO Plus
CEFTA	○	○	×	규정 없음	WTO Plus
ANZCERTA	○	○	○	○	WTO Plus
ANZSCEP	○	○	○	규정 없음	WTO Plus
NAFTA	WTO 준용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WTO와 유사
CUSFTA	WTO 준용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WTO와 유사

주: 1) 수출보조금 금지보다 무역(경쟁) 왜곡보조금의 금지규정이 보조금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간주함.

2) 유럽경제지역(EEA), 중앙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뉴질랜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ANZSCE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

3) NAFTA의 농업부문 수출보조금의 경우 미국·캐나다간 교역에만 금지되어 있어 「△」로 평가함.

전반적으로 보조금 규율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보다 규범적으로 개선되거나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WTO 보조금협정에 비해 이를 포함하는 무역(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의 위협이 존재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유럽 및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추세를 이루었으며, 농업부문의 수출보조금 금지에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이 미주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된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이 WTO 보조금

규율보다 자유무역(free trade)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NAFTA와 CUSFTA의 경우 농업부문을 제외한 공산품분야에서는 WTO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WTO와 유사’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 경쟁정책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은 독립 사업자간의 경쟁을 요구·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도모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을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대상에 속하는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속적인 국제규범이 없다. 경쟁정책은 기존의 지역협정에서도 보통 분쟁해결대상이 아니며 양자협력협정은 구속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규범의 형태가 아닌 협력분야로 되어 있다. 현재 OECD, UNCTAD, ICN 및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경쟁정책의 국제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무역과 관련된 구속적인 경쟁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주로 WTO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주요 의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자경쟁규범에서와 같이 실제규정이 얼마나 수렴되어야 할지, 그리고 집행절차상 협력의 정도와 형태를 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반덤핑 등 다른 무역규범과의 조율과 분쟁해결절차 도입 여부 및 이를 집행할 중앙통제기구의 설치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나아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공기업 등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기업들의 설립 여부 및 경쟁법 적용 여부도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내에 공동의 경쟁법이 도입된 경우는 아직 소수이다. EU 이외에 역내 공동의 경쟁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COMESA, MERCOSUR, 안데스 공동체, 그리고 EFTA 등이다.

회원국 구성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경쟁정책 관련 조항은 대체로 EU 및 영연방 유형과 북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OECD 2002). 전자의 경우 가능하면 실체규정을 포함하고 반덤핑규정을 폐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EU·투니시아 협정의 경우에는 경제개발단계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경제전반에 걸쳐 심화된 통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체규정(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왜곡적 정부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체규정의 포함이 튀니지의 경쟁정책 집행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캐나다·칠레 협정은 구체적 실체규정의 조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을 폐지한 유일한 사례이다. ANZCERTA의 경우에는 실체규정의 조화 및 반덤핑 폐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EU 또는 영연방 유형과는 반대로 북미형은 실체규정보다는 일반적인 경쟁법 도입원칙 및 협력내용을 담고 반덤핑규정은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NAFTA이다. 아직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이 체결한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인 한국·칠레 협정도 북미형을 따르고 있다. 이 협정은 구체적 실체규정의 조화는 없는 한편 반덤핑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교환 등 협력조항과 공기업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 움직임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출범이다. 기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와 통일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이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던 반면, WTO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은 각국 지적재산권제도의 개선과 동조화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TRIPS협정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가 표준화·통일화되는 최소 강제규범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여러 지역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보호수준의 조화나 통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Maskus 2000).

유형 1. 지적재산권의 완전한 조화추구방식(예 EU): 이 방식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일한 표준을 채택하게 하는 것이다. EU와 같이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이 선택된다.

유형 2. 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예 NAFTA): 이 방식은 TRIPS에 규정된 표준을 초과하는 높은 최소 표준(high minimum standards)을 설정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동조화(harmonization)를 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NAFTA가 이러한 방식의 사례를 제공한다.

유형 3. TRIPS-plus방식: 이 방식은 TRIPS 형성 이후에 상당수의 지역 무역협정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존의 TRIPS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TRIPS협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호대상을 규정하는 경우이다. 통상 이러한 방식은 TRIPS 표준을 채택하기로 약속한 국가들 사이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유형들의 사례는 EU과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국가들,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국가들 사이의 협정에서 나타난다.

유형 4. 상호권고방식(mutual exhortation): 이 방식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공식적인 협상이 없이 각각의 국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절차에 대한 상호간의 권고(mutual exhortation)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것은 APEC과 같은 낮은 차원의 통합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당사자들이 가지는 보호수준에 대한 전략이나 의도에 따라 크게 ‘적극형’, ‘유보형’, ‘소극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가장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과 조화를 의도했던 것으로 TRIPS의 형성과 그 시기가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하고 이외에 추가적인 독자적인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시행(enforcement)과 그 절차를 추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협정들은 역시 기존의 국제협약을 활용하면서도 TRIPS와 비교할 때 지적재산권의 남용, 시행조치, 미공개정보의 보호,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등의 영역에서 TRIPS보다 강력한 조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거에 상승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협정은 전형적인 TRIPS-plus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사항은 TRIPS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추가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이 모두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과 절차상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유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미래적인 쟁점에 대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정하고 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점에 있다.

3. 한·중·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기준

한국의 원산지규정에서의 기준은 관세법 시행령 제53조 4의 제5항에 정해져 있는데,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 ‘수입상품 원산지 사전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내 원산지 관련법규를 WTO의 원산지규정에 일치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이 WTO에 통보한 원산지규정 관련법규는 총 4개이다(WTO 문서: G/RO/53). 그 중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총국의 원산지 규정 관련 규범(Provision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Rules of Origin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법규에 따르면, 중국은 완전생산기준으로 1) 그 국가의 영토나 영해내에서 채취된 광물, 2) 그 국가에서 수확되고 채집된 식물, 3) 그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과 그로부터 획득된 생산물, 4) 그 국가에서 수렵, 낚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5) 그 국가의 선박에 의해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밖의 생산물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관세의 결정, 원산지표시제도의 규제, 수입통계 작성, 원산지인증제도 등의 목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공정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를 갖고 있다. 한편 통

산성이나 공정거래위원회(FTC)¹⁸⁾에서 원산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정 검사(processing test)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부가가치기준까지 사용하고 있다.

2) 특혜원산지규정

한국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대부분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관한 것이었으며 WTO의 원산지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체결에 의해 한국도 특혜원산지규정을 갖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FTA 원산지규정과 같이 한·칠레 FTA의 제4장 원산지 규정의 전체구조(overall architecture)는 정의(definition) 및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일반규정(general rules)과 품목별로 1차적 기준(primary rules), 잔여기준(residual rules) 및 기준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원산지 관련규정은 GSP를 제외하고는 비특혜원산지 관련규정이었으나,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특혜원산지규정이 마련되었다.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일반적인 FTA협정보다는 간략하며 사용되지 않는 규정의 포함과 같은 개념에 대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별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부속서에도 모든 품목(HS Code)의 장(chapter)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03년 10월 현재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혜원산지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18)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원산지의 판정이 필요하다.

나. 반덤핑

1) 덤핑의 결정

중국의 구조례는 덤핑을 “수입상품의 수출가격이 그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라고 정의하는 데 반해, 개정조례는 제3조에서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수입제품을 그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상적인 무역과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을 추가로 삽입하였는데, 이러한 덤핑의 정의에 대한 수정은 WTO 반덤핑협정에서 정의한 덤핑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정조례에 삽입된 문구는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에서(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및 “다른 나라의 상권으로 도입(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이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을 삽입한 것은 중국으로의 판매를 의미하는데, 단순한 환적 또는 계약의 청약 등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⁹⁾

한국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덤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수출국에서의 동종 상품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위한 제품 판매를 덤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덤핑에 대한 정의는 법조문상 약간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19)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판매의 개념에 단순한 청약(offer)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이 있었다. 가) 상품이 실제로 일국의 관세선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판매로 보는 견해, 나) 실제로 수입되지 않고 단순한 청약의 경우도 판매로 보는 견해, 다) 실제로 수입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미국과 EU에서는 취소 불가능한 판매 청약(irrevocable offer to sell)은 판매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2) 피해판정

WTO 반덤핑협정에서 피해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the threat of material injury) 또는 그런 산업의 확립에 있어 실질적 지연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한·중·일 3국 모두 WTO협정의 피해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실질적 피해판정에 대한 규정은 WTO협정과 거의 동일하다. 즉 수입물량, 동종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내산업에의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개정조례 제8조는 덤핑이 초래한 중국산업의 피해를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개정조례 제8조에서 1) 덤핑수입품의 수량, 2) 덤핑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의 동종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3) 중국내 동종 산업의 지표에 대한 영향, 4) 수출자의 생산능력 및 재고현황 등 WTO협정과 매우 흡사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업에 대해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를 제8.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중국 개정조례와 관행은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 피해의 위협 및 국내산업의 확립 지연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WTO협정과는 달리 각각의 피해를 판정할 때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판정할 때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몇몇 사건의 경우, 중국 당국은 덤핑수입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되는지를 판정하면서, 피해를 초래하는 여타의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입이 피해의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ce et al. 2003).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 운용현황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현황을 WTO에 통보된 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단순비교에 한계가 있다. 즉 WTO 회원국의 보조금 통보에 대한 진실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므로, WTO에 통보된 보조금 현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에 한계가 있어 WTO에 통보된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현황을 비교한다.

<표 7-3>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현황

	한국	일본	중국
WTO에 통보된 보조금 건수	19건	115건	23건
GDP 대비 보조금 규모	0.33%	0.11%	4.8%
농업보조금 비중	57.9%	70.0%	5.5%
R&D보조금 비중	13.1%	3.1%	16.9%

먼저 WTO에 통보된 보조금 건수에서 일본이 115건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23건, 한국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건수의 단순비교로 인해 일본이 보조금 운용에 적극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규모에 비해 중국이 보조금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GDP 대비 보조금규모를 살펴보면 일본 0.11%, 한국 0.33%인데 반해 중국은 4.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보조금 중 농업보조금의 비중이 일본(70.0%), 한국(57.9%)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의 농업보조금은 미미한 것(5.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농업에 대한 비교우위와 농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R&D보조금

의 경우 한국(13.1%), 중국(16.9%)이 유사한 비중을 나타낸 반면, 일본은 3.1%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전체적인 금액 측면에서 한국은 농업, 석탄산업, 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정책우위를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은 농업·임업·수산업 등 1차산업에 대한 보조금(농업·임업·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포함) 비중이 86.2%에 달해, 보조금이 1차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주로 세제상의 우대정책을 위주로 WTO에 통보하였는데, 보조금 통보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2) 상계조치제도 비교

기본적으로 한·중·일 3국의 상계조치제도는 WTO 보조금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한·중·일 3국간 제도 및 규정상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의 판정 근거에서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고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WTO 보조금협정(15.7조)의 규정이 중국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관세법 시행령 제77조②는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상계조사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Almstedt and Norton(2003)은 중국의 2003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와 같은 ‘비구체적인(unsubstantiated)’ 피해의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계조사 역시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미세한 부문에서 한·중·일 3국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본과 중국에서 상계관세의 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WTO 보조금협정과 같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데 한국에서는 여기에 해당산업의 주무부 장관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모두 상계관세

를 부과할 수 있는 원인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우려 등이며, 한국과 중국은 국내산업발전의 지연 및 저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을 추가하여 무역구제조치로서의 상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라. 경쟁정책

한·중·일 3국 모두 경쟁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0~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주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1980년 제정되어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재벌의 확장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재벌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고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혁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었다.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독금법)은 1947년 미 군정하에서 재벌을 해체시키고 재형성을 방지할 의도로 제정되었다. 처음에 독점금지법은 대규모 기업의 분할, 합병허가제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외국의 압력에 의해 법이 제정되었던 만큼 1949년과 1953년에 완화개정과 많은 적용제외법 제정 등을 통해 현재의 틀이 만들어졌다. 그 후 제1차 석유파동의 원인 중 하나가 과점적인 경제구조와 카르텔에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어 과점금지도가 도입되는 등 1977년 법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일본은 매우 소극적으로 독금법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미·일구조협약’의 결과로 경쟁정책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후 일본은 해마다 경쟁법 적용제외대상

을 폐지해 오고 있으며,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국총국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쟁당국 조직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불공정경쟁방지법」(1993)을 중심으로 「소비자권익보호법」(1993), 「가격법」(1998), 그리고 「입찰법」(1999) 등 4개 개별법을 통하여 경쟁정책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경쟁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반독점법 초안이 마련되었다.²⁰⁾ 이 법안은 곧 입법될 예정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감안할 때 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기존법과 반독점법(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자는 폐지되고 후자만을 통하여 통합적인 경쟁정책이 운영될 것인지 또한 불명확하다.

마.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중·일 3국간의 쟁점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은 특허, 상표, 저작권, 시행 등의 분야에서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특허와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의 신속한 부여와 특허권 강화라는 요소와 특허가능대상의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 대해 주로 전자에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특허 허여나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합리적인가에 주목하고 이에 문제제기하고 있다. 상표와 관련하여 일본은 중국측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제기하였는데, 상표등록취소의 예외조항 혹은 안전장치(safeguard)의 결여, ‘유

20) 이 법안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Jung & Hao(2003)가 초안내용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자료이다. 이들은 중국 반독점법(안)이 다른 국가들의 기존 경쟁법과 다른 특성으로 행정기구에 의한 독점규제, 복수의 집행기구 제도 및 사소의 역할, 그리고 사회경제적 분석에 의한 합병심사기준을 꼽고 있다.

명 상표(well-known marks)’에 대한 판단기준의 불명확 등이다. 저작권 영역은 일본이 가장 주목하는 영역 중의 하나인데, 저작권 침해시 중국 국내경우와 외국기업이 개입한 경우에 차별적인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행과 관련하여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구와 조항이 엄격하지 않고 침해방지나 억제수단이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실태

한·중·일 3국 지적재산권제도 통일협상에서 중국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거론되며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법 집행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각종 제도적 요인(지방 이기주의, 행정부처간 조율 실패, 법원 및 행정당국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바(혹은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중심적 집행(State-centered Enforcement, Potter and Oksenberg 1999)’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민간 경제주체가 민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낙후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법의 집행은 정부(특히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다소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공존한다. 즉 법의 취지나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문제와 법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도만이 크게 반영되는 문제가 공존한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중국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낮은 국가발전단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적 장벽들 때문이다. 제도적 장벽 중 대표적인 것으로 1)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중앙정부 시책의 무효화 및 왜곡 2) 정부 부처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조율 실패 3) 법원 및 행정당국내 전문 인

력의 태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조직 정비 미흡과 부처간 조율 실패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법원, 행정조직내 전문인력의 부족 역시 중대한 장애로 작용한다.

4. 분야별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한·중·일 FTA의 목적이 3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있어서의 원산지규정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 거래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을 수 있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3국간 FTA의 원산지규정의 기본원칙은 공평하고 투명하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이 있으며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단명료하고 사용자에게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으로 구성된다면 FTA의 기본목표라 할 수 있는 무역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3국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산지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언급하기 어려우나

완전생산(wholly obtained)의 기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협상을 통해 3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 주요 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품목의 특성, 3국의 산업구조의 특성,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규정이 통관비용의 증가를 가져와서는 회원국간 관세인하의 혜택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통관비용의 증대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원산지규정의 제정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회원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첨부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산업구조 및 보완관계가 한·중·일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AFTA에서는 역내 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물품이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취득된 경우나 역내산 재료를 가지고 역내 생산공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역외 국산부품을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번변경기준만으로 북미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입장관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향후 산업구조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은 과감히 양보하고 우리의 산업구조 전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원산지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각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정책적 함의도 갖고 있는 것이다.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에 따라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원산지규정은 21세기 한국의 산업발전 전망에 기초한 정책적 고려가 보다 반영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반덤핑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반덤핑에 대해 견지해야 할 입장과 원칙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 자국산업을 보호하여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데 남용되는 수단인 반덤핑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한·중·일 3국이 반덤핑조치를 상대국가의 수출을 저해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한·중·일 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각국이 반덤핑제도를 활용할 경우 역내 무역은 결코 촉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공동의 반덤핑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이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반덤핑 개정조례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새롭게 개정된 것이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면 규정이 더 모호하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한국과 일본은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DDA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듯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마련되어야 할 반덤핑협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호한 규정을 지니고 있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대폭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 1) 네거티브 덤핑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관행인 제로잉(zeroing) 금지
- 2) 덤핑마진을 산출하기 위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할 때 가중 평균정상가격과 가중평균수출가격을 비교방법으로 채택하고, 재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
- 3) 원가 미만의 국내판매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현행 WTO 규정의 대폭 완화
- 4) WTO 반덤핑협정에서 2%인 미소마진의 상향 조정
- 5) 입수 가능한 사실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수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는 요건의 강화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매우 많다. 현재 DDA협상 규범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반덤핑 프렌즈그룹에 속하고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입장과 공동노력은 동북아 FTA의 추진에 따른 반덤핑협정의 제정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보다도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이나 상계조사 개시 및 상계조치 부과 건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WTO 보조금협정보다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규범 설정은 한국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 반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되는 특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계조사를 실시할

경우 특별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보조금 규율을 WTO 보조금협정보다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2) 농업보조금의 허용 불가피성

농업부문의 수출보조금을 금지하면서 WTO 농업협정에서의 보조금규정보다도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진전된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중이 높아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아직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현실상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중·일 FTA협상 과정에서도 농업보조금문제에 한국의 농민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 한국정부로서도 농업보조금을 규제할 유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데 농업보조금이 70.0%, 1차산업의 보조금이 86.2%에 달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보조금 규율과 동일한 수준의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다자협상과정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이 합의된다면, 다자규범을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규범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성

중국의 규정 중 일부 조항은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데, 한·중·일 FTA 추진시 이러한 부분이 협상과정에서 거론되고 사전에 시정되어야 한다.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판정을 내려 상계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러한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앞서 지적된 상계조사절차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이외에도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문이 있는데, 중국 규정은 WTO 보조금협

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보복조치(retaliatory measures)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상계조치규정(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untervailing Measures) 55조에 따르면, 어느 국가가 중국의 수출품에 차별적으로 상계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해당국가를 상대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보복조치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중국의 현행 규정은 WTO 보조금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 경쟁정책

본 연구는 경쟁규범의 실제 내용의 조화는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경쟁법의 집행은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등을 전제로 수행되는 것으로 법제의 통일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는 주권국가간 단기간에 조화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경쟁정책의 역외 적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통상마찰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경쟁법의 조화보다는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쟁법의 대상이 되는 실제규정은 한·중·일 모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으며 규제강도가 대체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실제규정보다는 위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서와 같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국의 경쟁법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예상을 존중하면서 자국 경쟁법의 역외 적용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협력체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외 적용의 발효기준, 절차적 관할권 확보과정에서의 협력을 위한 통보, 협의, 국제예양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과 양자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일본 및 중국과 정기적으로 경쟁당국간 회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분산된 집행체제는 이러한 협의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포괄적이고 통일된 경쟁법제와 집행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3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반독점법(안)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것도 이 과정의 가속화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본다.

한·중·일 FTA의 경우에는 경쟁법 수준의 차이가 많은 나라간의 FTA인 NAFTA가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NAFTA는 멕시코에서의 경쟁법 도입 및 경쟁촉진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로 역할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NAFTA는 국영기업, 공기업 등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을 고려한다면 한·중·일 FTA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중국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등이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신 등 망산업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높은 접근비용 등 제약이 있으므로 주시하여야 할 산업분야이다. 유통, 건설(입찰담합) 등 특정 서비스분야에서의 경쟁정책 강화는 3개국 모두 필요한 과제로 보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협력 또는 공동의 학술적 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효과분석방법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WTO에서 다자경쟁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캐나다·코스타리카 FTA에서처럼 다자경쟁규범 제정시 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가 형성된다면 WTO를 포함한 여타 국제포럼에서 경쟁정

책 이슈와 관련, 역외 국가들에 대항하여 한·중·일 3국이 공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 지적재산권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는데, 먼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TRIPS-plus방식을 채택하여 3국이 최소한 TRIPS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의 동조화를 이루되, TRIPS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으나 한·일은 가입한 반면 중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조약을 중국이 가입토록 유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일부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과 TRIPS규정과의 불합치성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국내 지적재산권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조항 자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특히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침해억제책의 유효성에 집중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TRIPS에서 포괄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각국간의 집행력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국내의 집행부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중국의 집행력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국내적 시행조치를 좀더 투명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TRIPS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행정조치, 국경조치에서 최소수준의 동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술한 것처럼 중국은 지방이기주의, 행정부처간 조율 실패, 법원 및 행정당국의 자원 부족 등의 각종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법과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과 ‘국가중심적 집행’이 주된 기조를 형성하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단속과 보상에 대한 법적 집행이 정부(특히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이행문제가 3국간의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훈련, 집행 등을 협력 및 감독할 기구를 설치한 지적재산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한·중·일 3국간에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상표권의 담당부처가 특허청 및 문화관광부(중국은 지식산권국, 국가공산국, 상표국, 국가판권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분쟁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와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구가 인력과 기구 등에서 여전히 취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국측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력과 기구의 교육 및 훈련, 기술적 지원,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해 동아시아 3국에서 지적재산의 창출 확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서 저작권분야가 각국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분야에서는 전술하듯이 디지털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이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고 현재 일본만이 가입한 실정이다. 인터넷의 활성화 등 디지털환경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과정에서 이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의 준수 여부가 TRIPS가 규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쟁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이 지적재산권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미 특허절차의 통일과 조화를 꾀하는 특허법조약이 체결되었고(2000년 체결), 어떠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즉 특허요건(특히 비기술분야로의 특허대상 확대)에 대해 각기 나라별로 상이한 법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실체특허법조약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양국은 2004년부터 한 나라의 특허를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특허상호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한·일간에도 특허심사결과 상호 인정의 노력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한·중 사이에도 특허심사결과 상호 인정을 위한 플랜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선행기술 공동조사의 확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한·중·일 지역특허청 설립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실질적 보증을 통하여 지적재산 창출을 확대하여 3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 한·중·일 FTA 추진시 한국정부는 <표 7-4>와 같은 사항을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의 경우 NAFTA 규정을 원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반덤핑의 경우 한·중·일 FTA에서 각국의 반덤핑제도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반덤핑제도의 철폐를 통해 WTO 규율보다 자유무역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허용되어야 하며, WTO 규율과 유사한 수

준으로 보조금 규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계조사 관련 규정이 WTO 규율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해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정책의 경우 한·중·일 3국 모두 실체규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3국간 절차적 협력 및 공동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그 수준은 WTO 경쟁작업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7-4> 무역규범별 추진 제안

	원산지규정	반덤핑	보조금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추진방향	NAFTA	WTO Plus	WTO유사	절차적 협력 및 공동연구	WTO Plus
비고	서비스산업 고려	반덤핑제도의 철폐	단, 상계조사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현 WTO 논의수준과 유사하게	디지털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분야가 Plus

지적재산권의 경우 TRIPS-Plus방식을 채택하여 한·중·일 3국이 최소한 TRIPS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동조화를 이루되, 디지털환경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 관련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조약의 준수여부가 WTO 규정의 Plus 부문으로 쟁점화될 전망이다.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rule-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교역국과의 모든 무역행위가 법대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동시에, 법에 의해 경제체제가 운용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근대적인 요소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지방이기주의, 행정부처간 조율 실패, 법

원 및 행정당국의 자원 부족 등 각종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법과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과 ‘국가중심적 집행’이 주된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단속과 보상에 대한 법적 집행이 정부(특히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정부의 자의성에 의해 법 집행이 이루어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 및 EU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범준수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각종 시장개방양허와 무역규범분야 등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WTO에 가입한 역사가 짧아 다자체제에 대한 적응 여부 역시 의문이다. 특히 WTO규범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 국내법규와 WTO규범과의 조화가 중국의 WTO 가입 후에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중·일 FTA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TO규범과의 부합성을 강조하고,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에 협상력을 집중하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이용한 법적 구속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lmstedt, Kermit and Patrick M. Norton. 2003. "China's Anti-Subsidy Regulations: The Latest Weapon in China's Trade Law Enforcement." *Topics in Chinese Law*. (April)
- Grace, D. R., A. Herwig and Y. Feng. 2003. "China's Antidumping Regime: An Increasingly Costly Element of Doing Business in China." *World Trade Magazine*. (March 1)
- Jung, Youngjin & Qian Hao. 2003.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in China: A Third Way for Competition Regime?" Manuscript.
- Maskus, Keith E. 200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Global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Potter, Pitman B. and Michel Oksenberg. 1999. "A Patchwork of IPR Protections." *The China Business Review*, pp. 8-11. (Jan/Feb)
- OECD. 2003.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aris: OECD.
- WTO. G/RO/53.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 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이 FTA 체결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쌍무간 활발히 진행시키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의 FTA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FTA협상에 있어 금융서비스부문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게 검토되지 않아왔다. 최근 한국과 칠레의 FTA협정에서는 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배제되고, 3년 후에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향후 우리의 다른 국가와의 FTA협상의 벤치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서비스부문의 제외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와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서비스, 특히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이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실물부문의 교역에서 FTA 체결로 인해 무역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확대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 FTA 체결국간의 투자는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중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체결국간 개방요인이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선진국간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FTA에서는 금융서비스부문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NAFTA 및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FTA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관

세인하 및 투자제한조치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 통합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정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 또는 한·중·일간의 FTA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항을 어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FTA 체결에 있어, 금융서비스부문의 효율적인 협상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체결국간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금융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한·중·일 FTA협상이 타결되면, 무역구조가 변하게 됨에 따라 한·일간의 무역 적자폭 확대 및 한·중간의 무역 흑자폭 확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 및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된다.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질 개선(소비자 및 공급자 측면)을 유발하며,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자유화는 금융하부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금융서비스를 중간 투입재로 사용하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금융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또한 금융체제의 심화(financial deepening)를 가져오고 서비스 스펙트럼(spectrum of service)의 확대를 가져온다.

한편 쌍무적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적합성을 상호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선진화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쌍무적 FTA의 가장 큰 강점은 협상의 유연성(flexibility)이다. 즉 쌍무적 FTA는 이해 당사자의 상호 이해가 합치된다면, 협상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WTO 금융서비스 협상범위를 넘어서 금융감독 규제의 통합화, 자본거래 규제의 차별적인 예외 적용 등 그 협상범위는 체결국 상호간의 합의로 결정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싱가포르·

일본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에 잘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일본의 금융서비스부문의 WTO의 금융서비스 협상대상에서보다는 넓은 의미의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양국은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 규제 감독에 관해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및 아시아에서의 금융시장(자본시장을 포함)을 원활하게 발전시키는 데 협력하며, 양국의 금융시장 기반을 개선하는 것을 금융서비스 협력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국은 주식시장 통합의 문제를 검토하고,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엔화의 국제화와 같은 거시경제부문에서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를 국내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향후 우리의 FTA협상에서 금융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 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일 FTA에서 금융서비스분야의 협상 내용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는 당연히 한·중·일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각국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도적 규제사항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중·일 금융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국별로 금융서비스 산업, 즉 크게는 은행, 증권, 보험 및 투신업분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하여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경쟁력의 측정은 다음 이유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첫째,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각 부문에서 한·중·일간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측정함으로써 무역이론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무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론과 유사하게 어떠한 금융서비스부문에서 한·중·일간의 금융서비스 교류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된다. 즉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각 부문별 비교우위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국가가 어떤 금융서비스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고, 이를 통

해 금융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시사점은 한·중·일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협상에서 금융서비스부문의 적극적인 협상은 협상 대상국이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을 때 금융서비스부문의 협상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경쟁력을 측정함은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한·중·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의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협상의 의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한·중·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한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왔으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 보험의 경우 모두 규모 면에서 세계 유수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겸업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구현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은 세계 유수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낮다. 은행의 경우 최근 수익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 및 보험 등에서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대형화 및 겸업화의 미흡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및 증권의 자산운영 및 영업형태를 보면, 위험한 투자를 꺼리고 안정적인 투자에 아직도 치중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국제적 정합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국내 금융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국내 금융규제의 선진화 및 금융 하부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어야 가능할 것이나 일부 자본거래 제한조치와 감독체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은행 중심의 금융중개기관을 경유하는 간접금융이 우위에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자금순환계정표를 보면 국내 비금융부분의 자금조달잔고 가운데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버블붕괴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때문에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1990년대의 버블붕괴 이후 부실채권의 증가에 따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악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악화는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대출이 기피되면서 신용경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악화 때문에 간접금융 우위인 일본의 금융시스템 전체가 기능저하상태에 빠져 있다. 금융기관·금융시스템의 기능저하로 인해 일본의 국내 금융기관·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 저하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은 자금조달과 관련해 리스크 프리미엄(Japan premium)을 요구받게 된다. 금융기관·금융시스템의 기능저하와는 별도로, 1980년대 후반의 버블기부터 일본 국내의 발행기관과 국내 기관투자자가 도쿄 금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유로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

다.

개방 이후 중국의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의 성장을 초과하는 급속한 팽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는 수반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산업에 만연한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은 중국 금융산업에 커다란 충격으로 인식되어 최근 몇 년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은 일정 정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업의 경우 4대 국유상업은행의 독점체제가 타파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의 수익성은 민영은행에 비하여 매우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국유상업은행에 누적된 천문학적 규모의 부실채권의 처리가 은행부문의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유상업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개 자산관리공사의 신설을 통한 부실채권의 처리와 더불어 주식회사체로의 개조 및 주식시장 상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역시 국유보험회사에 의한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저금리와 신생 민영 보험회사들과의 경쟁격화로 파생된 이자율 역마진은 보험업계 전반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의 경우 증권업계 전반에 만연한 편법경영과 1999년 이후의 주식시장 침체로 상당수 증권회사가 적자경영에 직면하여 있다. 열악한 증권회사의 경쟁력과 해외자금의 유입 필요성이라는 모순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QFII제도를 통한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신탁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광둥투자신탁의 파산으로 인한 신탁업의 대대적인 정리정돈이 실시되었다. 2001년 「신탁법」의 공포와 이에 근거한 모든 신탁회사에 대한 재심사, 영업허가 및 등록이 200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신탁회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추정해 본 결과 한·중·일 3

국의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경쟁력은 모든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그리고 중국 순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중·일 3국의 국경간 금융상품 거래가 미미하고, 각국의 금융서비스 기관의 상호 시장진출이 미미한 원인은 한·중·일 금융서비스 기관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부문의 국제경쟁력 미흡은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개방을 차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현재 한·중·일 3국의 WTO 양허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3국간 또는 양자간 차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중·일 금융서비스 기관의 상호 진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3국의 금융서비스 기관이 국내시장에 한정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산조달 및 운영에서도 국내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관 자체의 경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금융구조, 즉 금융규제 및 감독, 시장 인프라, 소득 정도, 그리고 사회체제 및 법률체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단순히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자체 경쟁력보다는 이를 둘러싼 금융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즉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발달 정도 및 금융구조, 금융규제 및 감독, 시장인프라, 소득 정도, 그리고 사회체제 및 법률체제 등 다양한 요인을 상호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경쟁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금융변수를 한·중·일간에 비교해 봄으로써 각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각국의 금융기관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FTA 금융서비스분야의 검토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중국과 일본의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서 한·중·일 3국의 상대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비교를 통해 이 금융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자간(bilateral) FTA라는 것이 다른 비체결국에 대해 체결국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적인 우대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차별적 우대조치는 체결국의 금융기관이 보다 선진적인 기관인 경우에는 차별적인 우대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금융서비스 협상을 통해 차별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선진 체결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다자간 협상을 통한 비차별적인 우대조치로 인해 무분별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금융기관이 보다 선진적인 금융기관일수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차별적 우대조치를 부여할 유인이 커지는 반면 그렇지 못하다면 차별적 우대조치를 부여한 유인이 작아진다. 결론적으로 본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우위는 어떤가 하는 것이고, 또한 차별적 우대조치를 제공할 요인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동종 금융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한·중·일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추정하고자 한다. 우선 한·중·일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세계 유수의 규모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니고 있는지를 지수화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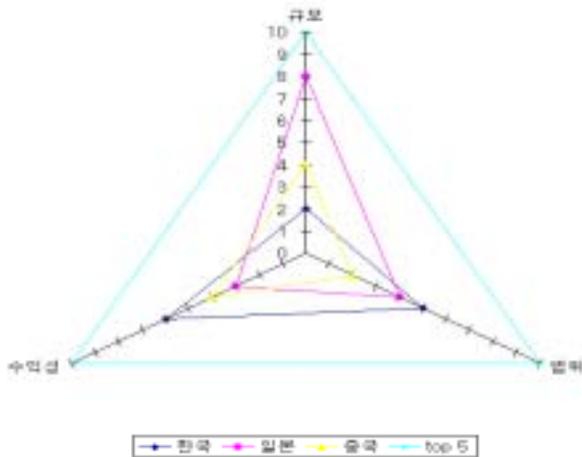
다. 두 번째로는 각 금융기관의 업무 다각화 정도를 파악해서 소위 범위의 경제 정도를 비교하고 이를 지수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금융기관의 수익성 변수를 참고하여 세계 우수 금융기관과의 수익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각 금융서비스에 있어 세계 우수 금융기관의 규모, 업무 다각화 정도 그리고 수익성을 10점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해서 한·중·일 금융서비스기관의 규모, 업무 다각화 정도 그리고 수익성을 지수화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기관과 비교함으로써 한·중·일 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쟁력을 추정하였다.

가. 은행

한·중·일 은행의 규모는 각국 상업은행의 은행당 평균 자산규모를 비교하였는데, 일본이 가장 크며, 중국 그리고 한국 순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8, 중국은 4 그리고 한국은 2로 각각 지수를 수치화하였다. 한편 범위의 경제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은 각국 상업은행의 이자수익대비 비이자수익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자수익대비 비이자수익이 높을수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높고, 일본 그리고 중국순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은 각국 상업은행의 자산수익률을 기초로 하였다. 자산수익률에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들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은행산업의 경쟁력지수를 산출한 결과 총 10점 만점에 한국은 4.3, 일본은 5, 중국은 3.3으로 3국 은행의 경쟁력이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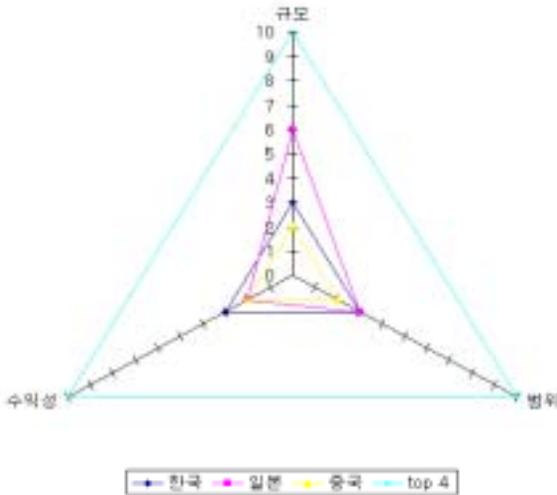
<그림 8-1> 한·중·일 은행업 경쟁력지수



나. 증권

한·중·일 3국 증권사의 규모는 각국 증권사의 1사당 평균 자산규모를 통해 비교하였는데,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다각화 정도는 각 증권사의 수익구조를 비교해서 보다 단순 위탁매매 수익 및 이자수익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수익성 비교는 각국 증권사의 자기자본수익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한국 증권사의 경쟁력지수는 3, 일본은 3.6, 그리고 중국은 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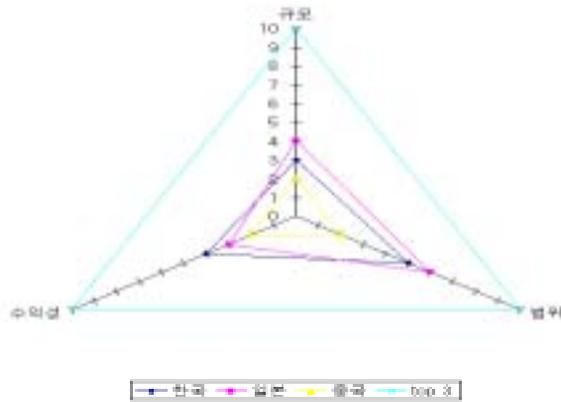
<그림 8-2> 한·중·일 증권업 경쟁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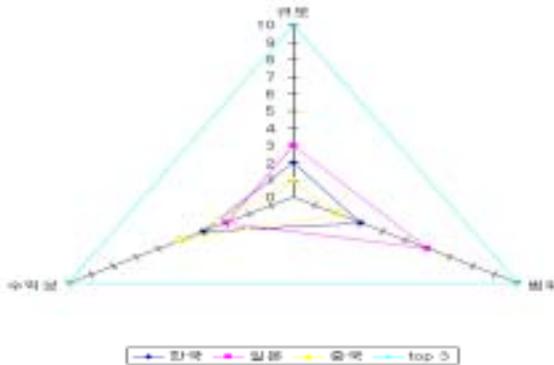
다. 보험

한·중·일 3국 보험업의 경쟁력지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서 이를 추정하였다. 각국 보험사의 규모에 대한 지수는 1사당 평균 자산규모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범위의 경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국 보험사의 자산운영 패턴을 기초하였다. 즉 자산운영에 있어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운영 정도를 업무의 다각화 정도로 추정하였다. 수익성은 자기자산수익률을 통해 지수를 추정하였는데,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순으로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의 경쟁력지수는 한국 4, 일본 4.3, 그리고 중국 2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8-3> 한·중·일 생명보험업 경쟁력지수



<그림 8-4> 한·중·일 손해보험업 경쟁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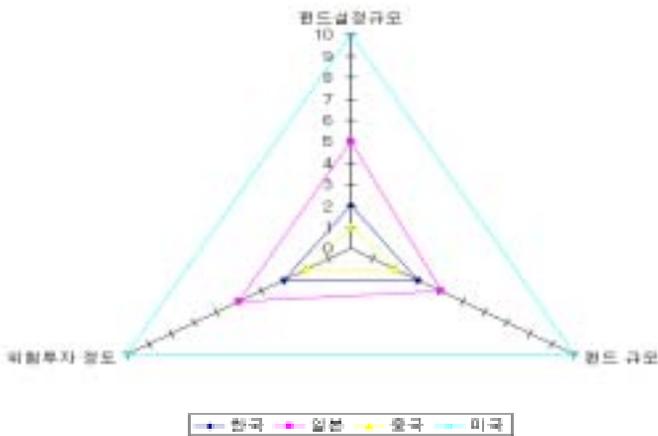


라. 투자신탁업

투자신탁업의 경쟁력지수는 우선 규모 면에서 펀드의 설정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하였다. 또한 투자신탁회사당 펀드 운영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가를 비교함으로써 규모의 경계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국의 펀드성격이 어떠한가를 비교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즉 주식형 펀드의 구성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을 기초로 한 펀드가 많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펀드업무의 선진화 정도로 추정하였다. 중국의 경우 정확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펀드산업이 상당히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경쟁력지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한·중·일 3국의 투신업 경쟁력은 한국 3, 일본 5, 그리고 중국 2로 각각 추정되었다.

<그림 8-5> 한·중·일 투신업 경쟁력지수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은행업이 다른 분야보다 국제적인 경쟁력에 다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융서비스의 총지수를 비교해 보면, 한·중·일 은행의 경쟁력지수가 다른 금융서비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중·일 금융서비스 중 은행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모두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이

고 있는 것은 증권업과 손보사로 나타났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 기관과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차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규모 면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경제 침체 및 금융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기관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은 아직도 금융 저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은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기관에서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금융시장이 지난 10년간 부진한 상황에서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셋째,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국제적 경쟁력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간 시장진출이 미미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국내시장 진출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일본은 도쿄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총 6개 은행 법인과 3개의 사무소가 국내에 진출해 있으며, 중국은 중국 공상은행을 비롯한 2개의 법인과 1개의 사무소가 국내에 진출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국내 진출은 미국과 영국계 은행인 시티은행과 홍콩 상하이은행에 비해 은행업무 영역이 도매은행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자국기업 관련 은행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다. 증권의 경우에는 일본의 노무라증권과 다이와증권만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고, 중국의 증권사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표 8-1>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국가	규모	범위	수익성	총지수
은행	한국	2	5	6	4.3
	일본	8	4	3	5
	중국	4	2	4	3
증권	한국	3	3	3	3
	일본	6	3	2	3.6
	중국	2	2	2	2
생명보험	한국	3	5	4	4
	일본	4	6	3	4.3
	중국	3	2	2	2
손해보험	한국	2	3	4	3
	일본	3	6	3	4
	중국	1	2	5	2.6
투자신탁	한국	2	3	3	2.6
	일본	5	4	5	4.6
	중국	1	2	2	1.6

3. 한·중·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본 장에서는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체결시 검토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 및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국내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한·중·일 FTA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FTA협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기재방식은 크게 자유화를 약속하는 분야만을 기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과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가 자유화됨을 상정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나 조치만을 유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GATS이며, EU가 속한 FTA나 최근의 일본·싱가포르간의 EPA도 이에 해당한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NAFTA를 들 수 있으며, 이후 미국이 체결한 FTA나 한·칠레 FTA도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두 방식 모두 국내 또는 국제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성적 차이점을 갖는다고 주장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선호하는 측에 따르면 이 방식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장치라고 지적되고 있다.²¹⁾ 첫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현상동결(standstill)을 중요한 특성으로 갖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현재 상태를 구속함으로써 자유화의 보다 강력한 토대를 갖추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현존 자유화상태에서 후퇴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lock-in)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은 양허된 사항과 실제 적용되는 사항간의 괴리를 허용하는 GATS의 약점을 방지한다. 둘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거버넌스를 제고시키는 또 다른 점은 투명성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유보리스트에 의해 잠재적 서비스공급자에게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접근상 제한조치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한조치 목록은 또한 국내 규제담당자와 협상담당자간의 국내 정책대화의 유용한 수단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을 갖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협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작용한다. 이 점이 바로 다양한

21) OECD(2002), pp. 18-19.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실제 국제무역협정에서 빈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국경간 거래의 경우는 국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가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협정이 발효할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정부가 미래에 차별적이거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조치를 도입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원론적으로 볼 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상 이를 전면적으로 한·중·일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채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유보리스트에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를 포괄적으로 기재한다면, 오히려 자유화를 촉진시킨다는 당초 목적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법체계가 포지티브 리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한·중·일 FTA는 기본적으로 GATS의 금융서비스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FTA의 전문에 금융서비스를 독립된 장(chapter)으로 구성하고, 금융부속서와 실행협정을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GATS 형태의 채택은 우선 일본·싱가포르간 FTA의 체제와 유사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추가검토의 비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자간 협상이 경험을 통해 그 동안 익숙한 체제라는 장점이 있다

금융서비스의 전문(chapter)에서는 금융서비스부문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FTA협정에서 금융서비스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금융서비스부문에서의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재언급해 향후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Scope and Definitions)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서비스 협상에서의 범위와 정의는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서비스 자유화의 기재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는 경우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도 GATS 형태와 같이 열거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 한·중·일간의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감독체제의 상이성에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의 정의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설립요건 및 영업범위, 그리고 감독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의 실제기능보다는 금융기관 자체의 고유업무에 따라 감독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WTO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가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양허안의 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 협상에서는 보다 정확히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일의 법률체제가 대륙법(continentallaw)에 근거하고 있고, 감독체제가 금융기관별로 분류되어 있어, 다자간 금융서비스 협상의 경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를 설정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감독체제를 기능별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고,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 범위와 정의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시장접근(Market Access)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도 금융서비스 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에서는 기존 GATS 제16조 2항의 시장접근 조항 규정을 원용하는 수준에서 시장접근조항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부분에서는 중국이 시장접근 제한사항을 WTO에 제시한 수준보다 높게 양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국경간 거래의 허용 여부는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부문에서 중요한 협상대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양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무역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한국은 국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의 건전성 그리고 국내 금융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자본 이동이 수반된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금융 자유화 및 IT 기술의 발달에 기인하여 금융서비스의 국제적인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도매 금융업뿐만 아니라 소매 금융업에서도 국경간 공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선진국들이 GATS협상을 통해 국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및 소비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자간 협상에서의 국경간 거래 개방압력을 당분간 수용하기 어렵다면, 한·중·일 FTA에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서로 자유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일 FTA에서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간 공급에 대한 차별적 자유화는 국내 감독 및 건전성 규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광고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광고에 대해서 양국의 감독기관이 이를 인가하는 방식을 취해 볼 수 있다. 일부 중요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등록을 요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소매금융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국가의 감독 당국에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신금융서비스

일본·싱가포르간 EPA의 금융서비스 부속서는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 외에는 현 GATS의 금융서비스 부속서의 내용을 그대로 참조한 것이 대부분이다.²²⁾ 신금융서비스 관련규정은 현재 GATS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의 B.7항을 좀더 발전시킨 것이다. 즉 Understanding B.7항에서는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내에 설립된 타회원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신금융서비스 제공을 허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싱가포르간 EPA에서는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신금융서비스의 조항은 비차별의 전제하에서 이전의 계약국의 관련 면허조건, 제도상 및 법적 형태의 요건에 따른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한·일 FTA에서 이러한 신금융서비스 관련조항을 채택할 경우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공급되는 신파생상품의 공급이나 보증채권(surety bond), 기업연금,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및 대체증권거래소(ATP) 등 일본의 금융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자유화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일 금융시장의 현 상황을 비교하여 볼 때 이를 부담으로 우려하기보다는 기회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IMF 구조개혁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신금융서비스

22) 신금융서비스는 기존의 상품 또는 새로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나 상품이 인도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정 계약국내에서는 어떤 금융기관도 공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계약국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된다.

가 상당 부분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시장에 비해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신금융서비스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제외한다면 그 설득력이 약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금융서비스 관련규정을 채택하는 방향에서 향후 가능성이 있는 감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입장이 바람직하다.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혹 일본 금융시장이 우위를 갖는 신금융서비스의 추가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전성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 조문(chapter)에서 금융서비스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쟁해결규정을 삽입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TA의 분쟁해결기구의 주요 체제를 인정하면서, 특히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국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분쟁해결 위원회의 설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적용대상 제외

한·중·일 FTA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건전성 규제를 채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건전성 규제의 예외조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법정 사회보장제도나 공공퇴직연금제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FTA협정에서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조치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7) 신규 조항

최근의 FTA협정은 금융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의 신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조항의 범위는 FTA의 특성상 다양하며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다. 한·중·일 FTA에서는 3국의 자본시장의 상호 발전을 위해 시장통합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한·중·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단순히 금융서비스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는 소극적인 협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한·중·일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중·일 자본시장의 발전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한·중·일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서비스 협상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의 금융서비스 기관은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금융기관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경쟁력이 미흡하고, 전반적으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 교역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의 국내 자본시장규모는 매우 크다. 만약 한·중·일의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진출을 대폭적으로 활성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합시킨다면, 각국의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의 입장에서는 자본조달 및 운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성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FTA 금융서비스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일 3국의 무역거래규모에 비해 3국의 자본거래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의 한·중·일 상호 국경간 거래의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3국간 자본시장 연계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2003년 8월 현

재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의 주식총액은 120조 원을 상회하여 전체 시가 총액(316조 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주식투자는 전체 외국인 거래비중 중 0.5%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상장 채권 주식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2003년 8월 현재 0.19%에 지나지 않는다.

<표 8-2> 국내 외국인 주식투자 현황(2003년 8월)

(단위: 억 원, 결제기준)

국 별	매 수	매 도	순 매 수	거래비중 ^{주)}
미 국	23,819	13,844	9,975	30.5
영 국	15,775	13,155	2,620	23.4
일 본	213	357	△144	0.5
네덜란드	1,609	1,630	△21	2.6
말레이시아	1,918	1,284	634	2.6
싱 가 포 르	2,240	2,720	△480	4.0
룩셈부르크	5,059	3,453	1,606	6.9
아일랜드	2,287	1,873	414	3.4
버진아일랜드	636	275	361	0.7
기 타	16,905	14,496	2,409	25.4
총 계	70,461	53,087	17,374	100

주: 전체 외국인 거래대금 중 해당국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금감원(2003), 「2003년 8월 중 외국인 투자현황」, 보도자료.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2002년 전체 일본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0.36%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대부분 채권투자이며 주식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중 한국으로의 투자는 2002년 전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의 0.16%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치중되어 있으나, 한국에 대한 채권투자는 일본의 2002년 전체 채권투자의 0.14%를 기록한 반면 주식투자는 0.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자본거래의 제약

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²³⁾

<표 8-3> 일본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단위: 1억 엔, %)

	일본으로의 외국인 자본투자			한국으로부터의 자본투자		
	주식	채권	전체	주식	채권	전체
2001	779,015	522,905	1,301,920	4(0.0005)	5,478(1.04)	5,482(0.42)
2002	644,372	582,775	1,227,147	2(0.0003)	4,491(0.7)	4,493(0.36)

주: 투자 유입은 금융상품 매수규모를 나타냄.

() 안은 전체 일본의 외국인투자 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비중을 나타냄.

자료: Bank of Japan(<http://www.boj.or.jp>)

<표 8-4>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단위: 1억 엔, %)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	채권	전체	주식	채권	전체
1997	136,194	1,774,491	1,910,685	262(0.19)	2,191(0.12)	2,453(0.12)
1998	162,507	1,611,979	1,774,486	294(0.18)	1,713(0.16)	2,007(0.11)
1999	198,290	903,361	1,101,651	776(0.39)	1,432(0.15)	2,208(0.20)
2000	222,435	929,894	1,152,329	748(0.33)	1,693(0.18)	2,441(0.21)
2001	176,936	1,401,566	1,578,500	386(0.21)	1,258(0.08)	1,644(0.10)
2002	197,698	1,281,587	1,479,285	667(0.33)	1,832(0.14)	2,499(0.16)

주: 투자 유입은 금융상품 매수규모를 나타냄.

() 안은 전체 일본의 외국인투자 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비중을 나타냄.

자료: Bank of Japan(<http://www.boj.or.jp>)

셋째, 현재의 한·중·일 금융서비스분야의 개방 정도를 감안할 때, FTA 협상에서 3국이 모두 WTO 이상의 개방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일본은 이미 선진국수준의 금융서비스 개방을 시행하

23) 물론 이는 중국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고 있다. 한국 또한 WTO 금융서비스부문에서 최근 OECD 가입조건과 최근 자유화조치를 반영한다면 국경간 거래를 제외한 부분에서 많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의 금융서비스부문에서는 추가적이고 차별적인 자유화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자유화조치가 필요하지만 한국에 대해 FTA 체결에 따라 차별적인 자유화조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한·중·일 FTA에서 WTO+ α 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WTO 수준에서만 극단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을 한정할 경우 이는 근본적으로 FTA에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 전문(chapter)이나 부속서(annex)가 필요없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거래 등에서 한국이 WTO에 양허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한·중·일 FTA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FTA의 새로운 조류에서 나타나듯이 시장통합 및 감독의 조화(harmonization)와 같은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협상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RTA)이 확산됨으로 인해 우리도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에 대해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ASEAN 자유무역협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럽식 경제통합을 목표로 함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시장통합문제는 더욱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의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은 단순히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시장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비교역재로 취급되었던 서비스산업의 국경간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체결국간 개방요인은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간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FTA에서는 금융서비스부문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NAFTA 및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FTA 경우를 살펴보다도, 관세인하 및 투자제한조치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통합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정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 또는 한·중·일간의 FTA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항을 어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추정해 본 결과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경쟁력은 모든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그리고 중국 순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중·일 3국의 국경간 금융상품 거래가 미미하고, 각국의 금융서비스 기관의 상호 시장진출이 미미한 원인은 한·중·일 금융서비스기관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부문의 국제경쟁력 미흡은 한·중·일 FTA의 금융서비스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개방을 차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현재 한·중·일 3국의 WTO 양허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3국간 또는 양자간 차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중·일 금융서비스기관의 상호 진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3국의 금융서비스기관이 국내시장에 한정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산조달 및 운영에서도 국내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더욱이 한·중·일 3국의 금융서비스기관 중 은행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중·일 3국의 상업은행의 상호 진출과 국경간 거래는 현 시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의 경우 시장진입이 EU 회원국간 자유화되었고, 동일한 화폐를 사용함

에도 불구하고 소매금융의 상호 진출 및 국경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도 한·중·일 3국의 은행부문의 상호 진출과 국경간 거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한·중·일 3국의 투자은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사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경쟁력이 미흡하다. 중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친 제약이 상당 부분 있어 이를 철폐한다면 일부 기관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최소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은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후이나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 금융서비스의 상호 진출과 국경간 거래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한·중·일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각국 금융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각국의 금융 국제화를 촉진시키며, 국제적 경쟁력을 상호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금융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서비스 협상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는 지역무역협정의 기본골격을 구성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무역 및 투자의 국경간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국경간 거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금융서비스 협상은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및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가입과 WTO 금융서비스 협상 등 다자간 협상체제에서 개방화와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협상은 한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개방화와 자유화를 통한 금융선진화를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국제금융허브 추축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다. 한국이 동아시아 국제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개방화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에 부응하는 금융규제 및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금융선진화이다. 즉 한·중·일 또는 향후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시 금융서비스부문의 협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를 시행하고, 이를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 선진화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서비스부문의 협상은 체결국간의 자본시장 연계를 통해 단순한 금융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국경간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통합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통합을 위한 자본시장의 연계 및 통합, 규제 조화(harmonization), 그리고 시장 인프라의 협력 등 다양한 자본시장의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각 부분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3국간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구를 설립하고, 향후 각 부분의 실질적인 시행조치를 위한 금융서비스 행동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감원. 2003. 「2003년 8월중 외국인투자 현황」 보도자료.
- 증권업협회. 2002. 「최근 증권회사 영업 현황 및 시사점」.
- 김준동·양두용. 2002. 『WTO 금융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이장영. 2000. 『WTO 서비스 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 금융서비스』. 정책연구 0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Bank of Japan(<http://www.boj.or.jp/>).
- Euroclear. 2002. “Quick Cash Card.” (June)
- Giordano, Francesco. 2002. “Cross-border trading in financial securities in Europe: the role of central counterparty.” European Capital Market Institute.
- Jordan, Cally and Giovanni Majnoni. 2002. “Financial Regulatory Harmonization and the Globalization of Fina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919.
- IMF. 1995-2001.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OECD. 2002. *Bank Profitability*.
- Oh Gyutaeg, Daekeun Park, Jaeha Par, and Changyong Rhee. 2003. “Building a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 the Asian Bond Markets: Asia Settle.” Preceeding paper, Workshop on East Asia’s Strategy for Regional and global Financial Cooperation.
- Patricio Contreras. 2003. “Financial Service Trade in the Western Hemisphere.” Mimeo.
- WTO. 1996. “Opening markets in financial services and the role of the GATS.”
-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2000. “A Review of Statistics on Trade Flows in Services.” S/C/W/27/Add. (October)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득실 관계를 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 등과 같은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지역무역협정의 본래 취지인 무역증진을 통한 후생증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간의 환율제도의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 Eichengreen (1993)은 환율이 불안정한 경우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증진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역협정에 대한 저항이 강해진다고 주

장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사례 및 실증분석에서 드러나듯이 환율의 불안정성 또는 변동성 증가는 무역을 위축시키고 심지어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환율의 변동성 증가가 반드시 무역을 위축시키지 않으며, 환율변동성과 무역의 관계가 일률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환율변동성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실증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FTA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창설시 제기될 수 있는 환율안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즉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에 환율변동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증력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 사례를 통해 각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3절에서 각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운용이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4절에서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환율변동성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5절에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증력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6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본 절에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인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경제공동체(MERCOSUR),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등의 사례를 통해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정비가 어떠한 수준까지 이

루어졌는지 검토하였다. 네 개의 지역무역협정하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만이 1970년대 초반 이후 환율공조의 경험을 통해 1999년 단일통화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물론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15개국 중 3개국은 아직도 단일통화권에 편입되지 않고 있지만, 이와 같은 유럽의 경험이 여타 지역무역협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MERCOSUR의 경우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가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역내 교역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해도 별로 득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체로 지역무역협정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환율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는 첫 번째 경제적 동기는 역내 교역비중이 크고 환율의 불안정이 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우선 역내 국가들이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환율변동은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종 산업내에서도 서로 차별화된 상품이 생산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국적을 달리할 뿐 완전히 동질적인 상품간에는 환율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가격경쟁력의 변화는 심각한 산업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경우 농산물의 공동시장이 형성되면서, 특히 환율안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만약 이러한 동질적인 교역재의 비중이 전체 교역재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환율안정을 통해 교역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 환위험 및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동기만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공조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율공조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고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유럽에 비해 교역과 생산구조가 수직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Eichengreen and Taylor 2003). 따

라서 환율변동이 교역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된다. 특히 북미자유무역지대에 속해 있는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 및 생산구조를 보게 되면 수직적 분업관계는 보다 뚜렷해진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MERCOSUR의 경우에는 1999년 브라질의 급격한 환율절하가 결국 2001년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통화위원회체도를 포기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 특히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MERCOSUR내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의 환율충격에 의해 반복적으로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입었다. 이는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구조를 지니게 될 경우 역내 환율안정의 필요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즉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하였다는 점이 환율안정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제블록별로 역내 환율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환율의 변동성은 시기별, 경제블록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각 경제블록별로 환율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의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ichengreen and Taylor(2003)는 이 점에 착안하여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및 권역별로 환율불안정의 요인을 식별함으로써 환율공조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즉 Bayoumi and Eichengreen(1997)의 실증분석모형을 원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이 협정의 체결이 환율변동성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MERCOSUR, AFTA 등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환율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Eichengreen and Taylor(2003)의 회귀분석에서 자유무역협정이 무역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이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무역 이외의 여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⁴⁾ 즉 무역경로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이 환율안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무역경로 이외의 여타 요인(정치적 경로)에 의해 환율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경로를 통해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는 환율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NAFTA의 경우를 보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이 환율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반면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한 환율안정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MERCOSUR의 경우 무역경로를 통해 환율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로를 통해 자유무역협정하에서 환율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무역경로를 통한 환율안정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 경로를 통해 환율안정이 도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유럽통화동맹의 체결에서 정치적 의지가 경제학적인 어떤 고려사항보다도 중요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북미자유무역지대가 정치적 측면에서 환율공조체제의 과정을 거쳐 통화동맹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북미자유무역지대, 특히 캐나다와 미국간 통화동맹의 체결은 최적통화지역의 요건을 비롯한 기타 편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Buiter 1999). 그렇다면 미국과 캐나다는 현재의 자유무역협정체제를 통

24) Eichengreen and Taylor(2003)는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을 증진시키고 무역증진이 환율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무역경로를 지역무역협정이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로 보고 있다. 반면에 무역경로 이외에 지역무역협정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환율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환율공조의 필요성 증진을 직접적인 경로로 보고 있다.

화동맹체제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멕시코를 포함시킨다면 북미통화동맹체제의 구축을 향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의 기업인들은 NAFTA 출범 이후 강한 달러가 유지되는 가운데 완만한 평가절하를 통해 대미국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적어도 강한 달러정책이 유지되는 동안 캐나다와 멕시코의 기업인들은 자국통화의 가치가 완만히 평가절하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환율변동성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환시장이 발달하여 환율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변동성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 상품시장의 완전한 통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대체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invisible trade barriers)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통화통합은 가장 확실하게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효과를 지니게 되므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대체산업은 통화통합에 반대하게 된다. 유럽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통한 실물부문의 통합이 초기부터 환율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업인들에 의해 지지를 받은 반면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환율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찾기 어려운 점도 정치적 의지의 생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대칭적인 통화통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통화통합은 캐나다와 멕시코경제에 대해 미국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계통화로써 달러화를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미국의 일반시민들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스스로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비대칭적인 형태로 달러화를 채택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을지 모르나 미국인의 세금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적 곤경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EU, NAFTA, MERCOSUR, AFTA 등 주요 4대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환율변동성과 무역, 경제성장 및 경기동조화 등과 같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았다. 환율변동성과 무역에 대한 4대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환율변동성과 무역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환율변동성 감소가 역내 무역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본 결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1인당 GDP를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대 지역무역협정에서 협정체결 이후 1인당 GDP 성장률이 높아진 경우는 AFTA와 EU로 나타났으며, NAFTA와 MERCOSUR는 오히려 1인당 GDP 성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각 주요 지역무역협정 회원국의 개별 1인당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각 회원국간의 1인당 GDP 성장률의 차이가 협정의 체결로 인해 축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며, 회원국간의 비대칭적인 경제성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4대 지역무역협정의 경기동조화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경기동조화의 정도는 환율고정 또는 단일화폐 채택 등과 같은 환율변수의 변동성을 제거하려는 제도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경기동조화 정도를 비교해 보면, NAFTA와 EU의 경우 경기동조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MERCOSUR와 AFTA는 상대적으로 경기동조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MERCOSUR와 AFTA의 경기동조화 정도가 낮다는 것은 이 회원국가들이

환율을 통해 각 비대칭적인 경기변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요인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단일화폐를 채택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공조가 더욱 어려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무역증진효과를 충분히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은 국경효과(border effect)에 주목하고 있다. 즉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국경은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국경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경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특히 McCallum(1995)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캐나다의 10개 주(provinces)와 미국의 50개 주간의 무역흐름을 살펴본 결과 중력모형이 설명하는 무역흐름에 비해 캐나다와 미국간의 실제 국경간 거래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미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경간 보이는 무역장벽이 제거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경간 거래를 저해하는 자국 편향(home bias)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캐나다의 서로 다른 주간의 거래와는 달리 일단 미국과의 국경간 거래는 단지 국경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요인을 통제할 경우 캐나다의 주간 거래량은 캐나다 한 주와 미국의 한 주의 국경간 거래량에 비해 단지 국경 내부의 거래라는 이유로 20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는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보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국경의 존재는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제반요인에 의해 자국상품을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McCallum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역통합 그 자체만으로는 시장통합이 매우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통합은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로 가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의 역내 수출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미국의 역내 수출비중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NAFTA 3국의 역내 수입비중은 미국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역내 수입이 증가한 것은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NAFTA의 경우 역내 환율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의 환율은 미 달러대비 완만한 약세를 시현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NAFTA가 국경 없는 경제통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환율안정이 교역증진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 수출 및 수입의 비중이 1990년에 비해 2000년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1995년 이후 역내 수출 및 수입의 비중은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즉 MERCOSUR의 경우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있지만 아직도 역내 국가들간의 교역장벽이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무역협정이 반드시 배타적인 무역블록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그 자체가 역내 무역비중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환율의 불안정은 역내 교역의 증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MERCOSUR의 경우 역내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이 1998~99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환율의 불안정성이 커졌고, 2002년에는 아르헨티나가 달러에 고정하였던 통화위원회체도를 포기함에 따라 더욱 환율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환율과 무역량간의 이론을 살펴보고, Chowdhury(1993)의 실증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중·일간의 환율변동성이 이 3개국간의 무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환율변동성과 무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결과들간에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환율변동성이 무역감소를 초래한다고 보는 견해는 대체로 환율변동성이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점에 주목한다. 즉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위험기피자에게는 위험을 조정할 무역으로부터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어 무역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론적으로는 위와 상반된 견해도 존재한다. 즉 환율변동성이 오히려 무역증가를 초래한다는 견해인데, 이러한 결론이 도출 가능한 이론적 근거는 환율변동성에 따른 기대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해진 다양한 실증분석결과도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분석대상을 한·중·일에 국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장기적으로 환율변동성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각 변수의 공적분관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환율변동성뿐 아니라 다른 변수도 수출량에 영향을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먼저 수입국의 소득 증가는 수입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므로 결국 수출국의 수출량은 증가하리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공적분관계를 추정한 결과는 <표 9-1>~<표 9-3>에 정리하였다. <표 9-1>, <표 9-2> 그리고 <표 9-3>은 각각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우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는 대체로 수입국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량은 장기적으로 상대국의 소득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율변동성을 포함한 그밖의 변수에 대한 계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는 적어도 장기에 있어서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9-1> 공적분 추정 결과: 한국

Partner country	Normalized co-integrating vector						
CHN	$EX_t =$	2.653**	I_t	- 0.269	P_t	+ 0.581	σ_t
		(3.512)		(-0.662)		(1.271)	
JPN	$EX_t =$	- 3.509	I_t	+ 5.681	P_t	+ 3.125	σ_t
		(-0.690)		(1.588)		(1.140)	
USA	$EX_t =$	2.319**	I_t	+ 0.135	σ_t		
		(15.597)		(1.186)			
USA	$P_t =$	0.816*	I_t	- 0.505	σ_t		
		(1.996)		(-1.608)			

- 주: 1) KORUSA는 공적분벡터 2개임.
 2) exports를 1로 normalization.
 3) () 안은 t-통계량임. *, **는 각각 5%,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4) EX_t 는 실질수출, I_t 는 산업생산지수, P_t 는 실질환율, σ_t 는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뜻함. 전변수는 log를 취함.

일본의 경우,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출량은 수입국의 소득에 대해서 역시 이론과 부합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량은 장기적으로 상대국의 소득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 (+)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두 개 더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식에서 실질환율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진 것으로, 역시 이론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두 번째 경우는 미국에 대한 수출 식에서 환율변동성의 계수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장기에 있어서도 환율변동성이 적어도 미국에 대한 수출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2> 공적분 추정 결과: 일본

Partner country	Normalized co-integrating vector							
CHN	EX _t	=	- 7.922** (-2.660)	C	+ 1.779** (8.050)	I _t + 0.903** (2.784)	P _t - 0.157 (-1.085)	σ _t
KOR	EX _t	=		4.651 (0.398)	I _t - 6.207 (-0.336)	P _t - 2.282 (-0.489)	σ _t	
USA	EX _t	=		1.345** (14.452)	I _t - 0.661** (-6.883)	σ _t		
USA	P _t	=		0.472** (3.094)	I _t - 0.589** (-3.738)	σ _t		.

주: 1) JPNUSA는 공적분벡터 2개임.
 2) <표 9-1>의 주 2) ~ 4) 참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 식에서는 상대국의 소득에 대한 계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이론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 식의 경우 두 개의 공적분 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 식에서는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계수와 실질환율에 대한 계수는 모두 양의 값으로 이론적으로 부합된 결과이다. 또한 환율변동성에 대한 계수도 음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도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표 9-3〉 공적분 추정결과: 중국

Partner country	Normalized co-integrating vector					
KOR	$EX_t =$	14.961	$C + 2.250^{**}$	$I_t - 7.749$	$P_t + 1.035$	σ_t
			(3.122)	(-1.030)	(0.982)	
JPN	$EX_t =$		- 12.778	$I_t - 14.329$	σ_t	
			(-0.423)	(-0.461)		
JPN	$P_t =$		5.205	$I_t + 4.917$	σ_t	
			(0.496)	(0.496)		
USA	$EX_t =$	- 14.883 ^{**}	$C + 2.796^{**}$	$I_t + 2.949^{**}$	$P_t - 0.123^{**}$	σ_t
		(-18.160)	(18.930)	(13.029)	(-5.273)	

주: 1) CHNJPN은 공적분벡터 2개임.

2) <표 9-1>의 주 2) ~ 4) 참고

한편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오차수정모형으로 변화시킨 추정결과에 의해 추론이 가능하다. 추정결과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는 환율변동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일본 수출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환율변동성의 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6기 시차를 둔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수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차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어 각각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며, 모든 계수의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은 환율변동성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대미국 수출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환율변동성이 1기에서 4기 시차까지 매우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밖의

시차변수의 계수 추정치도 모두 음수이며 유의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수출의 경우 역시 환율변동성은 단기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4기까지의 시차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 시차변수들은 간혹 양수를 갖기도 하지만 그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는 환율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의 경우 환율변동성의 계수는 모두 음수이며 간혹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대일본 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율변동성 계수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많은 경우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일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의 대미국 수출의 경우만 환율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대일본 및 대미국 수출이, 일본의 경우는 대한민국 수출이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대한민국 및 대일본 수출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율변동성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단 한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만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으로 부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한·중·일 3국간 및 미국과의 교역에서 환율변동성이 장기 또는 단기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환율변동성의 감소가 앞으

로 3국간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오차수정모형에 따른 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측정된 환율변동성이 외생적인 변화를 반영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반균형모형에서 강조하듯이 환율변동성과 교역과의 관계는 환율변동성을 초래하는 구조적 충격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환율변동성의 계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성이 외생적인 경우에 더욱 합당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환율변동성의 외생성을 엄밀히 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계적으로 외생성을 검정하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방법들이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외생성 검정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 Granger 인과관계(Causality)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관한 한 외생적인가 여부를 살펴 보았다. 검정결과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 모두에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상대국에 대한 수출은 환율변동성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환율변동성을 어느 정도 외생적으로 볼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 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 방정식을 추정하여 환율변동성을 줄이려는 여러 형태의 환율제도 도입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중력모형은 마치 두 물체간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처럼, 두 국가간의 무역량의 크기가 양국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정상적(normal)인 무역의 크기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최근에는 양국의 언어, 접경 여부, 식민·피식민지 등 역사적 관계 등 많은 추가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국가간 교역량의 변화를 잘 설명하는 적절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기존의 분석들은 환율제도 중에서도, 특히 통화동맹이 어떠한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Rose(2000)는 이 분야의 최초의 연구결과에서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국가간 시계열자료(cross-country, time-series)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추정하여 통화통합의 무역에 대한 효과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요인을 조정하고 공통의 화폐를 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무려 300%에 달하는 무역규모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여러 연구자에 의한 많은 후속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Rose(2000)의 처음 추정치보다는 적으나 통화통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역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암묵적으로 환율체제를 통화동맹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경우만을 상정하여 통화동맹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계 각 국가의 환율체제가 이 두 가지 경우로 양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마다 시간에 따라 통화동맹과 자유변동환율체제 사이의 환율체제를 갖게 되며 환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정환율제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고정환율체제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높이는 환율제도 효과와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가상적으로 한·중·일간에 환율변동성을 크게 줄이는 환율제도가 독립적으로 또는 지역무역협정과 더불어 도입되는 경우 한·중·일 상호간의 무역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의 국제무역 연구에 널리 사용된 중력모형 방정식을 기초로

이에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식 (1)과 같이 모형을 확장하였다.²⁵⁾

$$\begin{aligned} \ln(\text{Trade}_{ijt}) = & \beta_0 + \beta_1 \ln(\text{GDP}_i \text{GDP}_j)_t + \beta_2 (\text{GDP}_i \text{GDP}_j / \text{Pop}_i \text{Pop}_j)_t \\ & + \beta_3 \ln \text{Dist}_{ij} + \beta_4 \ln(\text{Area}_i \text{Area}_j) + \beta_5 \text{Border}_{ij} + \beta_6 \text{Language}_{ijt} \\ & + \beta_7 \text{ExComColony}_{ij} + \beta_8 \text{ExColony}_{ij} + \beta_9 \text{CurColony}_{ij} \\ & + \beta_{10} \text{HardPeg}_{ijt} + \beta_{11} \text{SoftPeg}_{ijt} + \beta_{12} \text{RTA}_{ijt} + \delta \text{Year} + \varepsilon_{ijt} \end{aligned} \quad (1)$$

식 (1)에서 i 와 j 는 쌍무무역 국가를 t 는 시간을 나타낸다.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rade_{ijt}: t 시점의 i 국과 j 국간의 평균 실질 쌍무무역량

GDP: 실질 국내 총생산

Pop: 인구 수

Dist: i 국과 j 국간의 거리

Area: 국토면적

Border: i 국과 j 국의 영토가 인접해 있는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binary variable)

Language: i 국과 j 국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ExComColony: i 국과 j 국이 과거 동일한 국가의 통치하 식민지였던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ExColony: i 국과 j 국이 서로 식민통치국과 식민지국인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CurColony: i 국과 j 국이 t 시점에서 모두 다 식민통치하에 있을 때 1의

25) 본 추정에서 사용한 모형은 Glick and Rose(2002)에서 사용한 추정식을 확장한 것이다.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CurrUnion: *i*국과 *j*국이 동일한 통화통합지역에 속한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HardPeg: *i*국과 *j*국이 동일한 통화에 각각 환율을 강하게 고정하는 환율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SoftPeg: *i*국과 *j*국이 동일한 통화에 각각 환율을 약하게 고정하는 환율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RTA: *i*국과 *j*국이 동일한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형성한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Year: 각각 연도의 자료에 대해서 특정 연도의 값일 경우에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집합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대부분은 Glick and Rose(2002)로부터 얻은 것으로 원 자료는 1948년부터 1997년까지의 186개국의 자료를 포함한다. 본 자료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환율제도에 관한 변수의 경우 1971년 이전에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1971년에서 199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환율체제는 Reinhart and Rogoff(2003)가 제시한 환율체제 분류에 기초하여 경성환율고정(hard-peg), 연성환율고정(soft-peg), 자유변동(floating)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환율동맹(currency union)의 효과를 따로 살펴보기 위해 경성환율고정(hard-peg)을 환율동맹과 그 외의 경성고정환율제도(non-CU hard-peg)로 세분하여서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였다. Reinhart and Rogoff(2003)는 IMF에 보고된 각 국가의 명목상(de jure) 환율제도가 아닌 실제 운용되는(de facto) 환율제도를 모두 15개의 환율제도로 세분(fine classification)하고 이를 다시 6개로 대분류(coarse classification)하

여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대분류에 기초하여 한 국가가 기축통화에 환율을 강하게 고정하거나(coarse classification=1) 또는 $\pm 2\%$ 이내에서 조정 가능한 crawling peg(coarse classification=2)의 경우를 경성환율고정(hard-peg)으로, 그 외의 고정환율제도는 연성환율고정(soft-peg)으로 정의하였다.²⁶⁾

지역무역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료로부터 구한 13개의 협정을 포함한다. 13개의 주요 지역무역협정은 ASEAN FTA(AFTA), Andean Community of Nations(CAN),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CAC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CARICOM),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CER), European Communities/European Union(EC/EU),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Papua New Guinea-Australia Trade and Commercial Relations Agreement(PATCRA),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APT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SPARTECA), and US-Israel FTA이다.

본 연구는 추정에서 i, j 국의 쌍을 한 단위로 하는 16만 8,289개의 연 자료를 사용하였다. 관측치는 해마다 상이하다. 모든 관측치(16만 8,289) 중에서 약 3.1%(5,268)에 해당하는 국가 쌍이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되었다. 환율제도의 분류에 따르면 약 9.5%(1만 5,904)에 해당하는 국가 쌍이 경성환율고정(hard-peg), 9.7%(1만 6,391)에 해당하는 국가 쌍이 연성환율

26) 기축통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디아의 7개국을 포함한다. 한 국가가 경성환율고정을 하고, 그 무역상대국이 같은 기축통화에 연성환율고정을 한 경우는 연성환율고정으로 분류하였다. 고정환율제도를 통화동맹,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등의 제도에서부터 환율조정 변동폭 자체가 이동하는 moving band 제도까지 좀더 자세히 분류하여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이나 본 논문의 초점인 자유무역지대와의 결합효과를 보기에는 각 제도별로 자료 수가 너무 적어져서 분석이 불가능하다.

고정(soft-peg)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경우는 변동환율 제도의 경우로 분류된다. 전체 관측치 중 1.4%(2,278)에 해당하는 국가 쌍은 통화동맹지역에 속한다.

표본기간중에 지역무역협정과 경성환율고정을 같이한 경우는 전체의 0.93%(1,563)이며 통화동맹을 동시에 한 국가 쌍은 전체의 0.18%(299)이다. 지역무역협정과 연성환율고정을 같이한 경우는 전체의 0.51%(860)이다.

관측치는 각 연도마다 1만 1,140개의 국가 쌍으로 구성된 패널자료이다. 추정방법은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은 각 국가 쌍에 고유한 요인의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효과(random effects) 일반화 최소자승법(GLS)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²⁷⁾ 그리고 특정한 연도에 고유한 관찰되지 않은 충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표 9-4>는 임의효과 추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의 (1)열에는 경성환율고정 더미만을 환율제도로 포함한 경우를, (2)열에서는 연성환율고정(soft-peg)을 추가로 도입한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열에서는 경성환율제도를 통화동맹과 비통화동맹으로 나누어 각각의 더미변수를 도입한 결과를 보여준다.²⁸⁾

먼저 (1)열의 추정결과를 보면 중력모형이 국가간 쌍무무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추정결과는 모형이 예상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나타났고, 과거 동일한 식민통치국 더미(ExComColony)와

27)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가정한 추정결과는 임의효과 추정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28) 본 연구에서는 통화동맹과 지역무역협정 참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외생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통화동맹과 지역무역협정 참여를 통해 무역증가효과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한 나라에서 실제로 통화동맹이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본 모형의 방식에 의한 추정에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식민지 더미(CurColony)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가간 거리와 영토면적의 로그값을 취한 설명변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수로 나타났다. 제(1)열의 추정결과 임의효과 추정모형에서 국가간 거리 로그값의 추정계수는 -1.39 (s.e=0.03)로 나타나 로그로 변환한 국가간 거리가 0.80(표준편차의 크기)만큼 늘어날 때 두 국가간 쌍무무역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로그로 변환한 실질국내총생산, 로그로 변환한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동일 국경더미, 동일 언어더미, 과거 식민지 관계국더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쌍무무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정결과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이 많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을수록 국가간 쌍무무역량이 증가하게 된다. <표 9-4> 첫 번째 열의 추정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의 10% 증가가 9.8%의 무역량 증가를 불러오는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의 10% 증가는 2.0%의 무역량 증가를 가져온다. 동일 국경과 동일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역량은 각각 64% 및 49%씩 늘어나게 된다.²⁹⁾

경성환율고정의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수값 0.095(표준오차=0.017)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경성환율고정제도의 도입은 쌍무 무역량을 10%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2)열에서는 연성환율고정의 환율제도 더미변수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경성환율고정을 비롯한 설명변수들의 추정치는 (1)열의 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경성환율고정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계수값(0.096, 표준오차=0.017)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경성환율고정을 한 국가 쌍의 경우 변동환율을 채택한 국가 쌍에 비하여 쌍무무역량이 10%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에 반하여 연성환율고정의 경우는 추정계수(0.004, 표준오차=0.016)의 값이 0과

29) $e^{0.495} = 1.640$, $e^{0.399} = 1.490$ 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의 값이 0에서 1로 변할 때 무역량의 증가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

(3)열의 결과는 경성환율제도를 통화동맹의 경우와 비통화동맹 경성고정으로 나누어 각각의 더미변수를 도입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통화동맹의 더미변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수값 0.42(표준오차=0.07)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통화동맹의 참가는 쌍무 무역량을 52%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통화동맹 경성환율고정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0.081, 표준오차=0.018)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쌍무 무역량이 8.4%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에 반하여 연성환율고정의 경우는 추정계수(0.001, 표준오차=0.016)의 값은 0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³⁰⁾

이러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두 국가가 변동환율시스템에서 연성환율고정으로 환율제도를 바꾸는 경우 무역창출효과는 거의 없으나, 경성환율고정을 채택할 경우 쌍무 무역량이 8.4% 증가하게 된다. 또 통화동맹으로 가장 경직적인 형태의 고정환율제도를 두 국가가 선택하게 되면 경성환율고정의 경우에 비해 추가적으로 44%의 무역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

(4)열에서는 환율제도의 더미들을 제외하고 지역무역협정 참가더미를 도입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추정계수의 값(0.314, 표준오차=0.037)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의 참가는 무역량을 약 3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6)열에서는 환율제도와 지역무역협정 더미를 모두 도입한 경우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5)열에서는 경성환율고정, 연성고정환율제도 더미와 지역무역협정의 더미변수를 동시에 도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는 (2), (4)열에서 환율제도 변수들과 지역무역협정의 더미변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30) 만일 비통화동맹 경성환율고정과 연성환율고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고정 환율제도로 묶어 대분류로 하는 경우 그 추정계수는 0.034 (0.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비통화동맹 고정환율제도는 평균적으로 쌍무 무역량을 3.5%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추정계수의 값에 따르면 경성환율고정이 무역량을 약 9% 증가시키는 반면 지역무역협정의 참가는 무역량을 약 3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성환율고정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제(6)열에서는 통화동맹, 비통화동맹 경성환율고정, 연성환율고정, 지역무역협정 변수를 모두 한꺼번에 도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열의 지역무역협정 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화동맹, 경성환율고정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지역무역협정 변수는 독립적으로 유의하다. 추정계수의 값에 따르면 통화동맹은 쌍무무역량을 약 55% 증가시키며 비통화동맹 경성환율고정은 약 7.5%, 지역무역협정은 약 36% 각각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7)열에서는 지역무역협정과 경성환율고정, 연성환율고정의 변수를 모두 도입하고 이 고정환율제도와 지역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또 다른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무역 및 통화에서 동시에 협력한 국가들에서 무역창출효과가 추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경성환율고정과 지역무역협정 결합항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합항의 추정치 0.336(표준오차=0.062)은 두 국가가 경성환율고정과 지역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추가적인 무역창출의 크기가 40%에 달함을 보여준다. (7)열에서 연성고정환율과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결합항의 추정계수는 0.114(표준오차=0.070)로 나타나 10%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에 따르면 연성환율고정과 지역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쌍무무역이 12% 추가로 발생한다.

추정결과에서 지역무역협정과 각 고정환율제도의 개별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그 추정계수들의 값의 크기는 (5)열의 경우와 비교하여 줄어들었다. (7)열의 경성환율고정과 지역무역협정의 변수의 추정계수 0.063(표준오차=0.018), 0.201(표준오차=0.044)은 각각 쌍무무역량을 6.5%,

23%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추정식에 결합항들의 더미가 도입되면서 이 모형에서 지역무역협정만의 단독변수는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한 경우를 의미하게 되고, 경성환율고정의 단독변수는 지역무역협정을 하지 않고 경성환율고정을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정계수들에 의하면 어느 두 국가가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을 하는 경우 쌍무무역량의 창출효과는 23%인 반면, 이 국가들이 환율시스템을 경성환율고정으로 하는 경우 무역의 총증가는 경성환율고정의 독자적인 효과(7%)와 경성환율고정, 지역무역협정의 결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효과(40%)를 더한 70%에 달한다.³¹⁾

제(8)열에서는 통화동맹, 비통화동맹 경성환율고정을 세분하고 각 환율제도와 지역무역협정과 결합하는 경우를 또 다른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지역무역협정과 비통화동맹 경성환율고정의 결합항의 추정계수 0.339(표준오차=0.063)는 앞서 (7)열의 경성환율고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의 추가적인 무역창출의 크기와 비슷하다. 반면에 지역무역협정과 통화동맹의 결합항의 추정계수 0.250(표준오차=0.249)은 양의 값을 갖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과 통화동맹을 동시에 하는 경우의 특별한 추가적인 무역 창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고정환율제도가 지역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추가적인 무역창출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을 하면서 환율의 경성고정을 같이 하는 경우 매우 큰 쌍무무역량의 창출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정결과에서 비통화동맹 경성환

31) 비통화동맹 경성환율고정과 연성환율고정을 합하여 하나의 고정환율제도로 분류한 변수와 지역무역협정과 결합항의 추정계수는 0.248(0.053)로 나타나 비통화동맹 고정환율제도와 지역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쌍무무역량을 28%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율고정의 경우 지역무역협정과 결합하여 추가적으로 쌍무무역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반면, 통화동맹이 지역무역협정과 결합하는 경우의 추가적인 무역창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서로 상충되는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지역무역협정과 통화동맹을 동시에 한 국가 쌍의 자료 수가 전체자료의 0.2% 이하로 너무 적어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가상적으로 한·중·일간에 환율변동성을 크게 줄이는 환율제도가 독립적으로 또는 지역무역협정과 더불어 도입되는 경우 한·중·일 상호간의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표 9-4>의 제7열의 결과는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경우 각 국가간의 쌍무무역량이 23%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이 국가들이 현재와 같은 상호간에 변동하는 환율제도가 아닌 경성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다면 무역증가효과가 더욱 상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성환율고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무역창출의 크기는 경성환율고정 자체의 독자적인 무역창출효과 7%,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23%, 경성환율고정과 지역무역협정의 결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무역창출효과 40%를 포함하여 총 70%에 달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 또는 이 중 어느 두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 환율제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국가들이 신뢰성 있는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창출이 배가되면서 사회후생이 크게 증가한다. 실증분석의 자료로는 1971년에서 1997년 기간의 186개국의 총 1만 1,140개의 국가간 쌍무무역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고정 환율제도와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추가적인 무역창출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환율의 경성고정(hard-peg)을 같이 하는 경우 쌍무적 무역량의 창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경우 각 국가간의 쌍무적 무역량이 증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이들 국가들이 현재와 같은 상호간에 변동하는 환율제도가 아닌 신뢰성 있는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창출효과가 배가되면서 각 국가의 후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경우 각 국가간의 쌍무무역량이 23%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이 국가들이 현재와 같은 상호간에 변동하는 환율제도가 아닌 경성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다면 무역증가효과가 더욱 상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성환율고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 무역창출의 크기는 경성환율고정 자체의 독자적인 무역창출효과 7%,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23%, 경성환율고정과 지역무역협정의 결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무역창출효과 40%를 포함하여 총 70%에 달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 또는 이 중 어느 두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 환율제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국가들이 신뢰성 있는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창출이 배가되면서 사회후생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환율을 매우 경직적으로 고정하고 동시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 고유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을 독자적으로 안정화시키기가 어려워지면서 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증가를 고려한 순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에 맞는 최적의 환율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9-4> 환율제도와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2)	(3)	(4)
Log of distance	-1.393 (0.029)	-1.393 (0.029)	-1.387 (0.029)	-1.368 (0.029)
Log of GDP in pairs	0.976 (0.011)	0.976 (0.011)	0.977 (0.011)	0.981 (0.011)
Log of per capita GDP in pairs	0.198 (0.014)	0.199 (0.014)	0.198 (0.014)	0.190 (0.014)
Log of area in pairs	-0.130 (0.009)	-0.130 (0.009)	-0.131 (0.009)	-0.131 (0.009)
Common land border dummy	0.495 (0.156)	0.494 (0.155)	0.488 (0.155)	0.511 (0.156)
Common language dummy	0.399 (0.059)	0.398 (0.059)	0.390 (0.059)	0.408 (0.059)
Ex-common colonizer dummy	0.114 (0.075)	0.115 (0.075)	0.097 (0.075)	0.119 (0.075)
Ex-colony-colonizer dummy	2.104 (0.194)	2.103 (0.193)	2.103 (0.193)	2.088 (0.194)
Current colony dummy	0.073 (0.168)	0.073 (0.168)	0.011 (0.168)	0.096 (0.168)
Hard peg	0.095 (0.017)	0.096 (0.017)		
Currency union			0.429 (0.074)	
non-CU Hard peg			0.081 (0.018)	
Soft peg		0.004 (0.016)	0.001 (0.016)	
Regional Trade Arrangements				0.314 (0.037)
No. of Observation	168,289	168,289	168,289	168,289
R-squared	0.622	0.622	0.623	0.623
Log of distance	-1.367 (0.029)	-1.360 (0.029)	-1.368 (0.029)	-1.361 (0.029)

〈표 9-4〉 계속

	(5)	(6)	(7)	(8)
Log of GDP in pairs	0.980 (0.011)	0.982 (0.011)	0.982 (0.011)	0.984 (0.011)
Log of per capita GDP in pairs	0.189 (0.014)	0.188 (0.014)	0.186 (0.014)	0.185 (0.014)
Log of area in pairs	-0.132 (0.009)	-0.133 (0.009)	-0.132 (0.009)	-0.134 (0.009)
Common land border dummy	0.505 (0.155)	0.499 (0.155)	0.504 (0.155)	0.497 (0.155)
Common language dummy	0.402 (0.059)	0.394 (0.059)	0.403 (0.059)	0.395 (0.059)
Ex-common colonizer dummy	0.112 (0.075)	0.093 (0.075)	0.114 (0.075)	0.095 (0.075)
Ex-colony-colonizer dummy	2.093 (0.194)	2.093 (0.193)	2.089 (0.193)	2.089 (0.193)
Current colony dummy	0.082 (0.168)	0.018 (0.168)	0.080 (0.168)	0.015 (0.168)
Hard peg	0.087 (0.018)		0.063 (0.018)	
Currency union		0.436 (0.074)		0.415 (0.075)
non-CU Hard peg		0.072 (0.018)		0.048 (0.019)
Soft peg	-0.002 (0.016)	-0.005 (0.016)	-0.007 (0.016)	-0.0099 (0.0164)
Regional Trade Arrangements	0.305 (0.037)	0.310 (0.037)	0.201 (0.044)	0.206 (0.044)
Hard peg* RTA			0.336 (0.062)	
Currency union* RTA				0.250 (0.249)
non-CU Hard peg* RTA				0.339 (0.063)
Soft peg* RTA			0.114 (0.070)	0.111 (0.070)
No. of Observation	168,289	168,289	168,289	168,289
R-squared	0.623	0.624	0.624	0.624

주: 종속변수는 두 국가간 실질무역량의 로그값임. 임의효과(random effect) 추정 방법을 1만 1,140개의 국가 쌍에 대해서 1971~97년에 걸친 패널자료에 적용한 추정 결과임. () 안의 값은 추정치의 Robust Standard error임. 상수항과 연도 더미의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았음.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본래 취지인 3국간의 무역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3국간의 환율협력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율안정의 효과로서 무역증진만 강조하였을 뿐 환율안정의 다른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환율안정은 무역증진 이외에도 자본투자의 활성화나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다른 편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편익 이외에도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침해되는 등의 비용도 수반한다. 따라서 과연 3국간의 환율안정이 경제적인 순편익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율안정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의 환율공조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경우에도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환율협력으로 귀결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자유무역 전에 구체적인 환율공조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유무역체결 이후 환율공조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은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유럽의 경험에 따를 때 지역무역협정이 통화통합에 우선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Rose(2000) 등의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환율안정을 가져오는 통화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지역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통화통합을 병행하여 논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결정되어야 할 매우 실천적 과제는 통화통합에 앞서 어떤 형태의 환율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통화통합으로 갈 것인지 등이다. 현재로서는 유럽의 경험이 여타 지역에 바로 적용될 것이라는 확증은 없다. 이러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며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Bayoumi, T. and B. Eichengreen. 1997. "Optimum Currency Area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Theory and Evidence Compared." In Benjamin J. Cohen e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New Frontiers for Research*, pp. 184-2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iter, W. H. 1999. "The EMU and the NAMU: What is the Case for North American Monetary Union." CEPR Discussion Paper No. 2181.
- Chowdhury, A. 1993. "Does Exchange Rate Volatility Depress Trade Flows? Evidence from Error-Correction Mode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5, 700-706.
- Eichengreen, B. 1993. "European Monetary Unific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 1321-1357.
- Eichengreen, B. and A. M. Taylor. 2003. "The Monetary Consequences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BER Working Paper No. 9666.
- Glick, R. and A. K. Rose. 2002. "Does a Currency Union Affect Trade? The Time Series Evidence." *European Economic Review* 46, 963-1151.
- McCallum, J. 1995. "National Borders Matter: Canada-U.S. Regional Trade Patterns." *American Economic Review* 85, 615-623.
- Reinhart, C. M. and Rogoff K. S. 2003. "The Modern History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A Reinterpret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orthcoming.
- Rose, A. K. 2000. "One Money, One Market: Estimating the Effect of Common Currencies on Trade." *Economic Policy* 30, 9-45.

Executive Summary

2003 Studies on a China-Japan-Korea FTA

Inkyo Cheong *et al.*

In November 1999, China, Japan and Korea(CJK) made an official attempt to discuss stronge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Manila. Three years later, then Chinese Premier Zhu Rongji proposed the study of a trilateral FTA during the summit meeting in Phnom Penh, November 200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organized a comprehensive joint studies on a CJK FTA in 2003. The study will be continued for 3 years starting 2003. This book contains summaries of 8 research books published in 2003.

Chapter 2 of this book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a CJK FTA not only in terms of Korea's national interests, but also in terms of regional integration. First, the FTA will bring about massive economic benefits to the three countries in terms of production, trade and economic welfare. Moreover, the establishment of a CJK FTA will contribute to introducing suitable arrangements that will accelerate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It is analyzed that a trilateral FTA will be much more beneficial to all the three countries in the region than any permutation of bilateral FTA among those countries. A CJK FTA can also function as a bridge to establish the goal of an East Asian FTA, implying that the trilateral FTA should first be developed

as a form of solid economic integration.

The chapter also presents several cooperative tasks for China, Japan and Korea. In order to realize these tasks, the book sets out desirable goal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ffective strategy and the embodied cooperative tasks needed. This book recommends a guideline for seeking a CJK FTA using the concept of NAFTA-plus and a comprehensive FTA. Economic gains from the FTA should be balanced among the three countries while building common understanding on the agenda.

According to Chapter 3, Korea, China and Japan have expanded their industrial cooperation, taking advantage of the complementarity of their industrial structures, together with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However,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ountries has also increased, as the industrial structures of each country became increasingly similar. This phenomenon is taking place as Korea and China catch up with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as shown by the so-called 'wild geese-flying' model of development.

Chapter 4 provides basic information for promoting agricultu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share the agricultural characteristic of land-saving small-scale farming, which might result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developing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have some differences in factor endowment ratios and factor productivity, which tend to cause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 The competitive agricultural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Korea and Japan implies that the survival of Korean agriculture cannot be guaranteed even unde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hina and Japan are the biggest countries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respectively, as shown in Chapter 5. This

chapter suggest that, first, selecting partner countries must be considered seriously. Second, policy-making is designed to produce the best results. Third, preliminary investigations on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taken thoroughly, and any kind of problems in forming agreements must have equal footing in negotiations.

Chapter 6 examines the feasibility and to derive possible policy implications of forming a CJK FTA by analyzing trade statistics. It is analyzed to have strong incentive to be supportive of the trilateral FTA.

Chapter 7 analyzed the trade rules of Korea, Japan and China, focusing on rules of origin,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ompetition poli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Chapter 8 provides general position of Korea in financial service sector for a CJK FTA, and also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henceforth. In order to decide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FTA negotiation in financial service sector, research not only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ervice in the three countries, but also about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oreign financial companies and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Chapter 9 shows that the trade creation effect expected from the CJK FTA will be the most significant if they adopt a credible hard-peg system. Considering that the trade-creation effect of an RTA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exchange rate arrangement adopted by the member countries, discussions on an optimal exchange rate system will be important even in negotiations over forming an RTA in East Asia.

KIEP 발간자료 목록 (1997~2003. 12)

■ 정책연구

- | | |
|-------------------------------------------------------------------------------------------------------------------------------------------------------------------------------------------------------------------------------------------------------------------------------------------------------------------------------------------------------------------------------------------------------------------------------------------------------------------------------------------------------------------------------------------------------------------------------------------------------------------------------------------------------------------------------------------------------------------------------------------------------------------------------------------------------------|----------------------------------------------------------------------------------------------------------------------------------------------------------------------------------------------------------------------------------------------------------------------------------------------------------------------------------------------------------------------------------------------------------------------------------------------------------------------------------------------------------------------------------------------------------------------------------------------------------------------------------------------------------------------------------------------------------------------------------------------------------------------------------------------------------------------------------------------------------------------------------------------------------------------------------------------|
| <p>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 王允鍾</p> <p>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 王允鍾 編著</p> <p>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 金準東</p> <p>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 崔秀雄</p> <p>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
唆點 / 金鍾範</p> <p>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 李鍾華·李晟鳳</p> <p>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 王允鍾·羅秀燁</p> <p>97-08 中國經濟의 浮上和 韓國의 對應 / 李昌在 外</p> <p>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 金南斗 外</p> <p>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趙明哲</p> <p>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 鄭余泉</p> <p>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 金元鎬 外</p> <p>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 金寬濬 外</p> <p>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 趙顯竣</p> <p>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
層報告□□ / 張亨壽·王允鍾</p> <p>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況과 과제 / 李章揆 外</p> <p>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 王允鍾·金琮根</p> | <p>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
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p> <p>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成克濟</p> <p>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 王允鍾 編</p> <p>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柳在元·李弘求</p> <p>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李昌在 外</p> <p>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李炯根</p> <p>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 外</p> <p>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
안을 중심으로 / 張亨壽·李昌在·朴映坤</p> <p>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 崔秀雄</p> <p>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
向 / 徐錫興</p> <p>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 Byung-il Choi · Eun Mee Kim</p> <p>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
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 張亨壽·元容杰</p> <p>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鄭仁教</p> <p>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 金寬濬·李性美</p> <p>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 尹昌仁</p> <p>98-19 中·東歐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現況과 전망
/ 鄭余泉·崔秉熙·韓貞澈</p> <p>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 趙明哲·洪翼杓</p> |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98-21 중국 항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 全載旭·崔義炫
-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 曹琮和 編
-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 金元鎬 編
-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 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 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 曹琮和 編
-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 (IAPs)평가 / 安炯徒 編著
-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1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 李昌在
-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 鄭仁教 外
-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金益洙
-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 崔秀雄
- 99-1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2 / 黃祥仁·王允鍾·李晟鳳
-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 李晟鳳 外
-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 王允鍾 外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蔡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 金準東·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 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李明憲·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障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 鄭仁教·李景姬
-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 金準東·蔡旭·梁俊哲
-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 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 尹昌仁 外
-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 趙明哲·洪翼杓
-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 蔡旭·崔洛均
-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尹昌仁·韓宅煥·庾相喜
-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 李鍾華
- 00-16 農產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 宋有哲·朴芝賢
-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 南相烈
-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
-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金寅培·辛仁錫
-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
-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金尙謙·朴仁元
-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대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曹琮和·金于珍
-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哲·金鴻律
-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朴淳讚
-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朴淳讚
-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 宋有哲 外
-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 外
-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 시사점 / 崔洛均 外
-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 尹昌仁 外
-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旭·徐暢培
- 02-01 DDA 총점검-2002 / 崔洛均 外
-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朴芝賢·李載玉·林頌洙
-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범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高俊誠·具文謨·朴淳讚
-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 崔洛均·鄭在皓
-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魯在峯·李鍾華
-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崔允僖
-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南相烈·權栗
-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洛均·朴淳讚
-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王允鍾
-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羅秀樺
-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鄭在植·曹琮和
-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李彰洙
-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金良姬·趙炳澤
-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池晚洙
-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 權栗·金玆慶
- 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坡
- 02-17 1990년대 이후 韓·美간 무역구조의 변화 / 梁俊哲·金鴻律
-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鄭衡坤·南英淑
-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 金興鍾
-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李昌在
-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 洪裕洙
-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權·楊斗鏞·吳奎澤·金恩京
-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국제산업연관도넬에 의한 실증연구 / 李鴻培
- 02-26 북한경제백서 / 趙明哲 外
-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 申寬浩·王允鍾·李鍾和
-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 姜三模·朱尙榮
-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 洪裕洙·李彰洙·姜丁實
-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 安炯徒 外
-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략 / 池晚洙·李榮
-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洪裕洙·池晚洙·韓正和
-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 鄭仁敎·吳東胤
-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權栗·鄭仁敎·朴仁元
-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 李鴻培·金良姬·金恩志·程勳
-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曹琮和·李炯根
-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 姜文盛·金元鎬·朴淳讚·全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樺
-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 安炯徒·尹德龍
-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 경제개혁의 전망 / 趙明哲 外
-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 사회의 역할 / 趙明哲 外
-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 경제협에 주는 시사점 / 趙明哲
- 03-16 DDA 중간점검 - 2003 / 崔洛均 外
-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宋有哲 外
-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宜
-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崔洛均·鄭在皓
-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李彰洙
-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 尹美京
-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金準東·金鍾一·姜俊求
-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鄭仁教 外
-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宋有哲·尹美京·李根
-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 楊斗鏞 外
-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 申寬浩·楊斗鏞·王允鍾·李鍾和
-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 鄭仁教 外

■ 지역연구

-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 金興鍾·金良姬·朴英鎬
-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 金興鍾·李哲元·朴映坤·朴慶錫
-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

李章揆·趙顯竣·吳東胤

-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鄭在完·權耿德

■ 조사분석

- 97-01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守
-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 鄭在完
-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 李哲元
-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 徐承源
-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 鄭在完·權耿德
-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 李聖揆·崔秉熙
-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 金完仲
-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 崔義炫
- 97-10 WTO 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 / 蔡旭
- 97-11 WTO 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취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 李鎬生
-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 權栗
-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 洪翼杓
-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金琮根
-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 朴月羅
-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投資 制度 / 李炯根
-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 羅成變
-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 鄭仁教·李昌在 編著
-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 趙潤濟·金鍾燮
-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 鄭聖哲 · 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 · 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朴泰鎬 · 文字植 · 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 孫正植 · 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서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蔡 旭 · 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金裕燦 · 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李晟鳳 · 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 金琮根

00-0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 梁俊哲 · 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00-04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 安炯徒 外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 張亨壽 · 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 鄭在完

01-02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 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 孫讚鉉 · 尹眞那

01-04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 宋有哲 · 朴芝賢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金良姬 · 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 金眞梧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 尹美京 · 李性美

01-12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 洪翼杓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 姜文盛 · 羅秀燁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 朴英鎬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 宋有哲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 李奎億 · 尹美京

02-05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 영국 · 스웨덴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 朴映坤 · 尹錫明

■ Policy Analyses

00-01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is
/ Tae-Joon Kim, Jai-Won Ryou, and Yunjong Wang

00-0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Sangyoung Joo, and Doo Yong Yang

-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1 Currency Union in East Asia /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 02-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 Inkyo Cheong
- 02-03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 Sammo Kang,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4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 Chan-Hyun Sohn
- 03-01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 Sung Yeung Kwack,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 03-02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Nakgyoon Choi, Soon Chan Park, and Changsoo Lee

■ Policy Papers

-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Inkyo Cheong
-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 Honggue Lee and Jai-Won Ryou
-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 Sang-Don Lee and Taek-Whan Han
-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eds.
-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December 1997 - June 1998) / Yunjong Wang and Hyoungsoo Zang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 00-01 南北經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 趙明哲

- 00-02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 李鍾華 · 李東輝 · 趙泓植
-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 孫讚鉉 編
- 01-0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 孫讚鉉 · 尹眞那
- 01-0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孫讚鉉 編
-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 姜文盛 · 羅秀禔
-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 李晟鳳 · 沈相烈 · 王重植
- 01-06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 李鍾華
- 03-0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과제 / 李晟鳳 · 金寬濼 · 金仁夙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 97-01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 Young-Rok Cheong ed.
- 97-02 제5차APEC頂上會議의 意義와 對策— APEC연구컨소시엄 라운드테이블 / 安炯徒 編
- 97-03 21세기 韓 · 中經濟의 비전과 同伴者關係의 모색—韓 · 中修交 5주년 세미나 / 鄭永錄 編
- 97-04 러시아의 外國人 投資環境과 韓 · 러關係 / 李昌在 · 金秉熙 編
- 97-05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 Bak-Soo Kim ed.
- 98-01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 GATT/WTO 체제 50주년기념 정책세미나 / 孫讚鉉 編
- 98-02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 Won-Ho Kim ed.
- 98-03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 Mikyung Yun ed.
- 98-04 21세기를 향한 韓 · 中 · 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 / 李昌在 編
- 99-01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00-01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王允鍾 編
- 00-02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 Kyung Tae Lee ed.
- 00-03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 Chong-Wha Lee ed.
- 00-04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 Il SaKong and Yunjong Wang eds.
- 00-05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 Yunjong Wang and Hyong-Kun Lee eds.
-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eds.
- 01-02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 Hyungdo Ahn ed.
- 02-01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Hyong-Kun Lee ed.
- 02-02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 朴月羅·崔義炫 編
- 02-03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 趙明哲 編
- 03-01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 Young-Rok Cheong, Doo Yong Yang, and Wang Tongsan eds.
- 03-02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ro Kawai, and Yung Chul Park eds.
- 03-03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 Heungchong Kim ed.
- 03-04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 Chan-Hyun Sohn ed.
- 03-05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 Chang-Jae Lee ed.
- 03-06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 Yunjong Wang ed.
- 00-01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 Kihoon Lee and Wankeun Oh
- 00-02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 Byung-il Choi
- 00-03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 Chulwon Kim
- 00-04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Taeho Bark and Hwyo-Chang Moon
- 00-05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 00-06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 Sung-Hoon Park
- 00-07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 Sang-yirl Nam
- 02-01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 Byung-il Choi
- 02-02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 Yongkyun Chung and Yongwhan Park
- 02-03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 02-04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 Hongyul Han
- 03-01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 Sang-yirl Nam

■ Discussion Papers

■ APEC Study Series

- 00-01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Focussing on Non-OECD Economies of APEC / Hyungdo Ahn, Junsok Yang, and Mikyung Yun
- 00-02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 00-01 An Analysis of CO2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 Chong Wha Lee
- 02-01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 02-0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 Inkyo Cheong
- 02-03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 Junsok Yang
- 02-04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Yunjong Wang
- 02-05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2-06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Nakgyoon Choi
- 02-07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 Eui-Hyun Choi
- 02-08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02-10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 Chan-Hyun Sohn
- 02-11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 Chan-Hyun Sohn, Junsok Yang and Seung Beom Kim
- 03-01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 June-Dong Kim
- 03-02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 Jonghwa Cho
- 03-03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 Haesik Park and Yunjong Wang
- 03-04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 03-05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mproved Financial Architecture for East Asia / Yunjong Wang and Wing Thye Woo

■ Working Papers

-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June-Dong Kim
- 97-02 APEC's Eco-Tech : Prospects and Issues / Jaebong Ro and Hyungdo Ahn
-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 王允鍾·李晟鳳
-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 Inkyo Cheong
-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 李晟鳳
-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 Jong-Bum Kim
-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Sang-In Hwang
-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 Seung-Hee Han and Inkyo Cheong
- 97-09 IMF 救濟金融事例 研究 :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 金元鎬 外
- 97-10 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 李鍾華
- 97-11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 鄭鎔株
- 98-01 韓·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 程 勳·李鴻培
-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 Mikyung Yun
-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の 意義와 展望 / 金寬濤
-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 / June-Dong Kim and Sang-In Hwang
-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 Chan-Hyun Sohn etc.
-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 Chong Wha LEE
- 98-07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1] 英國 / 申東和
- 98-08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2] 인도네시아 / 金完仲
- 98-09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3] 美國 / 朴英鎬
- 98-10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4] 中國 / 金琮根
- 98-11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5] 泰國 / 權耿德
-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 Hyungdo Ahn and Hong-Yul Han
-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 金準東 外
-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 王允鍾 外
-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 Yoo Soo Hong
-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 洪裕洙
-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통관 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 / 孫讚鉉 · 任曉成
- 98-1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 / 申東和
- 98-19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 尹美京 · 朴英鎬
- 99-01 改革推進 外國事例와 示唆點 / 金元鎬 外
-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 蔡旭 · 徐暢培
-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 Inkyo Cheong and Yunjong Wang
-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 / Inkyo Cheong
- 99-05 OECD연구시리즈[3]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 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 張權鎬
- 99-06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 / Yunjong Wang
- 99-07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 Myung-Chul Cho and Hyoungsoo Zang
- 99-08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Hyungdo Ahn
- 99-0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 June-Dong Kim
- 99-10 OECD연구시리즈[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姜聲嶺
- 99-11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 Jae-Jung Kwon and Joo-Ha Nam
- 99-12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 Sung-Yeung Kwack
- 99-13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 Jong-Bum Kim
- 99-14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 Yunjong Wang
- 99-15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 Chong Wha LEE
- 99-16 OECD연구시리즈[4]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 權 栗
- 99-17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 王允鍾 · 申東和 · 李炯根
- 99-18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genda Solutions for ASEM III / Simonetta Verdi
- 99-19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 / Honggue Lee
- 99-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 Sung-Hoon Park
- 99-21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 Byung-il Choi
- 99-22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

- / Sun G. Kim and Wankeun Oh
- 99-23 Ecotech and FEEEP in APEC / Ki-Kwan Yoon
- 99-24 OECD연구시리즈⑤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尹美京 · 金琮根 · 羅榮淑
- 99-25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 Inkyo Cheong
- 99-26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s Participation
/ Jae-Wan Cheong
- 99-27 OECD연구시리즈⑥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 梁俊哲 · 金鴻律
- 99-28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 Hyungdo Ahn
-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 張亨壽 · 朴映坤
- 99-30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Inseok Shin and Yunjong Wang
- 99-31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 / Chong Wha LEE
- 99-3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
/ Yongsok Choi
- 99-3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
Yung Chul Park, Chae-Shick Chung, and Yunjong
Wang
- 99-34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port Growth
/ Sang-yirl Nam
- 00-01 Issues in Korean Trade 1999: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 Junsok Yang and Hong-Youl Kim
- 00-02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s Perspective
/ Sang-yirl Nam
- 00-03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 Jong Bum Kim
- 00-04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 Won-Ho Kim
- 00-05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 Won-Ho Kim
- 00-06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ast Asia
/ Se-Jik Kim and Mark R. Stone
- 00-07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 Moonsung Kang
- 00-08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 00-09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 Moonsung Kang
- 00-1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 Jong-Il Kim and June-Dong Kim
- 00-11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 Moonsung Kang
- 00-12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 Seong-Bong Lee
- 00-13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Sang In Hwang and In-Sok Shin
-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kyung Yun and Sungmi Lee
-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and Ivalilo Izvorski
- 02-01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2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and Yung Chul Park
- 02-03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ae-Shick Chung and Se-Jik Kim
- 02-04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Seong-Bong Lee
- 02-05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 Soon-chan Park
- 02-06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 Sammo Kang,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 02-07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 Chang Soo Lee
- 02-08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 Warwick J. McKibbin, Jong-Wha Lee, and Inkyo Cheong
- 02-10 Bailout and Conglomeration / Se-Jik Kim
- 02-11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 Chang-Jin Kim and Jong-Wha Lee
- 02-12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 Heungchong Kim
- 02-13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 Chang-Soo Lee and Soon-Chan Park
- 02-14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 Chan-Hyun Sohn
- 02-15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6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 Chang-Soo Lee and Chang-Kyu Lee
- 02-17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 Evidence from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8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 HongBae Lee
- 03-01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2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 Gyutaeg Oh, Daekeun Park, Jaeha Park, and Doo Yong Yang
- 03-03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04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 Hyungdo Ahn and Sunghyun H. Kim
- 03-05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 Sammo Kang
- 03-06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3-07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 Zainal-Abidin Mahani,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8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 / Sang-yirl Nam and Junsok Yang
- 03-09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 Chang-Soo Lee
- 03-10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 03-11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 Shin and Yunjong Wang
- 03-12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 03-13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14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ian Model* / E. Young Song and Chan-Hyun Sohn
- 03-15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s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 03-16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 Soon-Chan Park
- 03-17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 OECD 연구시리즈

- 00-01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 梁俊哲 · 金鴻律
- 00-02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 宋有哲 · 朴芝賢
- 00-03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금융 · 자본시장 / 黃祥仁 · 李炯根
- 00-0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 尹昌仁
-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哲 · 金鴻律
- 01-02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 張勝和
- 01-03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계개편에 대한 평가 / 金裕燦
- 01-04 프로스포츠와 競爭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 金元俊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 03-01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 Yao Shumei

- 03-02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朱尙榮
- 03-0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 李鍾郁
- 03-04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 安桐徒

■ 지역리포트

-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 朴英鎬
-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金恩志
-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 朴映坤
- 01-03 유럽경제통합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 정책 / 朴映坤
-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 河由貞
-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 吳東胤 · 林泓修
- 02-02 일본 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金恩志
-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 朴映坤
-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 河由貞
- 02-05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현황과 한 · 인도간 협력 방안 / 崔允壽
-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裴熿娟
-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배경과 시사점 / 權耿德
- 02-08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 증가 추이와 시사점 / 朴在旭
-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 李哲元
-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 權耿德
-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 朴馥永
· 裴嬉娟

■ 지역연구회시리즈

-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 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 鄭銀淑
-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 吳勇錫
-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元容杰
-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 李榮洙·徐煥周
- 00-05 日·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 申志鎬
-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朴濟勳
-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 蔡熙律
-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 張善德
-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 金正湜
-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 嚴久鎬
-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楊平燮
-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 金讚浣
-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 金昌男·千寅鎬
-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 高在模·全載旭
-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 辛源龍
- 00-16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尹玄德
- 00-17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李殷九
-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李滿基
-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李光勳
-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 01-08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朴明浩
-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 鮮于鍵
-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韓鍾萬·成源鏞
- 01-11 유럽연합(EU)의 중등유럽 확대 : 라켄 유럽이 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 李奎榮
- 01-12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 安錫教·許興鎬
-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李忠彦
-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程 勳
-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金鍊鐵
-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cent Development / Chang Woon Nam
-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 吳明錫
-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魏艾·范錦明·趙顯竣

보고서 장별 연구책임자

鄭仁敎

미국 미시간 주립대(MSU) 경제학 박사
대의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연구위원(現, E-mail: koreafta@empal.com)

著書 및 論文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200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2001) 외

柳寬榮

일본 히토츠바시(一橋)대학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수사
산업연구원 일본지원장, 일본연구센터소장(1990~93, 1997~98)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現, E-mail: kyhyu@kiet.re.kr)

著書 및 論文

『품목별 대일관세 철폐의 영향분석과 한·일FTA관세양허방안 연구』(공저, 2003)

『한·일 투자협정 발효로 인한 일본의 대한투자진흥효과 분석과 대응방안』(공저, 2002) 외

魚明根

미국 노던일리노이주립대(NIU) 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연구위원(現, E-mail: myongeor@krei.re.kr)

著書 및 論文

『동북아 농업구조와 농산물 교역 분석』(2003)

『방곡협정에 대한 농업분야의 대응방안』(공저, 2003) 외

朱文培

일본 쓰쿠바대(TKBU) 정책학 박사
제4차 WTO 각료회의 한국정부대표(수산분야 자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협력팀장/연구위원(現, E-mail: mbjoo@kmi.re.kr)

著書 및 論文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공저, 2003)

『한·일 FTA 추진과 수산업 부문의 정책적 시사점』(2002) 외

高日東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idkoh@kdi.re.kr)
독일 쾰 세계경제연구소(1991) 일본 게이오 대학교(2002) 초빙연구원

著書 및 論文

『남북한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편저)(1997)

“Homemade Risks: The Economic Security of Russia in East Asia.” *Russia and East Asia: The 21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Vol. 3. Gilbert Rozman, *et al.*(ed.) EastWest Institute, New York: M. E. Sharpe(1999).

姜文盛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mkang@kiep.go.kr)

著書 및 論文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공저, 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공저, 2002) 외

楊斗鏞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yangdy@kiep.go.kr)

著書 및 論文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공저, 2000)

“Economic Reform in Post Crisis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2002)

외

王允鍾

미국 Yale 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現, E-mail: yjwang@kiep.go.kr)

著書 및 論文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ntries”(Japan and the World Economy, 2004)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Beyond”(The World Economy, forthcoming) 외

政策研究 03-27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2004년 2월 10일 인쇄

2004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1197-3 94320

정가 10,000원

89-322-1072-1(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02)3460-1179 FAX:02)3460-1144
 E-mail: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B)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풀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Joint Research Series on FTA Issues 03-01

2003 Studies on a China-Japan-Korea FTA

Inkyo Cheong *et al.*

본 보고서는 2003년도에 추진된 한·중·일 FTA 협동연구 8개 보고서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편집하였다. 2003년도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한·중·일 FTA 협동연구는 2005년까지 3년 연구일정으로 수행되었으며, 첫해인 2003년도에는 3국간 FTA에 대한 정치·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산업별 현황과 FTA에 대한 시사점, 3국간 무역규범의 비교분석, FTA하의 환율메커니즘 등이 주로 분석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정가 10,000원